

인권정보자료실
R1.1.2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인권하루소식

제2247호 ~ 제2366호

합본 20호
(2003년 1월 ~ 6월)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제주 4·3에 대한 조명이 한층 더 깊어졌다. 4·3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어느 때 보더라도 한반도 전역에서 진정되고 있다. 4·3에 대한 논의가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지고 있다. 4·3에 대한 논의가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지고 있다. 4·3에 대한 논의가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지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20호

2003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20



민권운동사랑방



민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4일(화)

제 22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인권하루소식

5003년 3월 4일

(제5586호) ~ (제5302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을 이달부터 강행하자, 교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지난 28일 전교조는 '위원장 긴급지침'을 전달하고, "정부가 개인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는 인권침해와 교사에 대한 노동 통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전국의 16개 시·도 지부와 8천개에 이르는 학교분회에 '인증서 폐기 및 NEIS 관련 업무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NEIS 불복종 행동에 동참한 전국 교사들의 상황 보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만 4백여명의 교사들이 NEIS 정보입력 거부행동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교사들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은밀한 건강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보건교사들의 NEIS 거부운동도 거세어지고 있다. 영신중학교 김영미 보건교사는 "서울시 서부교육청 내 34개 중고등학교의 보건교사들도 모두 NEIS의 인증 및 정보 입력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각 상급학교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건강기록부 파일 이관도 3월말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NEIS가 시행되면 보건교사들은 성에 대한 상담 내용이나 간질 병력 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의 비밀 정보를 낱알이 인터넷에 입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정보는 교육청에서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른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너무 세세히 알게 되어 오히려 학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불복종 행동에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현장 교사들이 NEIS 저지를 위한 불복종 행동에 나선 가운데, 3일에는 전교조 교사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농성 돌입 성명을 통해, "전교조 교사들이 인증서 폐기, 정보 입력 거부 등 불복종 운동을 펴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전제한 뒤, "NEIS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NEIS 관련업무의 즉각 중단 △정보 입력 대상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교무·학사·보건·체육 영역 제외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육

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반인권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NEIS의 경우,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명백한 동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NEIS에 수집될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는 초·중·고·대·대학원에 따라 학교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가 이를 수집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다음 주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NEIS의 인권침해적 성격을 설명하고, NEIS 정보입력에 대한 동의거부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반인권 정책에 대한 저항 대열에 인권침해 당사자인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합류할 전망이다. (허혜영)

<소중한 분들을 모십니다>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행사

1993년 3월 2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목표로 우리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진보적 인권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돌을 맞이하여 소중한 분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지려 하니, 많이들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더욱 환히 빛내 주십시오.

▷ 때: 2003년 3월 4일(화) 낮 3:00 - 저녁 8:30

▷ 곳: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강당

▷ 진행순서

- <1부> 3:00-6:00 "인권운동과 나" - 10명의 활동가들에게 듣는 이야기마당
: 고상만/ 김혜진/ 류은숙/ 박진/ 윤현식/ 이규식/ 정귀순/ 정울/ 정주연/ 최정민
- <저녁식사> 6:00-6:30 (지하 식당)
- <2부> 6:30-7:00 『서준식의 생각』 출판기념회
- <3부> 7:00~8:00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식
- <다과의 시간> 8:00-8:30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두레방 인순 언니

2002년 가을 - "내가 갈비 살게! 오늘 한 번만 내가 살래. 내가 오늘 돈 있으니까..." 두레방 (기치촌여성 인권상담소/경기도 의정부 소재)에서 미술심리치료를 하고있는 박인순 씨의 기분이 매우 좋다. 두레방에서 그린 그림을 엮서로 제작했는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언니 필요할 때 쓰세요. 올 때마다 고무마, 부침개 그런 거 가져오시면서..." 두레방 식구들이 만류하지만 인순 씨 마음은 갈비집에서 한번 근사하게 '쏘고' 싶다. 땀뻑하게 번돈으로 기분 한번 내보고 싶은 것이다. 인순 씨에게 오늘 같은 날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2002년 장대비가 내리던 여름 - "비오는 날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시간이) 가질 않아. 소주 한두 병이론 잠이 안 와. 그래서 먹는 거야." 인순 씨는 알코올중독이다. "언니, 이러시면 안돼요. 술 그만 먹어요. 지금도 많이 먹었는데..." 두레방 활동가는 이러한 인순 씨가 너무 속상해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돈이 어디서 나서 술을 먹어요? 아저씨들이 2만원, 3만원 주변 산에 가서... 언니 몸을..." 나물 팔아 벌이를 하고 있는 인순 씨는 항상 가난하다. 그래서 가끔 성매매를 했다. 물론 모두 술로 허비해 버렸지만. 그런 인순 씨를 지적하자 더욱 참담해진다. 부끄럽고 서러운 인순 씨는 눈물을 보이고 만다. "너는 술을 안 배워서 술이 안 먹고 싶은 거야! 나는 술이 너무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가면을 쓰기 싫어. 난 얼굴 가면 쓰기 싫어." 우산을 받쳐 들고 집으로 향하는 인순 씨. 그녀의 아픔이 빗물과 뒤통에 뉘뉘 스텐리토 스텐리토 기어 들어가는 것만 같다.

1980년 즈음 - "대머리가 대통령 할 때 돌아왔어." 인순 씨는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갔었다. 남편은 알코올중독이었고 그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바람 나서 나한테 병도 옮기고 살 수가 없었어." 결국 그녀는 두 아이를 미국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내가 딸한테 5백달러 줬어. 그것도 시업마가 다 썼지만. 그래도 시업마는 나를 항상 반겨줬지. 그거 하나 좋았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인순 씨는 술 없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다.

1963년 허기진 어느 날 -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어. 배고프고 힘들어서 여기로 왔어. 박정희 때였는데 처음이 파주 용주골이었어. 소개소에서 1만5천원에 팔려왔어. 그렇게 된 거야." 1945년에 태어난 인순 씨는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게 된다. 전쟁고아인 인순 씨를 받아주었던 절에선 힘들고 배고파서 살 수 없었다. 18살에 도망 나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 가난을 피해 도망나온 인순 씨를 기다린 것은 더 큰 가난과 성노예의 생활이었던 것이다.

얼마 전 시사회를 가진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의 주인공 공 박인순 씨의 50여년 세월이다. 이제는 인순 씨에게 그 가을에 맞은 땀뻑함만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김정아 씨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1. 이라크전 반대 확산...더욱 추악해지는 미국 영 하원, 이라크 침공 동의안 가결... 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124명 의원들은 반대표 던져 (2.26) / 미 반전활동가들, 백악관과 상원에 반전메시지 공격 (2.26)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소속 11인, 이라크로 입국 (2.27) / 터키 의회, 이라크 침공을 위한 미군의 영토사용 허용안 부결...아랍연맹 22개국 정상과 대표들도 이라크 침공 반대 결의문 채택 (3.1) / 여중생 범대위·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시민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촛불 대행진 벌여 (3.1) // <읍저버>, 미국이 지난달 31일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의 전화·전자우편에 대한 집중감시 지시 문서 폭로 (3.2)

2. '참사 공화국' 이젠 그만!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한겨레21>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자신도 대형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답해 (2.25)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 화재 자동감지장치와 자동소화장치 설치하기로 (2.26) / 부산교통공단, 부산대 경영·경제연구소가 제출한 1998년 '지하철 1인 승무제는 사고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무시한 채 1인 승무제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 (2.26) / 정부, 전국 지하철 전동차의 내장재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하기로 (2.28)

3. '강요된 침묵'의 역사를 딛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소속 대표들과 유족대표들, 국가인권위원회 접거하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2.27) /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 김희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조선인간제연행진상조사단'이 수집한 41만3407명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전시회 열어 (2.28) / 주진구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3·1민족대회 남북 공동 학술토론회에서 일제가 조선인 840만 징발하고 100만 학살했다고 주장 (3.2)

4. 국가보안법, 그 끈질긴 유령!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학술단체협의회, 공동 토론회 열고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촉구 (2.26) / 양심수 박경순 씨, 간경화증에도 불구하고 양심수 사면·수배해제 촉구하며 옥중 단식농성 돌입 (2.27) / 서울지검 공안1부, 94년 '구국전위'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중지 됐던 이법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이 씨가 지난 8년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 목적의 구속 아닌 가 의심 제기 (2.2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5일(수)

제 22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으세요”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

학생의 학교 비판글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징계가 불러온 용화여고 사태가 10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6일에는 학교측이 허성혜 학생에게 사회봉사 재징계 처분을 내려 사태는 또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일 새학기를 맞아 첫 등교를 한 성혜를 만나 그 동안의 얘기를 나눠봤다.

상계역 부근 찻집을 들어서는 성혜의 손에 다이어리가 들려있다. 오늘 샀냐고 묻자 "고3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지난해 4월 성혜는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교육청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니 학교 비리도 단속해주고, 친구 문제도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로 일부러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학교 편만 들고 내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더라구요"라며 당시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성혜는 이 일로 지난 10여개월 동안 명예훼손 고소, 퇴학처분, 최근에는 사회봉사처분까지 학교로부터 각종 시달림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학이나 자퇴를 생각해보지는 않았느냐고 하자 성혜는 그 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하나씩 열어 보인다. "처음엔 아파도 걱정이 되어서 학교에다 먼저 전학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학교에서 아무 피해 없을 거라며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학교측이) 불리해지니까 전학 가라고 그래요. 그 동안 힘들었던 생각도 나고 학교에서도 자꾸 거짓말만 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 오기가 생겨서 전학 못 가겠더라고요." 결국 성혜는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정신과 치료

받기 시작했다. 지금도 약 없이는 잠도 잘 자지 못한다. "선도위원회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이 시켜서 했냐고 자꾸 물어보고, 제가 무슨 짓대 없는 사람도 아닌데... 막 폭언도 하고, 반성문 쓰라고 강요하고... 그러니 나중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꿈, 그런 악몽을 많이 꿴어요."

하지만 성혜는 학교가 학생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재자처럼 군림하려 든다면 언제라도 이를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학교의 권위적인 태도가 너무 맘에 안 들어요. 제발 학교가 학생을 주체적인 사람으로 인정해줬음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기

면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성혜는 지난 26일의 재징계에 대해서도 "제가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며 거부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이나 징계하는 것도 말이 안돼요. 그동안 징계 이유도 불경죄에서 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개전의 정이 없는 자, 학교교원의 명예훼손으로 계속 바뀌었어요. 징계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전학 갈 의사도 없다. "저는 이 학교에서 꼭 졸업장을 받을 거예요. 제가 전학을 가면 도망가는 게 되잖아요?"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성혜는 "학생들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권위적인 선생님보다 친구 같이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되겠다"며 올해는 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이라 한다.

더 이상 성혜의 웃음과 기대가 눈물과 절망으로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김영원)

어?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경기도교육청,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지

입학과 개학으로 들뜬 아이들의 함성이 교정을 가득 메워야 할 3월 3일, 에바다학교 학생들은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12명의 배정을 보류하자, 학교측이 재학생과 신입생의 수업일수를 맞출 수 없어 부득이하게 3월 방학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

2001년 12월부터 구 비리재단측 직원들과 일부 농아원생의 시설 불법 점거가 계속되면서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어 온 에바다학교는 그렇게 꼬박 두 해를 넘겨왔다. 구 재단측 직원들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학교장은 물론 해아래집 교사들과 학생들의 진입을 막고있는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송문용 장학사는 '파행

운영의 원인제공자가 시설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구 재단측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 재단측과 해아래집측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양측이 합의해 학교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에바다 학교측과 배정이 보류된 학생의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불법 점거나 농아원생의 폭력행위 등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정상화에는 앞장서지 않으면서, 배정 보류조치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면서 구 비리재단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학교의 파행운영을 방지하고 있는 교육청을 비판하고 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바란다

◎ 김동원 (푸른영상 대표)

"좁은 범위의 인권운동만 하기에는 바깥에서 사랑방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인 인권영화제는 인권교육에도 매우 효과적인 장인 만큼, 더 보듬어 안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곁에서 도울게요. 덧붙여 최근 인권이라는 개념이 한편으로는 낱말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바른 의미의 인권 개념이 영화제라는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정현 신부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사랑방 식구들을 보면 근본주의자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밑바닥에 말뚝 박아 놓고 요지부동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비원칙을 용납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기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모습이 장합니다. 특히 어디에도 기대려 하지 않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 소리를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 '귀한 현존'을 계속해서 지켜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지킴이 역할을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준석 (기독교방송 PD)

"10년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여전히 사랑방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 인권문제가 개선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는 역할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엄청난 큰 과거의 잔재들과 싸워왔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일상성 속에서 인권의 문제들로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가정내의 가부장성이나 아동인권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인권의 감성지수가 더 세밀한 곳에 미치지 않는 한, 인권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면서, 향상된 인권의식을 지닌 시민들과 호흡해 나가면서 더 다양한 방식의 인권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진보성을 잃지 않도록도 노력해야겠지만요."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10년의 세월동안 사랑방이 한국 인권운동의 모양새를 바꾸고 인권운동을 보편화하는 데 기여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보이지 않고, 손 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가령 재소자나 남한내 탈북자들, 군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은종복 (풀무질 대표, 후원회원)

"낮은 사람들의 어둡고 그늘진 삶을 찾아보듬고, 매일 소식을 띄워온 '사랑방'은 남녀 인권운동의 주춧돌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듯,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고 평등한 사람살이의 짙을 튀어온 사랑방 일꾼들에게 고마움의 고개를 숙입니다. 열들까지 자란 인권의 나무가 이 혹독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무력무력 자라나기를, 남과 북의 인민들이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통일을 이루는 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 정대은 (후원회원)

"올해 성당에서 사랑방이 필요없는 날이 왔으면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소식을 보면 도처에 너무 상식 밖의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취재하고, 남들 벌여놓은 일 바로 잡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이 모두가 다 수고스러운 일인데, 사랑방 식구들 고생 많으세요. 바람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이 봐도 딱딱하지 않고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인권하루소식이 더 재미있어졌으면 좋겠고, 보통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인권운동가로 만들려는 것이 인권운동의 목표일 테니까요."

◎ 최영도 변호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갖가지 인권현장으로 달려가 가슴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투쟁해 온 사랑방 식구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인권소식을 전하는 일간신문은 세계적으로도 <인권하루소식>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고 있는 사랑방 식구들에게 정말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과 인권 옹호에 인권하루소식이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단없이 인권하루소식을 더 충실하게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의표 (전교조 서울지부 인권교육국장)

"사랑방을 떠올리니 옛날 안기부 표어가 생각나네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그런데 인권활동가들이야말로, 그 중에서도 사랑방 활동가들이야말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일하시니까요. 특히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인권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실 일이 제게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랑방의 인권교육은 인권을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현장의 민감한 이슈들과 결합시켜 현장성을 담보해 내고, 인권이론과 인권 실천을 결합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권교육의 마인드를 많은 교육·사회단체들과 공유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인권교육실 인원이 더 확충하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만드는 인권교육 네트워크도 잘 가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궤도를 세운다

돌아보면 10년, 적지 않은 세월의 길을 걸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2년 하반기, 우리의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새로운 인권운동의 길을 모색하던 당시의 인권운동가들에게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어떤 지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그에 따른 외면 속에서 준비기에 벌써 '아직은 때가 이르므로 우리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패배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해 겨울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하루종일 전화 한 통화도 없던 사무실을 쓸쓸히 지키며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고 세상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취해 일순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접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인권이론은 접해보지도 못했던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진행했고, 그 해 여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했고, 활동가 1명이 경찰 공안사건에 휘말리는 등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해 9월 7일, 당시로는 최첨단 매체였던 일간 인권 팩스신문을 창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실현하지 못했지만,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그렇게 인권운동사랑방은 창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속된 정치범의 석방과 후원을 위한 사업만이 인권운동의 전부라 여기고 인권운동의 지향과 역동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도 없이 인권운동을 체제내적이고 개량적인 운동이라고 매도할 때,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해보다는 비난을 앞세울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인권상황도 많이 변했고, 사무실도 인권교육이다, 영화제다, 기획사업이다, 감옥사업이다, 연대사업이다 참으로 많은 일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한 대로가 아니었고, 잘 짜여진 사업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준식 전 대표와 활동가

들의 인권운동에 대한 헌신과 열정, 빛나는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애돌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직함, 막연하나마 세상의 진보에 인권운동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조직의 위기도 몇 번 넘기면서 이제는 대표도 사무국장도 없이 활동가들이 동등하게 조직을 책임지는 활동가 중심의 조직으로 세워졌습니다. 적지 않은 자원활동가들이 꾸준히 결합해주었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후원자들이 정성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

이제는 인권운동의 진보이론을 생산해 내겠다는 아무진 꿈을 인권운동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일들이 많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왔던 많은 단체들과 열악한 형편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어떤 것에도 반대하며, 인간이 인간을 착취 차별 억압하지 않는 진보 세상을 인권의 이름으로 건설하는 데 다시 헌신하겠다.

에도 연대를 주저하지 않는 활동가의 열정이 있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들어섰고, 사회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소수자들의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외롭게 주장하던 '말'들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0년 전과는 사뭇 다른 이 사회의 현상을 볼 때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실감하며, 그 앞에서 그 동안의 고통도, 절망도, 갈등도 모두 눈 녹듯이 씻겨 내립니다.

그러나 회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장했고 발전했으나, 새로운 인권피해자들은 꾸준히 생겨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함께 일했던 많은 이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보다 치열하게 보다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했다더라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때로는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10년의 길을 걸어온 이 자리, 다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잘 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 사회 성원 모두의 인권이 향상되고 증진되는 일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고, 어제까지 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가 이제는 제도 정치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끝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으려 합니다.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그나마 마련돼있는 인권보장체계로부터 소외받는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간의 소중한 권리들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걸어온 10년의 이 길 위에 다시 '진보적 인권운동'의 궤도를 세웁니다.

인간사회가 진보할 것이라는 믿음이 미친 헛소리가 아닌 바에야 이에 헌신하는 인권운동의 길을 우리는 다시 묵묵히 떠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영광'을 뒤로하고, 보다 겸허하게 우리는 피해자들 곁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내려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하며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진정한 진보의 세상을 인권의 이름으로 건설하는 길에 다시 우리를 헌신하렵니다. 그 길에 인권운동사랑방이 밀려들면, 그리고 그 운동에 우리 인권운동사랑방 성원들이 쓰여진다면 아무런 흔들림없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을 지켜봐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밀어주셨던 많은 분들께 지난 10년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삼천만이 남을지 모를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닦음으로써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되겠습니다.

창립 10돌을 맞이하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일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6일(목)

제 22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노동자 잡는 손해·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신종 노조과파 수단인 대명사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가압류'를 비롯한 노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해 말 노동자들에게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액이 총 2천222억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현행 노동법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양산되고 그에 따라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조 탈퇴나 노조 무력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노동법 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는 물론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과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노동자 개인과 가족·친지의 생존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단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도 완전 금지시켰다. 재산 소유권자의 이익과 사측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현행 노동법 조항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대폭 수정한 것이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정리해고나 기업의 인수·합병,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관한 파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있는 2조 5항도 손질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외의 유지·개선,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등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으로 정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나 정책 파업 등을 합법화하고 있다.

파업불참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면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 파업 참가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근거

조항이 되고 있는 노동법 46조는 '부분 직장폐쇄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조직폭력배들의 신종 유행업종이기도 한 경비용역업체가 시설보호를 명목으로 파업현장에 용역강제를 배치하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장 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전 박탈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해 결국엔 불법파업을 양산하도록 만드는 직권중재제도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날 발표된 노동법개정안은 다음주 공청회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개정투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두산사태의 해결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사흘동안 금속연맹 소속 1천여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경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내)

만화사랑방

이동수



학교괴담 -NEIS(이게 뭐 ~ 게 ?!)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얹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이 95회째를 맞는다. 1908년 미국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토해냈던 절규로부터 시작된 세계 여성들의 저항과 연대는 1세기가 가까워오는 지금까지도 산적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억압과 폭력의 문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오늘날 여성노동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의 얼굴을 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그 가운데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 비정규직이면서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해 3월부터 대형할인점 '까르푸'에서 계약직으로 일해 왔던 정향숙 씨. 지난해 9월 노조 건설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후 지금까지 복직과 노조 인정을 위한 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향숙 씨는 비정규직 여성이 처한 현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능력이란 얼마나 순종적인 노예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까르푸는 지난 5년간 정규직을 대대적으로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노동 유연화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8개 매장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 그 가운데 70%가 여성이다. 이들은 여느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온갖 차별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더구나 까르푸에서는 일정 정도의 직급에 달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이중 차별의 현실로 몰아넣고 있다. "능력이나 근속기간에 상관 없이 여성들은 언제나 승진에서 남성에게 밀린다. 3년이 넘도록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여성들이 태반인 반면, 남성들은 대개 1년 정도만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며 향숙 씨는 긴 한숨을 내뿜는다.

향숙 씨는 또 "매장 내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남성노동자들이 담배 피는 시간은 용납돼도 여성노동자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쉬는 것은 곧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관리자들에게 의한 성희롱도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노조관련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으면 점장들이 '냄새 난다'며 코를 막고 지나가거나 중지를 치켜세우며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지만,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참아야 했다"며 향숙 씨는 목을 상처를 털어놓는다.

이는 비단 향숙 씨를 비롯한 까르푸 여성노동자들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계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양육과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은 증가하는 현실에서 소득 부족분을 채우고자 노동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노동'이다. IMF 이후 '필요할 때 쓰고 불필요할 때는 버리는 노동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더욱 심화된 '비정규직화'는 이렇게 여성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차은영 교수(이화여대 경제학)의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여성 경제활동의 전망'이라는 글에 따르면, 지난 90-97년

늘어난 임노동자 가운데 남성은 64.4%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반면, 여성은 39.3%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신규 채용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대상도 바로 여성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급의 평균 50%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견노동자나 용역노동자처럼 파견·용역업체의 중간차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4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은 이러한 노동조건이나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국민연금과 고용·의료·산재보험 등 핵심 4대보험의 혜택으로부터도 대다수가 소외돼 있다.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이 5%에 불과한 현실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함께 여성들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는 현상'도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여성들이 3차 서비스업종에 시간제나 임시직의 형태로 고용되고 있는 것이다. 차교수의 글에 따르면, 2002년 9월 현재 여성노동자의 34.8%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 할인매장, 은행창구, 식당, 역이나 빌딩 화장실, 학원 등 여성노동자들은 누군가를 접대하고 보조하고 보살피는 특정 업종에 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여성부를 비롯해 정부가 여성고용의 확대를 겨냥해 내놓는 신규 일자리도 복지서비스나 보육분야 등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종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가족내 성별 노동분업의 구조 자체를 그대로 노동시장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성 위계질서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가사와 양육이라는 재생산노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부여하면서 여성 인력을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흡수하려는 정책을 세 정부 역시 승계하고 있다. 새 내각에 여성장관이 4명이나 포진되는 등 노무현정부가 성 평등적인 정부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성의 빈곤화와 차별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그에 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이라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사회진보연대 송강현 주 씨는 "시장은 결코 젠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성별 분업과 노동에서의 성별 위계,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화 경향,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는 손도 대지 않는 노무현 정부의 성 평등 정책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여성들은 지금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비정규직화와 성별 노동분업에 맞서 스스로를 저항주체로 형성하지 않으면 안될, 힘겹지만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배경내/허혜영)

제1회 수도권지역 학살지 순례행사 "잃어버린 기억, 학살의 현장을 찾아"

- 때: 3월 8일(토)~9일(일)
- 순례지: 고양 금정굴/ 태극단 묘역/ 강화도 찬우물·감곳둔대 학살지
- 참가비: 1인당 35,000원
- 주최: 학살규명 사회단체협의회
- 접수: 3월 7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WTO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교육·사회단체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WTO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을 열었다. WTO교육개방 양허안은 교육 부문을 외국자본에 어느 단계까지 개방할 것인가를 답하 우리 정부가 WTO에 제출하게 될 개방계획서다. 이 양허안을 기초로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문의 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적인 교원노조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교육개방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를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공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한 개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이기에 때문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부문을 상업적 논리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나아가 발제자들은 “교육개방은 대세이며, 국제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WTO 사무국과 부자나라들의 주장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사실왜곡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전개되어 왔던 ‘반세계화 운동’의 사례는 “오히려 교육개방 반대”가 전 세계적인 대세임을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교육개방 반대 움직임이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교원노조 위원장 로제 페라리 씨에 따르면, 벨기에에는 2001년 5월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연합 교육담당 각료회의에서 “교육은 공공의 재산이자 공적 책임성을 가진 분야로서 설립자와 학생들이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교육개방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 외에도 교육개방 반대 행진은 이어졌다. 2001년 9월에는 전 세계 5천5백개의 고등교육기관들이, 2002년 10월에는 이탈리아 브릭센에 모인 유럽 문화·교육장관들이,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유럽연합이 모두 ‘교육, 문화 등

서비스분야의 무역협정인 GATS 협상에서 교육 등 공공분야는 개방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포럼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전 세계적인 대안 마련과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GATS에 관한 서울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등 18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WTO교육개방음모본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교육개방 저지 시국선언’을 발표, △이달 말로 예정된 양허안의 제출 중단 △교육개방 관련 협상 내용의 공개와 교육개방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김영원]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운동가의 희망 찾기 - 『서준식의 생각』

지은이; 서준식/ 펴낸이; 아간비행/ 2003년 2월/ 399쪽

천 가지 절망이 있더라도 한 가지 희망이 있으면 인간은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인권운동가는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까? 절망하지 않기 위한 한 인권운동가의 희망. 우리 시대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그 희망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서준식의 생각』은 지난 10년간 신문, 잡지, 인권하루소식 등에 실렸거나 발표되지 않았던 서준식 씨의 글들을 한 권으로 묶어놓았다. 책에는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의 이슈들을 끊임없이 보듬어 안으려는 한 인권운동가의 감수성과 세상을 바꾸고자 악전고투해 온 그의 고동이 담겨있다. 또한 날카로운 송곳으로 두툼한 마분지를 뚫는 것처럼 난관에 부딪친 인권운동을 살리기 위해, 혹은 꺼져가는 인권운동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감행한 용감한 글쓰기를 볼 수 있다. 나아가 그의 글에는 장기수, 보안관찰법, 유서대필사건, 아동권, 한총련, 운동사회내 성폭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현장에서 올라오는 인권문제들을 그 특유의 특색으로 이겨내려는 끈끈한 희망이 녹아 있다.

“나의 글쓰기는 곧 나의 인권운동이었다. 이것을 고집스럽게 강조하는 까닭은 실제로 내가 운동가로서 운동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글을 써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근육’이 ‘입’이나 ‘잔머리’에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 그릇된 세태를 용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이 왜소한 시대, 서준식의 글쓰기는 행동을 넘어서는 말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준식의 생각』은 글을 위한 글이 아닌, 그의 행동으로 떠받치고 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최은아)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세계여성의 날 95년의 역사는 전세계 여성들이 군사주의와 전쟁에 끊임없이 저항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에는 각국의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제국주의전쟁에 항의했고, 이어 1915년 멕시코와 1917년 이탈리아, 1918년 오스트리아, 1936년 스페인, 1979년 칠레, 1988년 필리핀에서는 군부독재정권을 향한 여성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974년 3월 8일에는 베트남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여성 베트남들이 미국의 침략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맞은 올해 세계여성의 날에도 전쟁에 반대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거센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여성들은 이라크에 전원이 감돌기 시작할 때부터 전쟁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들을 벌여왔다. 특히 전세계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며 전쟁의 공포로 힘써인 이라크 땅으로 떠났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지난 5일 여성해방연대와 각 대학 여성단위들이 모여 개최한 ‘이라크 전쟁,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여성주의에 기초한 반전평화의 의미에 관한 열띤 논의가 전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여성해방연대의 무영 씨는 전쟁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상적 억압과 폭력이 극단적으로 증폭되는 상황’으로 해석한다. “전쟁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자국 남성의 사기진작을 위해, 점령국 남성이 점령당한 국가를 모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되고 착취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은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의 연속선 위에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무영 씨의 지적은 우리 역사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다. 일제하에서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유린되었고, 일본 여성들 또한 미래의 건강한 일본제국의 군대를 생산하고 길러내는 우생학적 전략에 동원된 바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비단 전쟁시기에만 이런 폭력에 희생되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긴 역사 속에서 한 순간도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발독재시기에 여성의 몸은 이른바 ‘매춘관광’이라는 것을 통해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화되었고, 전시가 아니어도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미군의 국내주둔에 대한 대가로 바쳐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주먹에 피멍이 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 폭력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단지 ‘여성이 전쟁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성의 반전운동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일상적인 억압과 차별에 맞선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여성들의 반전평화운동을 퇴색시킬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영 씨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

대한다는 말에서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전쟁’을 단지 무력분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화를 사랑한다거나 여성성의 본질이 평화친화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고 보는 관전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러한 주장들은 지금까지 여성에게 강요되어 온 사회적 성역할을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총성이 울려 퍼지는 무력분쟁 상태’로만 규정하지 않고 일상적 폭력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정의할 때, 비로소 평화의 개념도 단지 ‘총성이 멈춘 상태’를 넘어 억압받는 약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여성,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들의 생존 현장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무영 씨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다른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에 저항하고 이를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여성주의자들은 ‘담담한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단지 반전평화시위를 통해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현지 이라크 여성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라크반전평화팀으로 현지에 가있는 여성주의자들은 개전이 되면 난민구호활동을 통해, 현지 여성들과의 연대 위에서 전쟁의 잔혹한 실상을 알려내고 그와 동시에 그 사회의 억압적 질서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반전평화라는 하나의 목소리 속에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영 씨는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집해 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반전평화의 운동과정에 평화적이고 변혁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반전을 이야기하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이 차별 받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정신대는 민족의 수치니까 떠날리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전평화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집단들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일상이라는 전쟁 상황과 그것이 극대화된 무력분쟁이라는 전쟁 상황 모두에서 이용되고 착취되고 학살당해 왔다. 여성들이 이러한 일상화된 구조적 폭력을 넘어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구성해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허혜영]

3·8 여성연대 마당들

- ▶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무지개 시위 2003: 다름으로담은 여성연대 주최/ 2시 인사동 남인사문화마당
- ▶ 여성노동자 전국경기대회: 한국여성노동자회의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 9월 1시 관악산 주차장내 광장(서울)
- ▶ “여성, 여성에게 반하다” 문화제: 여성해방연대·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주최/ 7시 중앙대
- ▶ 한국여성대회: 한국여성연합 주최/ 1시 대학로/ 시민난장, 퍼포먼스, 퍼레이드 등 각종 문화행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8일(토)

제 22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7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가 협과의 면담에서 '4월중 양심수를 석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말기 간경화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간 목숨을 건 옥중 단식투쟁을 해온 양심수 박경순 씨가 단식을 접었다.

이에 앞서 지난 3·1절 새 정부가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음에 따라 박경순 씨에 이은 여러 양심수들의 옥중 단식투쟁과 가족들의 교도소 앞 길거리 농성, 그리고 뒤이은 수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의 양심수 석방 촉구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민가협이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출한 60명의 양심수 명단에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빠져있어, 사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당연히 양심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원칙적으로 이들 역시 양심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들의 명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양심수 석방 대열에 포함시키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6일 민변이 발표한 성명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양심수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석방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같은 날 감금실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민변이 '1년 6개월 이상 복역중인 455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한해서만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민변 김인회 사무차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아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전면 석방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우선은 병역거부 사범간의 형량 차이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민간법정에서 1

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있는 반면, 그 이전에는 모두 군사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년6개월 이상 복역자들부터 가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사회운동진영 내부에서 양심수에 대한 일치된 개념과 공통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주후 양심수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혜영]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밀실에서 위원 선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인권과 관련한 활동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인을 내정하였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제5항은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원 자격을 규정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권위원은 진정사건을 심의·결정하고,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인권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철학과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위원들의 치열한 고민 가운데 나오는 결정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들을 개선하는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어떤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들을 인선하다 보니 위원들 대부분이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다. 게다가 지난번 청와대는 과거 반인권 전력을 가진 검찰 출신 인사를 밀실에서 인선하여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그 인사는 위원회 회의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한 채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인권단체들은 위원들의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인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런 위원 선 임 원칙이 무시된 채 자질 없는 위원들을 청와대와 정부가 낙점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는 강렬한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새 정부의 인권개혁 의지가 불신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 여성과 장애 <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역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최근 성남시 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19살의 두 장애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 감금과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지체장애'를 가진 한 여성은 친구들의 따돌림과 구타를 견디다 못해 가출,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한다. 또 다른 정신지체 장애여성은 남들보다 몇 배나 싼값으로 팔려온 후,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업주와 연계된 조직원들(속칭 '삼촌')들로부터 분노까지 먹이는 상습적인 폭력을 당해 왔다. 이 사건은 장애여성이 처한 '잔혹한' 현실을 응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라고 보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라 전체 장애인을 450만, 장애여성은 그중 45%인 2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말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수는 총 120만 정도, 그중 장애여성은 40만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듯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은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차별에다 일상적 성폭력까지

장애여성들은 장애인이자 여성으로서 이중적인 차별의 굴레에 놓여있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 중 남성은 41.4%인데 반해, 여성은 67.7%에 달한다.

여기에서 장애여성은 성폭력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대다수의 성폭력이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 2000년 강릉에서 마을 남성 7명에 의해 7년간이나 성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밝혀진 정신지체 장애여성 김모 씨의 사례는 장애여성,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정신지체나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비열한 폭력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원래 개가 밝힌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는 "특히 어려서부터 성폭력을 당해 온 정신지체 여성들은 과자부스리기 같은 대가를 받으면서 그것이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이들에 대한 성교육과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거리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들어 온 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커녕 오히려 때고 욕하는 부모들도 많다. 박 대표는 "많은 어머니들이 장애아를 낳은 게 모두 자기 탓이라 여기고 있고, 남편과 친척들로부터도 그런 취급을 당한다. 그러한 죄의식이 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중증장애 여성의 경우도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성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하는 예가 부지기수다. "중증장애 여성에게 그 사람들은 자신을 밖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한다. 더구나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가족을 떠나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박 대표는 말한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장애를 가진 딸을 집안에만 묶어두는 부모들도 많다. 박 대표 역시 초등학교 2학년때 학교를 그만둔 이후 25살이 되어서야 바깥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주 부산에서 29살이 되도록 한번도 바깥에 나가 본 적 없는 한 장애여성을 만나고 온 후, 계속 마음이 무언가에 짓눌린 느낌"이라는 박 대표의 눈가에 눈물이 여린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부정당해

장애여성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장애인으로서만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도 장애여성에게는 또 다른 역압이 된다. '영화 <오아시스>에서처럼 장애 여성들이 천사 같은 존재로, '사회 정화적'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는 이유는

장애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장애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장애여성의 존재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왜곡, 역압하는 힘으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장애여성의 출산, 양육,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박 대표가 고집스레 여성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 '여성'이라는 개념을 고집하고, '장애'를 가진 여성의 독자성'에 주목하는 이유다.

"장애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나는 결혼 못할 사람, 다른 여성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주입받고, 나중에는 이것이 스스로에게도 내면화된다. 초경을 시작할 때 가족들로부터 받는 첫 반응 역시 '에도 못 낳을 게, 시집도 못 갈 게 이게 뭐냐'라는 식의 반응이다. 그런 반응을 접하며 장애여성들은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된다"고 박 대표는 말한다.

그렇게 장애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끊임없이 부정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힘들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다. "장애여성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이 겪은 역압의 경험들을 드러내고 스스로 표현하도록 만드는 것부터가 이미 운동"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운동사회 내부에도 폭력은 존재

운동사회 내부에서조차 장애여성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장애남성을 보조하는 부차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얼마 전 알려진 장애인이동권대 전 사무국장인 엄모 씨에 의한 장애여성 성폭력 사례 역시 운동사회 내부에 장애여성을 동등한 한 인간이자 여성으로서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그게 곧 운동이 되더라"는 박 대표의 말은 장애여성이 처한 전쟁 같은 잔혹한 일상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장애여성에게도 삶은 전쟁이 아니라 존귀한 삶 그 자체여야 한다. 이는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겪는 이중 삼중의 역압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경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반인권성을 국가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0일 인권위가 공개한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피보안관찰자, 처분대상자 등 보안관찰대상자 5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제도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참살없는 감옥'으로도 불리는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사상범들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에게 2년간의 보안관찰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 처분기간은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이 보안관찰제도가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정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사상·양심의 자유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침해하는 한편,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출소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관찰처분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들은 출소 직후부터 경찰의 신고압박과 과도한 동태파악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관찰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도 △준법정신이 희박하다 △이혼 후 재혼하지 않고 있다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제기했다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됨으로써, 결정사유 자체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러한 내용은 '보안관찰철폐모임'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과 보안관찰처분 피해자들이 토론회나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해 온 바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안관찰법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를 통해 서민 그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결론지은 다음, 폐지에 우선하여 △보안관찰 처분 사유의 명확화 △법원을 통한 처분 결정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의무 폐지 △보안관찰 기간의 제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재범방지조치 조항의 삭제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는 보안관찰의 전반적 현황과 전체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조사, 89년 제정 이래의 악용 실태, 보안관찰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 등 법 자체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보안관찰제도의 위헌적·반인권적 성격을 인정한 이번 인권위의 판단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권고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배경내)

<알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 3월 11일(화) /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주요 일정)

- 10:00-12:30 각국의 병역거부 현황 및 증언 : 이스라엘, 유고, 한국
- 14:20-15:20 <기조발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최근 현황과 전망
- 안드레아스 스펙 Andreas Speck (반전인터내셔널)
- 15:30-17:30 <토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 기본발제 : 제임스 라일리 James Reilly (미국천우봉사회)

■ 3월 12일(수)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요 일정)

- 10:00-12:00 <기조발제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역사
- 레이첼 브렛 Rachel Brett (Quakers)
- <기조발제 2> UN, 양심적 병역거부권, 그리고 대체복무제도
- 루씨에 비르스마 Lucie Viersma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 13:30-15:30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 독일/ 대만
- 15:45-16:30 패널토론 :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장 (각 정당)

◎ 주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미국 천우봉사회

○ 현상희의 인권이야기 ○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NEIS가 새 교육부총리의 유보선언과 함께 또 한번 논란이 되고있다. 이 '국가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와 교사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고 이를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이 정보화의 시대에 인권과 민주화의 요청이 관료적 능률지향주의에 의해 얼마나 손쉽게 무시될 수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실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심각하다. 거의 불법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정보수집의 한계라 할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s)'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집하는 교육관료들의 반인권적 독단에는 두 손 들지 않을 수 없다. 교사의 재산이나 징계형별 등 기존의 종이문서에서 보관하던 정보-이 또한 '적법'한 정보수집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사회단체 가입, 결혼일자, 생활수준, 종교 등 한 개인의 양심과 신념, 생활방식까지 추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토록 한 것은 관료적 편의주의의 수준을 넘어 교육관료들의 권력의지까지 드러내는 폭력적 조처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내역, 건강상태, 유전병력 등 생활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묶어 관리하고자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히틀러의 광기까지도 떠오를 만큼 섬뜩해진다.

여기서 보안장치가 완비되어 있다는 변명은 은폐·엄폐의 미봉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집중의 문제는 '해킹'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국가의 정보이용·통제에서 나온다. 개인 신상정보가 법원의 영장이나 증거개시명령, 행정편의주의적 법령 등의 법적 수단에 밀려 공개되어야 할 때, 혹은 '통치' 목적을 위하여 보안통제권을 가진 어느 국가기관의 비밀작업에 의하여 가공될 때, 그것이 가지는 파괴력은 이 교육관료들의 입에서는 결코 실토되지 않는다.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인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등에 업고 전체 사회를 관료통제하고 중국에는 식민화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NEIS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교사·학생·학부모가 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대가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물적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라고 하는 정보권력자에 대해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래서 교육부총리의 유보결정은 교육정책의 혼란을 야기하는 '실익은 말'이 아니라 교육부문에서 인권과 사회민주화를 실천하는 위대한 결단이 된다.

(현상희 씨는 건국대 법대 학과장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1. 세계 여성이여, 억압과 차별에 맞서라!
95회 세계여성의 날 맞아 '신자유주의와 여성', '전쟁과 여성' 등 다양한 토론회 열려(3.3-3.5) / 세계 각지의 여성들 대규모 반전시위 벌여(3.8) / 제1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성매매방지·여성예산확대·반전평화 촉구(3.8) / 남·북여성,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반도 반전평화 선언문' 공동 발표(3.8)

2. 이리다 정말 전쟁 날라...
미·영 등 세계 각지 청소년들, 이라크 침공반대 시위 열여(3.5) / 미 부시, '며칠 안에 이라크 침공' 시사(3.6) / 터키, '미군 영토사용 허용안 의회 재투표' 안보리 표결 이후로 연기(3.6) / 이라크 이슬람단체 대표들, "후세인 제거돼도 미군정 거부" 밝혀(3.6) / 미·영, 이라크 침공 수정결의안 제출...이라크 무장해제 시한 17일로 못박아(3.7) / 유엔무기사찰단, "이라크 핵·생화학무기 증거 없다"고 보고...미·영 정보당국이 제시한 이라크의 우라늄 구입 시도 근거없다며 날조 가능성 제기(3.7) / 유럽노조 연맹, 14일 유럽전역에서 평화적인 이라크 무장해제 지지 동맹파업 벌이겠다고 밝혀(3.7) /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미·영 결의안 지지 담화문 발표(3.9)

3. 4월 양심수 석방 어디까지 될까
민변, 양심수 석방 촉구성명 발표...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양심수의 한 유형"이라고 밝혀(3.6) / 민변·민가협, 강금실 법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양심수 사면과 1년6개월 이상 복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형집행정지 건의(3.6) /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민가협과의 면담에서 "4월중 양심수 석방" 확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는 미지수... 8명 양심수들 옥중 단식농성 중단(3.7)

4. NEIS 저지운동 힘 받는다
전교조 교사들, 위원장 긴급지침 따라 NEIS 업무거부·인증서 폐기...교사 30여명 NEIS 중단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접거 농성 돌입(3.3) / 교육부, 기자회견 열고 '실시 강행 불가피' 재확인(3.6) / 윤덕홍 교육부총리, <한국방송>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연결에서, "NEIS 시행 문제 있는 것 같다"며 유보 가능성 시사(3.8)

5. 교육, 함부로 내다 팔 수 없다!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시한 3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 'WTO 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 확인(3.6) /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교육개방 저지 시국선언' 발표...양허안 제출중단과 협상내용 공개 촉구(3.7) / 사회저명인사 33인, 교육개방 반대 철야농성 돌입(3.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12일(수)

제 22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한국판 아우슈비츠’는 무너질 것인가?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놓고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2개 민간단체는 11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의 출범을 선언했다. 지난 80년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보호법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민간단체연대구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해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불씨를 지핀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이외에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 동안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보호법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송감호소 출소자들도 참석했다. 5년간의 감호를 마치고 지난 1월에 출소한 김모 씨는 “감호기간 동안 배운 것은 세상에 대한 더없는 증오와 분노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호기간 동안 독학해서 학사학위를 따고 2개의 자격증을 땀지만 소속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독려하거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힘겹게 딴 자격증도 워낙 옛날 기술들이어서 사회에 나오니 모두 쓸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향후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토론회와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한편, 청송감호소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감호자 백서발간이나 출소자 증언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송감호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 지급 △서신 검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애초 이번 헌법소원에는 약 500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청송감호소측의 위압장 배포 방책로 청구인이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청구인단이 모집되는 대로 2차, 3차에 걸친 헌법소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혜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최근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그리고 미국천우봉사회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랫동안 병역거부운동을 전개해 온 해외활동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오전 세션에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얼마 전까지 전쟁을 치른 세르비아의 병역거부 현황이 소개돼 흥미를 끌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온 활동가 야미르 지볼 씨는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상황의 폭력에 반대하는 양심에 따른 ‘완전병역거부자’에 한해 형식적으로나마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팔레

스타인 영도점령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반역행위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르비아의 이고르 세케 씨는 “세르비아 헌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체복무기회는 군대 내 비전투분야로 제한되어있다. 게다가 정부는 전쟁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운동을 나토나 미국에 협조하는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두 활동가 모두 “병역거부운동이 반군사주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병역거부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졌다. 먼저,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국가방위에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하는 질문에 병역거부 활동가들은 “방어를 위한 군대라

2면으로 이어짐

‘한국정부 미국지원 명분없다’

인권사회단체, 미 이라크전 지원요청 거부 요구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최후통첩’으로 전쟁 발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미국 지원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정부가 미국이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사 표명과 의료지원 등을 요청해 음에 따라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킹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 방침을 굳히려 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놀음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이라크 시민의 피를 대가로 세계 유일 패권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지지·지원 요청을 거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전쟁 지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내뱉은 나 보좌관의 즉각 해임도 함께 요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청와대와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반도에서는 전쟁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없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배경내)

1면에서 이어짐

도 그것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 의해서는 평화가 확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평화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양심에 입각한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반전 인터내셔널의 안드레아스 스펙 씨는 “개인의 양심을 국가가 심판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한 개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지에 관한 결정은 그 사람만이 내릴 수 있으며, 국가는 다만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여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출소 후에도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유엔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케이크국제사무소 레이첼 브렛 씨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고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차별실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오늘은 ‘대체복무제도의 사례와 한국의 가능성’을 주제로 회의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해혜영)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

11일자로 개편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자료실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자료실이 인권위 관련 신문기사나 보도자료, 법령들을 단순히 모아놓았다면, 개편된 자료실은 그동안 수집해온 인권서적의 목록을 공개하고 인권위가 생산한 자료의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한결 더 내용성을 갖췄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인권자료실은 인권위 건물에 위치한 오프라인 인권자료실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인권도서관으로 평가된다. “인권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자료 제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사서 최호선 씨는 인권자료실이 ‘인권위가 인권 옹호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인권자료실은 인권 관련 국내외 단행본, 정기간행물, 세미나 자료, 시디롬 등 총 6천여건의 자료를 수집해놓은 상태다. 이중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 검색이 가능한 자료는 총 4천5백여건. 앞으로 인권자료실은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공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심민석 인권자료실 실장은 “인권자료실이 인권위 내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열린 인권전문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권자료실을 직접 방문하는 일반 이용자 수는 일주일에 5~6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적은 것은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인권전문도서관이라는 외양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못해 이용자들의 발길을 끄는 요소가 부족한 탓도 크게 작용한다. 즉 단지 6천여건의 자료가 집적되어 있을 뿐, 전문적인 인권분류체계에 따라 자료들이 분류·정비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 자료실만이 갖는 전문성이나 독자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자료실은 양적 규모 확장에 집착하기보다 ‘인권전문도서관’으로서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또 인권단체들이 운영하는 민간 자료실이나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인권전문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자료실의 특성을 활용해 민간단체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예를 들면 주요 인권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판결문, 국가 차원의 인권관련 통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위의 인권자료실은 다른 도서관들이 인권자료를 수집·배치함에 있어 하나의 모델로서 기능해야 한다. 또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얻고자 하는 국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료실인 만큼, 인권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은아)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11일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발표문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도전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짚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펙 씨의 글을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1983년 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를 결정했을 당시, 서유럽에는 미국의 신형 핵미사일이 배치되고, 이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대규모 벌어지고 있었다. 나에게 병역거부는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행위이자 새로이 불붙기 시작한 동서 군비경쟁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다. 또 나의 병역거부는 군대를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징병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병역거부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반군사주의 행동이다. 병역거부를 선택한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반면)인권적 접근은 이보다 훨씬 제한적이어서 탈군사주의화와 사회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도 있어야 한다.

◎부분적 성공-병역거부권 인정

1921년 반전 인터내셔널이 설립될 당시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는 덴마크와 스웨덴뿐이었다. 그러나 1998년 조사에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96개국 중 30개국이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불행하게도" 대체복무는 병역거부의 자연스런 귀결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전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국가의 권리를 부정하며, 전시에 수행되는 대체복무는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체복무는 전쟁체계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징병에 대한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징병제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가 제공되는 상황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 대체복무는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국제적 봉사과 평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병역거부 운동 상황

병역거부 운동의 전통적 활동기반은 유럽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군부독재가 종식된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병역거부권은 아직 매우 새로운 개념이다.

조직적인 병역거부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시민사회의 존재이다. 또 병역거부권은 종종 많은 교육을 받은 중류층의 개념이기도 하다. 반면 가난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은 인권적 접근과 반군사주의적 접근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나가야 한다.

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고 있다.

◎과제 1: 병역거부와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다. 결의문들은 또 언제든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가 존재한다. '진실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가'를 국가가 판단할 수는 없다. 대안으로 제시된 대체복무 역시 기본적으로 병역의 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유엔 인권체계는 아무런 강제력을 갖고 있

지 못하다. 그러나 유엔 결의문들은 첫 징집 영장과 함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설명서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유엔의 논리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

◎과제 2: 병역거부와 반전

운동의 성과들은 늘어났지만, 정치적 의지를 가진 병역거부자들이 주목하는 정치적 목표, 예컨대 징병제의 소멸이나 전쟁에 대한 대중적 저항,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사회적 변혁 등의 목표 실현은 요원한 상태이다.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한 가지 명확한 목표는 징병제 혹은 모든 형태의 강제징집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근래에도 징병제 폐지 요구는 종종 군 현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따라서는 안된다.

우리는 병역거부를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의 일부로 만들고 다른 반전단체들과 연대해 나가야 한다. 또 인권단체들과도 연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적 접근과 전쟁에 반대하는 반군사주의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접근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병역거부의 핵심은 사회적 변화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 의해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하다.

◎과제 3: 정치적 병역거부운동 조직
우리는 영웅이나 순교자를 필요로 하거나 원치 않는다. 우리는 책임을 갖고 역을 배양해 가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힘있는 운동을 원한다.

인권적 관점에서 병역거부권은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병역거부를 도모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징병대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과 이성, 적극적 지지를 얻기 위해 군대와 싸워야" 한다. [발췌 요약: 배경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13일(목)

제 22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두산, "개인 손해·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사측의 휴업 위협과 창원지법의 시신 퇴거 처분결정, 이에 맞선 금속연맹의 '1천 결사대' 파견과 대규모 연대파업 예고로 극한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 12일 오전 6시, 두산중공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는 고 배달호 씨가 사측에 의한 노동조탄으로 분신한 지 63만의 일이다. 지난 10일 창원 현지를 방문한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직접 중재로 3일간의 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뤄진 이번 합의에는 그 동안 노조측이 주장해 왔던 요구사항들이 상당수 수용됐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의 완전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40%만 적용 △파업으로 인한 해고자 18인 가운데 5인의 우선 복직 △지난해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임금 등 손실분의 50%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 등이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애초 개인·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해 47일간의 합법파업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노조측이 수용을 거부해왔던 노동부 중재안보다 크게 나아간 것이다.

두산중공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되자, 민주노총은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 해결을 계기로 노조원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동원한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고 배달호 노조원을 분신자살로 몰고 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현장에서 뿌리뽑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가압류가 모두 취하됨으로써,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가장 강경한 입장이었던 두산측이 손해·가압류를 취하함에 따라 다른 사업장이 취하 거부를 고집할 명분을 잃게 됐다"며 두산의 사례가 전국 50개 사업장의 총 2천2백여명에 이르는 손해·가압류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내용에서 몇 가지 아쉬움도 남는다. 손 교육선전실장은 "조합비 40%에 대한 가압류가 여전히 남아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해고자 13인 복직문제도 아직 합의되지 못해 향후 노사대립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한편 손해·가압류 남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의 개정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선수 변호사는 "두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노동탄압 수단으로 손해·가압류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있다"면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적대시하는 사측의 태도나 형사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법원의 태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하고 개정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 손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 안에서도 손해·가압류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이와 관련한 노동법 개정은 희망적"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고 배달호 씨의 장례식은 14일 오전 8시 발인식을 거쳐 노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배경내)

만화사랑방

이동수



완전히 뿌리 뽑게 되기를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12일, 이틀째를 맞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독일병역거부자지원연대의 페터 토비아스 씨는 "독일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며 발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1949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전쟁을 돕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고, 지금은 병역거부 신청자의 90%가 대체복무 승인을 받는다.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수상이나 장관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병역거부 승인절차가 더욱 간소화돼, 신청자들은 구술 절차 없이 '전쟁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토비아스 씨는 "그러나 서류심사 역시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국가가 심판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며, 독일의 병역거부운동이 양심의 자유의 온전한 보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우려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토비아스 씨는 "유럽연합이 냉전이 절정을 이룬 1977년 병역거부권을 승인하고, 냉전이 계속된 1987년에도 병역거부에 관한 법제 마련에 나선 사실에 한국정부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역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2000년 초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2만5천여명에 이르는 대만의 대체복무자들은 현역복무자보다 4개월 긴 기간동안 재해구조, 사회복지·교육·환경보호 봉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만병무청 부청장 천 타이 리 씨는 "대체복무 실시는 대만의 국제적인 위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 안정과 환경보호, 민중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 패널로 초청받은 개혁국민정당, 사회당, 민주노동당도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불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루시에 비에르스마 씨가 참석해 "한국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령 등을 제검토하도록 요구한 200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미 89

년 사상·양심의 자유의 합법적 행사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특히 89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강제투옥 금지'를 권고했고, 이어서 98년에는 대체복무대상자를 결정할 때 '병역거부 행동이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은 독립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특정한 신념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해 하루빨리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제회의는 이날 막을 내렸다. 오랜 병역거부운동의 역사를 함께 해 온 해외활동가들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과연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혜영]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도 폭력 연행까지

경찰이 1백일을 넘어서고 있는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여중생 범대위(아래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관계자들까지 강제 연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종로경찰서는 범대위 관계자 8명에게 "지난 12월부터 광화문 소공원에서 개최한 촛불 시위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12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소환장 발부는 그 동안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평화시위를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투경찰 2백여 명이 이들을 둘러싸고 가는 길을 막아 결국 기자회견은 경찰청에서 1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경찰의 폭력은 계속됐다. 범대위 대표단이 경찰청 장과의 면담을 위해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은 "즉각 해산" 명령과 함께 병력을 투입, 참가자들을 한 사람씩 때내 사지를 들고 강제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평화적이고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막는 것도 모자라 강제 연행까지 하는 게 무슨 참여정부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불법집회가 아니고 뭐냐"며 강제 연행을 정당화했다. 결국 경찰의 폭력 연행 과정에서 옷이 찢기고 안경이 깨지는 등 참가자들의 부상이 속출했고, 이 중 25명은 남부경찰서와 노랑진경찰서로 이송돼 지금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일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자의적으로 불법집회로 규정해 폭력을 휘두르고 공격적으로 진입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촛불시위 자체를 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찰이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도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한테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잡아가는 것은 너무 기막힌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12일 오후 10시 현재,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마친 범대위 관계자 150여명은 노랑진서에 이어 남부서에서 항의 방문을 진행 중이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14일(금)

제 22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제회의의 주최측과 해외 참가자들이 이번 회의의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병역거부권 문제가 이슈화된 지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아 운동의 경험이 짧고 군사주의문화가 팽배해 병역거부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힘든 상황에서 타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회의의 의의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해외 활동가들 대부분은 "머지 않아 한국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전 인터넷서널'의 안드레아스 스펙 씨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병역거부자들이 1천4백여 명이나 수감돼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군사적 문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독일의 페터 토비아스 씨 역시 "1949년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당시 독일도 한국처럼 분단 상태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가 양심의 자유의 일환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바 퀘이커 유엔사무국의 레이첼 브렛 씨는 이날 오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병역거부자 2인을 면담하고 온 소감을 발표했다. 브렛 씨는 "오늘 만난 22살의 두 명의 청년 모두 변호인의 도움이나 제대로 된 진술 절차도 없이 재판을 받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브렛 씨는 이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양심을 꺾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수감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며 한국정부가 유엔 기준에 따른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와도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경서 상임 인권위원과 최영에 사무총장 등 인권위측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박 상임위원은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상황 사이에 간극이 커 그 동안 인권위의 운신의 폭이 좁았다"며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위의 역할이 거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병역거부 문제가 '종교'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인 만큼 인권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인권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7건의 진정이 제기돼 있다.

최정민 활동가는 "특히 이번에 소개된 대만 사례를 통해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근거없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이라며 회의를 다녀간 병무청이나 국방부, 법무부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기대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내]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퍼낸인;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www.noncensor.org) / 2003년 3월

55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002년 한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건들과 공대위의 활동을 담은 『2002 검열백서』를 발간했다. 2001년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60일간의 릴레이 단식농성을 계기로 지난해 3월 결성된 공대위는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와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활동의 결과가 이 한 권에 모두 담겨있다.

백서에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검열 사건,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지윤·김강필 씨 사건, 엑스존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벌인 정보통신부와 공대위 사이의 논쟁도 볼 수 있다.

이 백서를 읽다보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검열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모호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이 변화해야 할 때, 이 백서는 그 길로 가는 작은 초석이 되고 있다. [최은아]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동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를 만들겠다"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2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각 부처 국장급과 민간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이행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만들 예정"이라며 20일까지 기구에 참여할 민간단체와 민간위원 추천만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참교육학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사항에 대한 2차 민간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민간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민간단체와의 실질적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간단체들은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충분한 논의없이 성급히 추진할 경우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95년에 작성한 1차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아동권리를 위한 국가위원회'는 애초 만들어진 일도 없었고, 이후 만든 '아동권리조정위원회'도 2차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만 한 차례 진행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기구 설립에 앞서 '기구의 상을 전제하지 않은 열린 간담회'를 갖고 대국민 홍보와 민간단체와의 지속적 논의를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김학기 사무관은 이러한 민간단체의 요구에 대해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고, 다음주까지는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민간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관련 부처들과 민간단체와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물론 아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국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제대로 된 국가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김영월]

<속보>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아직도 안 풀려나

12일 남부경찰서와 노랑진경찰서로 강제연행됐던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21명이 13일 오후 10시 현재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앞 기자회견을 여전히 불법 집회라고 우기며 억측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

이에 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귀가조치와 서장 면담, 폭력연행에 대한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서내 격리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항

일곱 번째 반딧불이

사북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난다

사북 광부들의 통한의 사연을 담아낸 영화 <먼지, 사북을 묻다> (이미영 감독, 80분)가 이번 달 반딧불이에서 상영된다. 2002년 인권영화제에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영화는 80년 사북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파업과 그 이후 신군부가 이들에게 지저른 만행을 최초로 증명한 다큐멘터리이다. (본지 기사 2002년 6월 6일자 참조)

"기억과 망각 속에 묻혀있는 아픔을 불러낸 진혼의 곳판", "파문힌 채 왜곡되고 굴절된 사북의 아픈 진실을 양지로 불러낸 작품", "실득과 증거 제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흔적이 역력한 노작(勞作)" 등의 찬사를 받은 이 작품은 20여년 동안 응어리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첫 위도가 되었다. 이미영 감독은 인권영화제 상영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수십 차례 영화를 틀었고 광부들의 통한의 사연을 숨죽여 관람한 이는 3천5백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다음달 부산과 서울대에서도 상영이 예정돼 있어 '사북 항쟁의 진실'을 깨우치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폭도'로 몰렸던 이들의 '정치적 명예'는 복권되지 못했다. 사북항쟁은 '광부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오랜 독재에 눌려있던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80년의 봄'을 가장 먼저 깨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 이들의 역사를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회복'시키지 않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옛 광부들은 이 작품으로 힘을 얻어 사북노동항쟁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에 청원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명예회복법은 이들에게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강릉에서 이들은 경목을 지고 막장에서 노동하는 모습을 재현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반딧불이에서는 이라크에서 보내온 반전평화운동 소식도 접할 수 있다. <먼지, 사북을 묻다>의 조연출을 맡았던 성혜란 씨가 지난 2월 반전평화회의 일원으로 출국해 이라크 현지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담아 보내온 영상도 짧게 편집해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국내 반전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이 감독과 성 씨가 기록한 영상은 이후 반전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작품에서는 성 씨가 감독, 이 감독은 프로듀서의 역할을 맡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 감독을 초청해 이라크 소식과 이들이 만들고 있는 다음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19, 20일 7시 30분에 열리며 상영장 로비에서 이라크에서 보내 온 사진 전시회와 성 씨의 후원 모금도 같이 할 예정이다. © 문의 741-2407 [김정아]

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후 9시경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이 서대문경찰서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실신,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김영월]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15일(토)

제 22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나아가야

'위장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우영 씨 등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다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1998년 7월부터 SK(주)에 '위장도급'의 형태로 불법 파견돼 지우영 씨 등 4명 노동자를 고용한 SK(주)에 정규직으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2000년 11월 해고됐다. SK(주)는 "불법 파견인 만큼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며 해고를 정당화했으나, 이듬해 3월 서울지방법 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의 경우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 대상이 된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상 허용업무 이외에 종사해 온 지 씨 등 3명에게는 직접 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SK(주)의 손을 들어줬고, 뒤이어 행정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예외적·일시적인 사용만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합법 파견이나 파견허용 업무에 한해서만 고용의 무 조항을 적용한다면, 고용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

히려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이나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은 업무로의 파견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 씨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년 넘게 힘겨운 복직 투쟁을 전개해 온 지 씨는 "그 동안 그만두고 싶

은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복직의 길이 열려 기쁘다. 우리처럼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도 의미 깊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지 씨는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파견법에 기대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해진 집행위원장도 "원래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마땅한 업무에 위장도급" (⇒2면에서 계속)

<논평> 진정한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우리는 14일자 아침신문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밤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 1개 대대 규모의 공병 및 의료지원 부대를 파병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및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는 데 이르면 아무리 외교적 언사이겠거니 생각하고 싶어도, 낮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세계 양심이 거리에 나와 전쟁반대를 외치는 이유를 모른다고 시치미 떼지 말라. 대량 살상 무기 운운은 구실일 뿐, 미국이 전쟁을 벌이려는 진짜 속셈은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이란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대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미국과 재확인했다며 '주고받기' 외교라고 너스레를 떨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에 장단 맞추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유독 한반도에서만 지긋지긋한 냉전이 지속되는 이유 역시 바로 미국의 군사주의적, 패권적 개입 전략 때문이다. 그렇진대,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주술처럼 외면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까지 지극처럼 손 들어주다간 한반도에서 평화란 요원하다. 중동 지역을 향했던 미국의 전쟁의 광기가 한반도로 이동할 땐 또 어찌할 셈인가.

에시당초 전쟁을 통해 평화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죽어갈 여성과 남성, 어린이와 노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경제지원, 군사동맹의 교환대상으로서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다른 이들을 폭격의 아수라장 속에 몰아넣으면서 얻게 될 평화가 어찌 '평화'일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막지는 못할 망정, 공범자가 되는 상황은 실로 끔찍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지지와 지원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미국이 일으키는 불의의 전쟁에 제발 더 이상은 동원되지 말란 말이다.

"특허청, 백혈병환자 두 번 죽였다"

특허청의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결정 비판받아

특허청이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을 외면했다.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을 상대로 청구한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의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4일 불허결정 통보서를 보내온 것. 지난해 1월 30일, 보건의료단체들은 글리벡의 독점적 생산·공급체인 노바티스 사가 환자들의 생명을 불모로 턱없이 높은 약가를 책정하고 그로 인해 병원과 약국에서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특허청에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요구했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제정'으로 규정돼 있는 강제실시가 허용되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다른 업체로 하여금 이 약을 생산하도록 하거나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복제약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도의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카피약의 가격은 한 정에 1,200원으로 2만원이 넘는 글리벡 가격의 약 1/57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허청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전염성이나 기타 급박한 국가적, 사회적 위험이 적다는 점 △강제실시를 허용할 경우 독점적 이익을 인정하여 발명위식과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한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실제 부담액이 약가의 10% 수준인 점 △글리벡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보건·인권단체들은 14일 성명서를 발표, '환자를 두 번 죽이는

(=>1면에서 이어짐) 형태로 간접고용이 광범하게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파견법에만 기대서는,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해고하는 관행이나 파견법 자체가 불법 파견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전혀 손댈 수 없다'며 한계를 꼬집었다. (배경내)

강제실시 불허 결정'을 내린 특허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특허청의 결정은 환자의 약가 부담 상황과 글리벡의 공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실사조차 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이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인화되고 보험적용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초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는 보험적용이 전혀 되지 않고 △일부 교형암 환자들 4백여명의 경우엔 한달에 많게는 7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지불해야 하며 △글리벡을 판매하는 곳이 적어 환자 개인이 약을 찾아 전국을 헤매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도 "특허청이 내세운 근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특허청의 잘못된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

했다. 남 변리사는 "강제실시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적 위험 상황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기치료 목적으로 약을 개인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말은 개인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위험을 무릅쓰고 알아서 복용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특허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내팽개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번 특허청의 결정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고 잘못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탓에 '특허청이 제약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불허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민적 반발이 다소 무마되길 기다렸다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불허 통보를 보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들은 조만간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배경내)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정부의 'WTO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WTO교육개방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은 권영길 씨 등 33인의 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비상시국임을 선포, "공교육을 나라로 몰고 갈 어떤 국제협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까지 5일간 농성을 진행했다.

13일에는 '교육개방반대 세계행동의 날'을 맞아 '교육개방 저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 학생, 작가 등 40여명이 농성장에 모여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퍼포먼스를 기획한 문화연대의 나영 씨는 "교육개방 저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행사 전에 몇 차례의 연습 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최향석(대학생, 4학년) 씨는 교육개방에 대해 "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를 포기하고 교육 주권을 외국자본에 팔아먹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라틴아메리카 대륙 등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지식인, 학부모, 문화예술인 등의 성명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지식인 3백3명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하며 교육개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부모 1천명도 14일 성명을 내 "교육개방은 우리의 아이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적 없는 아이들로 만들 것"이라며 "개방이 아닌 교육민주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투본은 교육개방 계획서 제출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14일 대학로에서 벌였으며, 인터넷 (http://saveedu.jinbo.net)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27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15일을 '교육주권수호의 날'로 정하고 오후 2시 대학로에서 개방계획서 철회와 교육환경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18일(화)

제 22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 저지 운동이 전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참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11시 전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사자의 동의도 확인하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생·학부모 당사자의 직접 판단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개인 신상정보 수집 동의여부 확인서'를 배포해 거부자들의 명단을 수집, 공개하는 한편 △이미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 소송 대표단을 꾸려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대표 3인도 함께 참석해 NEIS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에서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되는 학생들의 정보가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학교를 떠나 인터넷을 통해 교육청, 교육부에 모이고 쌓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NEIS 정보 입력 거부 학부모 선언'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1차로 집결된 입력동의 거부 서명 2만1천장도 함께 공개했다. 거부 서명서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전달됐다.

이날 선언문을 낭독한 강성욱(목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 씨는 "정부가 시급한 교육현안들은 제쳐두고 더구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마저

생략한 채, 견집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NEIS을 왜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일방 강행을 비판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1차로 집계된 거부 서명 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학부모의 거부 서명을 모아내는 한편, 이미 법률검토를 끝낸 손해배상 소송은 학생·학부모 소송 대표단을 최종 선정하는 작업만 거친 뒤 곧바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현재 인증서 폐기와 정보 입력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8만여 교사들을 대신해 '인증 및 입력 행정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NEIS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3월 20일! 알찬 행사 다 모였네

-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내부 워크샵
 - 내용: 이석희 변호사(범무법인 한결) 발제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 때: 3월 20일(목) 아침 11시 - 낮 1시
 - 곳: 서울 노동사목회관(지하철 6호선 보문역 7번출구, ☎ 02-924-6251)
- 전국 인권활동가 369포럼 - "전쟁과 인권"
 - 내용: [기획 토론] "전쟁과 인권"
 - 발제 1. 이라크전쟁과 평화운동(평화인권연대)
 - 발제 2. 여성과 전쟁(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 발제 3. 인권운동,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국제민주연대)
 - [인권현안 알기] "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
 - (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
 - 때: 3월 20일(목) 낮 2시 - 5시
 - 곳: 서울 노동사목회관(지하철 6호선 보문역 7번출구, ☎ 02-924-6251)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 3월 상영회
 - 내용: 이라크 현지 반전평화운동속보 상영 (10분)
 - <면지, 사복을 묻다> 다큐멘터리 상영(80분)
 - 때: 3월 20일(목) 저녁 7:30 (19일에도 같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 곳: 아트큐브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 02-2002-7777)

○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

나의 '동지들'

그의 나이 이제 50세.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젊음을 다 바친 방송사에서 파견법에 의해 해고된 후 그는 새 삶을 시작했다. 투쟁의 삶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뿐인 삶이었다. 열심히 투쟁했지만, 동료 후배 조합원들이 파견법에 의해 2년마다 무기력하게 해고되는 것을 보아야 했다. 조합원들을 만나러 KBS에 들어가는 것도 지지당한 채 매맞고 부러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어야했던 고통, 그 자리에 절규하며 그가 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 두드려도 꿈쩍 않는 천하의 악법 파견법을 없애고자 그는 혼자라도 돌진한다.

또 한 동지가 있다. 직업훈련원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단지 뺨이 없어서 바로 그 회사의 사내하청으로 들어갔다. 오로지 노조 만들어 투쟁하겠다는 결심으로 엄청난 차별과 멸시를 견뎌왔던 동지다. 꿈에 그리던 노조를 만들었지만 SK의 탄압으로 모두 집단탈퇴하자, 단 세 명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이끌어왔다. 동지들끼리도 가끔은 잘 안 맞고,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렸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투쟁 과정에서 쓰러져 수술도 받았다. 그러나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자면서 2년6개월을 넘어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3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정규직 복직 판결을 받아내고서 이제 끝까지 비정규직 운동의 씨앗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또 있다. 517일이 넘는 투쟁 중에 동료를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고, 한겨울 노숙농성 중 추위에 쓰러져 언어장애가 된 동지를 부둥켜안고, 집안이 파탄나 괴로워하는 동지들의 가슴 찢는 사연을 가슴에 묻고 또 시작하려는 동지가 있다. 실망도 많이 하고, 때려 치울까도 몇 번 생각했다. 그러나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그래도 우리가 살길은 다시 노조 만들고 새롭게 투쟁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며 그 길을 다시 가려 한다. 분통이 터질 만큼 무시당하며 살았고, 그분을 사이다 도저히 참지 못하게 되었을 때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그 투쟁도 분통터지는 과정이고, 삶을 파탄나게 하고,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것을 '고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이 외에도 정말 많다. 투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던 한진면세점 동지들, 아직도 힘든 싸움 하고 있는 재능교육교사 동지들, 결코 젊지 않은 나이지만 젊은이들보다 더 치열하게 삶을 열어나가는 건설운송 동지들, 하나하나 거명하기에도 벽할 만큼 많은 동지들. 매년 분노에 타오르면서도 동지들에게 너그러울 줄 아는 많은 동지들, 동지들...

무엇이 이 동지들을 전선에 서도록 만들었나? 이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떤 때는 비열하고, 어떤 때는 단순하고, 어떤 때는 흔들리고, 어떤 때는 과격하고, 어떤 때는 너무 타협적인, 평범한 노동자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무엇이 이들을 고통 속에서 일으켜 세우는가? '희망'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다.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거쳐왔다. 그렇다면 뭐가? 그것은 인간다움을 향한 열망이다. 설령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일지라도, 시지프스처럼 개인의 의지와 투쟁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에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1. 이라크민중 학살 시계 제작제작!
미, 한국정부에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표명과 의료지원 등 요청...한국정부, 1개 대대 규모 비전투병 파병 방침 (3.13) /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 (3.13) /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해군 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논란 (3.14) / 수백만 유럽 노동자들, 미 이라크 침공 계획에 항의해 작업 일시 중단...민주노총, '전쟁반대 노동자 대표단' 이라크 파견 (3.14) / 3.15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중요공원서 5천여 시민·학생·노동자 모인 가운데 반전평화 한목소리...전세계 곳곳 수백만명 반전 시위 (3.15) / 프·러·독, 이라크 침공 반대 공동성명 (3.15) / 미 베트남전참용사재단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절반 UN 승인없는 전쟁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져 (3.15)

2. 두산중공업 타결...손배·가압류 해결 계기 될까?
두산중공업 사태, 권기홍 노동부장관 직접 중재로 극적 타결...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등 합의문 발표 (3.10) / 정부, 파업노동자 구속 자제하고 사측의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하는 입법 검토키로 (3.13) / 배달호 열사 장례식, 경남 창원에서 전국노동자장으로 거행돼 (3.14)

3. 교육시장 열리면 교육권 달한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WTO 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등으로 33인 대표단 구성해 비상시국 선포...'공교육을 나라로 물고 갈 어떤 국제협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5일간 농성 돌입 (3.10) / '교육개방반대 세계행동의 날' 맞아 세계 각국에서 교육개방 반대 요구...지식인 303명, 교육개방 철회요구 성명 발표 (3.13) / 교육개방 반대 학부모 1천인 선언 발표 (3.14) / 대학로에서 개방계획서 철회와 교육환경 보장 촉구 범국민대회 열려 (3.15)

4. 국가인권위,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쇼!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보고서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3.10) / 헌법재판소에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 내기로 (3.11) / 국회의장·국방부장관에 북파공작원·삼청교육 특별법 제정 권고키로 (3.13)

굴복하지 않는 것, 길들여지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정신, 바로 그것이다. 난 이 동지들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 때로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짓눌리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동지들과 함께 인간다움의 길을 택한 이상,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낙관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이 길이 패배를 향하는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령 이 길이 패배하는 길일지라도 가겠다. 나의 '동지'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김혜진 씨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19일(수)

제 22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18일 미국이 유엔안보리 표결을 포기하고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보냈으므로써 일방적인 침략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따라 이 전쟁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강력한 반전 목소리들이 갈수록 확산됨과 아울러 이미 파병 방침을 전명한 한국정부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법상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사용은 유엔안보리 승인을 거치거나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경우에만 용인될 수 있으나, 미국의 침공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수십만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 불법전쟁에 동참하는 것 또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으며 군사적 패권주의를 지원한 대가로 한반도의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 또한 망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정부의 파병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전의 불법성을 날카롭게 밝히는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군 파병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평화군축센터는 "미국은 기존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687호, 1141호를 이라크 침공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결의안 어디에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나 독재정권 교체를 위한 무력침공을 정당화한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국제법)도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여부는 안보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개별국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무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공범행위"라고 지적하고, "개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군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은 공동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국내의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힌 노무현 대통령이 기어이 부시와 함께 대규모 학살의 전범이 되는 길을 고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혜영]

"이라크 아이들아, 걱정마!"

"저 눈망울 한 번만 바라본다면~ 보드라운 볼 한 번만 부벼본다면~ 전쟁을 반대해~ 평화를 사랑해!!" 고깔모자를 쓴 아이들 수십 명이 뽀뽀뽀뽀 만들어 온 '전쟁 반대' 피켓을 손에 손에 들고 노래를 부른다. 국제 반전행동의 날을 맞은 지난 15일, 이렇게 평화를 노래하는 아이들의 행렬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부터 인사동을 지나 중요공원까지 길게 꼬리를 물었다.

'쟁이부리말 아이들'의 저자 김중미 씨가 있는 '기차길옆 작은학교'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날 행진에 참가한 초등학교 5학년 진주는 전쟁이 생명을 앗아가고 아이들을 다치게 만든다는 걸 잘 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 마음이 이라크 아이들한테까지 전달될 것 같아요." 모두들 봄나들이 가는 토요일 오후, 이렇게 아이들은 반전평화 시위를 벌였다.

"여기가 국내에서 반전평화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곳이에요." 근래 국내 반전운동을 카메라에 담고있는 이미영 감독은 이날 행사를 준비한 '박기범 이라크 통신'(cafe.daum.net/gibumiraq) 식구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지난달 22일 맨몸뚱이 하나로 전쟁을 막아보겠다고 이라크로 떠난 동화작가 박기범 씨와 함께 하는 이 카페에는 어린이도서관연구회, 겨레아동문학연구회 등 여러 어린이 관련 단체와 개인이 모여있다. 아프간전쟁 때도 '어린이와 평화운동'을 벌인 바 있는 박 씨와의 인연이 이들을 처음 한 곳에 묶어세우는 계기가 됐다.

카페 게시판에는 '박기범 아저씨'를 응원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빼곡하다. 오래 전 만난 적 있는 아저씨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나래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이라크 어린이들하고 재미있게 놀다오세요"라는 바람을 적었다. "전쟁을 하면 더 전쟁이 커져요", "이라크 아이들아, 걱정마. 전쟁이 나면 우리 동네로 와 같이 놀자"... 아이들이 쓴 시에서도 아이들이 내뿜는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다.

"모두들 전쟁 얘기하면서 증시나 경제나 돈 얘기만 하지, 사람이 죽는 얘기는 하지 않더군요. '사람의 논리'가 사라진 세상을 바꾸려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평화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카페 식구들로부터 '평화일꾼'으로 불리는 겨레아동문학연구회 심명숙 씨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전'을 외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이들과 함께 외치는 평화의 함성이 '힘과 돈의 논리'가 판치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는 이들은 전쟁이 터지면 난민지원활동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

"출장 갔다오면 책상 위에 새 사건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걸 바라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관들은 매일 격무에 시달린다. 아침 9시 출근해서 퇴근 시간을 넘겨 밤 9시, 12시 퇴근을 밥먹듯이 한다고 한다. 인권위가 지난해 연말까지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2천8백34건 중 1천3백60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격무를 마다 않은 조사관들의 노고 덕분이었다.

쌓이는 사건, 무거운 한숨

그럼에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처리한 사건보다 많은 1천4백74건. 접수된 차별사건이 총 190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5.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인권침해 사건은 78.7%를 차지하고 있으니 인권위가 진정사건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허덕이고 있다는 말과 같다.

인권위 전 직원 중 인권침해조사국에 배정된 일반 조사관은 모두 26명. 이들은 지난 해 4월 조사관으로 임명 받았을 때 각각 50~100건씩의 사건을 배정받았다. 그중 대부분을 처리했지만, 다시 그들은 처음보다 많은 사건을 안고 있다.

이들 조사관들은 사건 배정을 받으면 의견서 작성, 조사 기획, 조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린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사가 순탄할 리도 없다. 거의 인권위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기 일쑤인 국가기관과의 힘 겨루기도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거기에 '밤새워 조사하고 보고서 써서 올리면 1주일에 단 한번, 단 몇 시간 열리는 회의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다음으로 미루기 일쑤'인 소위원회의 결정 지연도 문제다. 특히 '민감한 사건'의 경우 위원들이 너무 앞뒤를 재다 보니 한 사건 결정이 몇 달째 보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사건 수 비해 조사관은 태부족

이런 현상에 대해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출범 초기부터 6개월 가량을 조사관도 없이 사건 진정을 받았다. 출범 초기 무더기 진정 때문에 사건이 적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은 "초기에는 조사 요건이 되지 않는 사건도 모두 접수받아 조사국으로 넘겼지만, 지금은 상담센터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넘긴다"며 조사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진정 접수되는 사건은 줄어들 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사건 수에 비해서 조사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에는 인권위 관계자 모두가 동의한다. 최영애 사무총장은 "조사관이 태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직제령에 있는 전문계약직이나 파견직 공무원은 행정부의 반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관의 충원과 조사업무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사건 적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전략의 부재도 큰 몫 차지

조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이미 있는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권위의 전략 부재도 진정사건 적체를 낳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중 각하된 사건이 무려 86%. 결국 조사 요건이 되지 않는 각하될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조사 불가 판단을 내리는 데 인권위 조사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매달려 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문제는 사건의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 사건의 경중을 가려서 집중할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한 사건을 해결해도 그 효과를 몇 배씩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획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

다"고 말한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도 "조사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상당량의 사건 조사 경험을 축적한 것을 바탕으로 사건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사건을 처리하는 지침이 조사관들에게 교육되고, 진정인에게도 홍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을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구급시설(39.3%), 경찰(29.6%), 검찰(10.6%) 등의 순이다. 구급시설과 경찰, 검찰 관련 사건이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시설과 관련한 인권문제나 인권침해의 유형은 이미 나올 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인권위가 개별 사건 처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구급시설에 대한 기획 방문조사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사건 적체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침해구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0일 전위원회에 인권침해사건 권리구제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사건처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규정 상 명백한 각하 대상인 경우 등을 인권상담센터가 의견서를 작성,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 요점이다. 이럴 경우 조사과정을 거쳐야 할 진정사건을 상당수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안건은 위원들의 원론적인 반론에 부딪혀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인권위가 밀려드는 진정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은 진정 사건에 매몰되었던 비난에서 벗어나 현실 인권문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개별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미시적 접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양산해내는 인권침해구조를 개혁하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전환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박래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20일(목)

제 22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미국이 이르면 오늘 낮 이라크 침공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전쟁이 이라크 민중에 대한 대규모 학살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간의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자 반전 목소리가 들끓처럼 타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라크전이 시작되면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살상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수많은 이라크 민중을 말살하고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미국의 침략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 방지의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살육하는 전대미문의 학살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미국의 침공 움직임을 강력 규탄했다.

또 이날 발표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의 참가자들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야기할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함께 선언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라크전은 곧 학살'이라는 규탄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단언하는 전쟁과 대량학살의 필연적 관계는 여러 전쟁의 경험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수행했던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을 비튼 '사막의 학살'(Desert Slaughter)이라는 책은 당시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개전 이후의 질병, 굶주림으로 죽어간 민간인의 수가 수십만에 달한다고 고발한다. 또 그 해 2월 13일 미군이 바그다

드의 한 공습대피소에 떨어뜨린 폭탄은 민간인 4백여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중 3백여명은 어린이였다.

가까운 아프간전쟁에서도 민간인 사망자 수는 이미 1만3천여 명에 달하며, 알카에다와 탈레반 잔당을 축출한다는 명목으로 아직도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7천여 미군의 작전수행 와중에 희생된 민간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영국 BBC 특파원은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격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쟁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량 희생되는 이유는 적의 전력을 파괴하고 '잠재적 적'을 소탕하기 위한 체계적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비군사시설이나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의 대규모 민간인학살의 경

험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이라크인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겠다'는 명분으로 벌어지는 이번 전쟁은 학살만을 예고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19일 한국정부는 많은 인권·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파병 철회 요구에 눈감은 채 5-6백명 규모의 파병 준비를 본격화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파병을 적극 지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심지어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황장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등 수구세력들이 모여 결성한 '자유통일국민대회'는 전무병 파병까지 촉구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교사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살롯 엘더브러이란 이름의 한 미국 소녀는 지난 5일 미 주간지 <Wiretap>에 게재된 반전 호소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에 살고 있는 2천4백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라는 걸 알고 있나? ...제가 바로 당신들이 죽이려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정녕 이 아이들에게서 생명과 미래를 훔치는 일에 가담하려는가. (배경내)

만화사랑방

이동수



"나는 결국 소모품이었어..."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근골격계 직업병 키웠다

지난해 대우조선 노조의 투쟁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된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 투쟁이 최근 금속 사업장을 넘어 사무직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주로 하는 '오피스' 노조도 최근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 투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루소식>은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이 병으로 요양 중인 한 노동자를 만났다. <편집자주>

노동자들의 몸이 혹사당하고 있다. 일의 강도가 너무 세고, 많은 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 골병드는 '근골격계 직업병'이 노동자들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두원정공에서 13년째 일을 해온 문경철(45세) 씨는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지난 달부터 요양 치료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제품 검사를 위해 40kg이 넘는 상자를 나르고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루에도 수 차례씩 해 왔다. 그러다 지난 97년 이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문 씨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했다.

"처음에는 빠진 사람들 일을 해야 하니까 과부하가 걸렸죠. 근데 한 3-4개월 지나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5명이 했던 일을 3명이 하고, 3명이 했던 일을 2명이 하고... 결국 내 몸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해왔던 거죠."

문 씨의 말은 과중한 노동강도가 근골격계 직업병을 불러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두원정공 사업장을 조사하고 펴낸 보고서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수는 1천여 명에서 6백여 명으로 꾸준히 줄어왔지만, 감축된 인원이 이전과 동일한 물량을 계속 생산해 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씨는 지난 2년 동안 일을 하다 아파도 회사로부터 해고 당할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를 악물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멀쩡한 사람도 아웃되는 상황인데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한 거죠. 아프다고 얘기하면 '나 잘라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문 씨는 개인적으로 조퇴나 월차, 외출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비용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야 했다. "꼭 바로 누워서 자다보면 어깨, 허리가 너무 아파 30분을 반듯하게 못 누워있어요. 뒤척이다 보면 설 잠을 자게 되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내면 사람이 붕 뜬 것 같아요. 그러다 주말에는 고통을 잊어보려고 주량보다 더 많이 술을 먹는 거죠. 그 다음날은 후유증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악순환인 거죠."

그렇다고 문 씨가 처음부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0년 근로복지공단에 허리통증으로 산재 신청을 했지만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 회사가 문 씨의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문 씨는 지금도 비참한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한다.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회사가 나를 인격체가 아니라 소모품이고 도구로 대했구나 이런 비

<해설> 근골격계 직업병이란?

개별적으로는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 작업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중량물의 양 등과 같은 작업환경이, 집단적으로는 노동인력 부족이나 과도한 작업량, 긴 작업시간,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 환경 등과 같은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직업병이다.

목, 어깨,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 주로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통증, 쑤시는 느낌, 빠근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또는 저릿저릿함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직업병은 심한 경우 근육이 파열돼 팔을 제대로 쓸 수조차 없게 된다. 흔히 나이든 어른들이 겪는 뼈마디가 쑤시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픈 '골병'이라는 증상이 최근에는 3, 40대의 노동자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 산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2천7백여 명의 조사 대상자중 16.4%인 4천4백여 명이 당장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 문제는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이 특정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배경에는 구조조정과 그에 따라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 문제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원)

애감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문 씨는 지난 1월 노조원들과 함께 집단 요양 신청을 내고 산재 승인을 받아 병원에 입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두원정공 외의 많은 사업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아픈 건 당연하다'는 논리로 근골격계 질환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산재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두원정공 노조의 이기만 수석부위원장은 "개별적인 공상처리보다는 노동자들이 집단 요양을 신청해 산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작업장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강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양 치료를 받더라도 집단 작업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근골격계 질환이 또 다시 재발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두원정공 노조는 작업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 2001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필요한 노동인력의 보충과 함께 집단적 작업환경을 감시하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보장을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두원정공의 사례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근골격계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모범 사례이자 힘이 되고 있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21일(금)
제 22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미국의 폭탄은 바로 이 아이를 겨냥하고 있다!



20일 오전 11시 30분!
우리는 학살의 시작을 기억한다.

미국은 이라크 민중에 대한
학살전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학살 지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창문 밖에서 계속 손을 흔드는 세이프를 보고 울고, 멀리 베스동허 시있는 카심을 보면서 울고, 어둠 속에서 있는 상현 오빠를 보고 울었습니다.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지나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 바그다드 시내를 보며, 눈물을 그치지 못하면서 딱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 이라크반전평화팀 성혜란 씨, 17일밤 바그다드를 떠나며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

미국이 기어이 이라크 침공을 개시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되자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하루 내내 참혹한 학살전을 개시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공습이 시작된 지 한 시간 후, 미 대사관 앞으로 달려나온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에 무력하게 노출된 대상은 후세인이 아닌 이라크 민중들'이라며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의 양심은 결코 학살에 불복한 군사적 폭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곧이어 같은 장소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여중생 법대위 등 인권·사회단체들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독재자 후세인을 오랫동안 지원해 온 미국이 이제는 자국의

패권 과시와 중동의 석유 장악을 위해 이라크의 무장 해체와 민주화라는 구실을 내세워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녹색연합의 김제남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파병 방침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통부 장관은 "반전 여론은 부담스럽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빨리 제출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내놓았을 뿐 철회의 뜻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1백여명은 이후 미대사관 앞에 자리를 잡고 오후 5시 30분까지 연좌 농성을 계속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결프전으로 인해 이라크 어린이 4명 중 1명이 기형아로 태어나고 있다"며 전쟁의 참혹함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파병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

동당 인권위원장 이덕우 변호사는 "파병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식부터 이라크에 보내라"고 요구하고, "민간 파병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전쟁범죄자로 기소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녁 7시가 되자, 촛불시위가 열린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는 3천여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전쟁 중단 축구의 목소리를 이어나갔다. 자신을 주부라고 소개한 한 참가자는 직접 만든 파켓을 목에 걸고 "전쟁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볼 때 무력감을 느꼈다"며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대학생 주애니 씨는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파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일이 손에 안 잡혀 업무가 끝나자마자 달려나온 회사원,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2면으로 이어짐)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미국의 이라크 공습 개시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전쟁지지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20일, 충남 홍성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또 한 청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홍성지방법원(판사 이재석)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 달 구속기소된 최준호 씨(22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1년6월형을 선고했다.

풀무원기술학교를 수료하고 평소 생태주의적 신념을 지녀왔던 최 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장문의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키는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나의 양심이며,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에게 군대와 전쟁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 삶과 공동체를 파괴할 뿐이며 힘있는 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최 씨는 자신의 병역거부는 "좁게는 사람을 죽이는 도살기술에 대한 거부이며, 넓게는 사회제도에 대한 반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최 씨의 신념을 이해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감옥행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지난해 이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현재 불구속 재판 과정에 있는 유호근 씨도 참석했다. 유 씨는 "최준호 씨에게 1년6월형을 확정판이 끝난 후, 이라크 개전 소식을 듣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유 씨는 "비록 전쟁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그 동안 전쟁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반전 직접행동을 벌여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이제 또다시 전쟁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반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렇게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또 한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차라리 차가운 감옥철창을 선택한 날, 노무현 대통령은 지켜질지 모를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기꺼이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을 죽이는 학살범이 되겠노라고 천명했다. 그가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는 인간방패가 되어 이라크에 남은 한국의 평화운동가들도

섞여있다. 그의 선택은 도대체 누구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 (허혜영)

⇒1면에서 계속

어린이, 선생님과 함께 나온 학생 등 교보문고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로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열기를 더해갔다. 밤 10시 무렵에서야 끝난 촛불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 열리는 반전집회로 다시 모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쟁과 인권'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전쟁의 배경을 짚어보고 현 시기 인권운동의 과제를 모색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최근 현실적 위협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규정한 불량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을 적극 구사하는 전략으로 수정"됐으며, "이라크 공격은 이러한 군사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 플

(김영원/배경내)

랜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손 활동가는 "미국은 자본의 세계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건들, 즉 금융·상업네트워크와 에너지 수급 체계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는 세계화의 강행을 위한 전지구적 군사연계망을 구축하는 한편, 중동과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자원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국의 예방전쟁 전략에 따르면,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는 시나리오의 매우 큰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따라 포럼 참가자들은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포럼에서는 현 시기 인권운동은 우리 사회에 내면화된 군사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를 통해 폭력과 학살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평화운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포럼이 끝난 후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됐다. 또 향후 인권활동가들은 반전평화운동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원/배경내)

클릭! 인권정보자료

「나는 평화를 꿈꿔요」

- 옛 유고슬라비아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의 여러 모습

역은이: 유니세프/ 울긴이: 김명무/ 펴낸이: 비룡소/ 1994년

전쟁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은 어떨까?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내전이 끝난 후, 유니세프는 전쟁을 경험한 아이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한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아이들에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 유니세프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견뎌낸 전쟁에 대한 공포와 동시에 아이들의 마음 속에 환하게 떠오르는 놀라운 희망을 발견해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에는 포탄에 맞아 다리를 잃은 아이, 사랑하는 가족의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 왔던 아이, 지하실에 숨어 공포에 떨며 폭격 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던 아이... 그 아이들이 꿈꾸는 간절한 평화에 대한 증언이 단순한 그림 한 장, 짙막한 시 한 편에 녹아들어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이 비단 옛 유고 아이들의 경험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라크에서 현재 진행중이고, 지금 우리에게 평화란 먼 꿈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 아이들은 소리 높여 외친다. 아이들의 비참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 그들의 공포, 슬픔, 희망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평화를 촉진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탱크들이 어린이들의 놀이집이 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공습 경보나 총 소리에 놀라지 않고 평화를 깨 잠들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자고 우리에게 말한다. (최은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22일(토)

제 23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월차 신청한 하청노동자 식칼테러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 계약해지까지 요구

월차 휴가를 쓰려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 또 다시 칼로 테러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아산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세화산업에서 일하던 송모 씨. 현대자동차 노조 아산지부(지부장 오점근)에 따르면, 지난 19일 송 씨는 '월차를 내겠다'고 담당 조장에게 얘기한 후 작업을 하던 중 임모 과장이 면담을 요청해 사무실로 갔다. 그런데 임 과장은 "매번 특근도 안 하면서 무슨 월차냐"며 휴가를 못 내게 했고, 이에 항의하는 송 씨의 목을 졸라 뒤로 넘어지게 했다. 그 충격으로 송 씨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날 저녁 임 과장이 다른 2명을 데리고 송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이불로 송 씨의 얼굴을 덮은 후 20cm 정도의 칼로 왼쪽다리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고 도망간 것. 이로 인해 송 씨는 인대의 70%를 손상당해 4개월 이상의 치료와 18개월 이상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임 과장은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해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하청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생산해야 할 물량에 따라 회사가 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편하게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쓴다"며 결국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 일상적인 폭언이나 폭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현자노조

아산지부에 따르면, 세화산업도 예약하지 않은 월차를 썼다고 노동자를 협박하여 시말서를 쓰게 하고, 병이 난 경우에만 월차를 허용, 그 후 진단서를 끊어오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의 이 같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제대로 항의할 수 없다. (⇒2면으로 이어짐)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미국이 기어이 참혹한 대량 학살전을 시작했다. 이미 미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는 눈덩이처럼 더욱 불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추악한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놓인 이라크 민중의 현실을 '충격과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미국에 의해 현실팩처럼 내던져진 유엔과 국제법이 초라한 물골로 놓여있다. 이라크전은 '유엔현장' 위반이라는 목소리들도 초라하게 들린다. 국제법상 개전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 '침략'을 개시한 미국의 행동은 2차대전 이후 자신의 주도로 건설된 유엔과 국제법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받지 않을 것'임을, 또 악육강식의 새로운 정글 질서가 기존의 세계질서를 대체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전부터 감지되어 왔다. 2차대전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유엔과 국제법을 존중해왔던 미국은 최근 도쿄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이후에는 개별 국가들을 협박해 '미군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은 유엔과 국제법의 죽음을 공식 선포하며 '침략과 학살의 무법시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유엔이라는 기구의 죽음에 대해서가 아니다. 유엔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던 국제인권법이 곧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질 종이조각이 됨으로써, 한 제국의 횡포를 제어할 어떠한 제도나 규범도 존재하지 않게 된 현실, 그리고 그것이 낳을 죽음과 폭력의 악순환을 슬퍼하는 것이다. 1차대전 이후 건설된 국제연맹체제는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에 의해 무너졌고, 그것은 다시 2차대전이라는 파멸적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2차대전 이후 건설된 유엔체제는 미국에 의해 무너져 더 큰 파국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라크지만, 내일은 또 어떤 나라가 불벼락을 맞을지 모른다. 이번 전쟁은 전세계를 향한 대량학살전의 전초전일 뿐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 미국의 침략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사멸해가는 유엔과 국제법의 권위를 복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민중들의 평화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까지를 내다보아야 한다. 수업을 중단하고 거리로 달려나온 청소년들, 이라크 어린이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어린이들, 전쟁 개시에 항의해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싹을 본다. 이미 싸움은 미국이라는 강대 제국과 인권과 평화를 위해 이라크 민중과 기꺼이 연대하려는 전 세계 민중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3월 17일 59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개막했다. <하루소식>은 다음달 25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위 소식을 팩스 로마나 사무국장 이성훈 씨를 통해 매주 전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59차 유엔인권위가 17일 6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막됐다. 개막식은 임박한 이라크전쟁 때문에 침체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의 의장인 리비아 알 하자지 씨는 개막연설에서 "어떤 명분이든 전쟁은 인권 침해, 특히 생명권의 침해를 낳게 마련"이라며 "인권의 관점에서 전쟁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새벽(제네바 시간) 우려됐던 전쟁이 터졌지만, 당일 오전 분위기는 너무도 차분했다. 일부 대표가 긴급사태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대다수 외교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체념과 무력감이 역력했다. 반면 회의가 열리는 유엔건물 주변은 제네바의 미국 대표부에 대한 항의 행진을 벌이는 고등학생들의 분노가 가득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스위스 역사상 처음 있는 동맹휴업이었다.

"유엔 무시한 미국 참석 모순 아닌가"

유엔인권위 미국 대표단은 20일 오전 관례대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인권침해 국가로 알려진 리비아가 의장국으로, 짐바브웨가 위원국으로 인권위에 참석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가 기대했던 전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에 한 인권단체 대표가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헌장 위반인데 유엔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인권위에 참석해서 인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대표단은 예상한 질문이라는 듯 "이라크와의 전쟁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678호와 1441호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전쟁 이후 이라크 인권상황이 매우 개선될 것이니 지켜 보라"고 말했다. 무력사용이 이라크의 인권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첫 나흘 동안 정부대표 연설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사태의 긴박성 때문에 정무관 비공식 긴급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이슬람국가연합(OIC)과 아랍국가및비동맹연합(NAM) 국가들이 인권위에서 이라크 사태에 대한 특별토론을 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에 부딪혀 공동의 입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사태는 인권위와 전혀 관계없는 안보리의 문제라며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인권고등판무관, 미 침공 입장 불명확"

한편 지난해 말 새로 임명된 서지도드 벨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호소문을 발표, 전쟁당사국이 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따를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인권단체들은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은 명백히 유엔헌장과 인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반인권성과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마련해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병역거부문제도 다뤄져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몇 가지 인권문제가 다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유엔인권위의 주요 인권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올해에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전시성노예와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최종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국가보상 권고 불이행에 관한 후속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후속작업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격년제 원칙에 따라 올해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천우봉사회(케이키) 제네바

대표부의 레이첼 브렛 씨는 이번 회의에서 서울 회의의 후속으로 국가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유엔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해 이에 관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인권 결의안도 제출될 예정

한편 이번 인권위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정부도 대북 인권결의안 제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전문가들은 이라크전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은 중국과 모종의 타협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제네바 : 이성훈)

(=>1면에서 계속)항의를 한 노동자에게는 '해고'조치가 이뤄지고, 하청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청과의 계약해지'가 이루어져 항상적인 고용불안의 위험 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현대자동차 사측은 세원 노동자들이 진업을 거부하며 회사에 사권 해결을 요구하자 20일에 바로 세화산업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세원산업 노동자들은 현자노조 아산지부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한편,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방지와 차별 시정을 사측에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집행위원장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청업체에 돌려지임 노동자를 쓰고 있는 구조에서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대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을 원청으로 바로 고용하는 정규직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25일(화)

제 23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

"당신들 정부가 이 전쟁을 지원하지 않도록 마아달라."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반전운동을 벌이고 24일 귀국한 반전평화 활동가들은 이렇게 그곳 민중들과 국제 평화 지지자들의 간절한 당부를 전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이 야만적인 침략전쟁에서 무참히 학살당하고 있는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4일, 한반도 곳곳에서는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앞 뒤덮은 파병반대 함성

◎ 오전 10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4개 여성단체는 김희선·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 5명과 함께 파병반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 11시경에는 23일부터 국회앞 철야 노숙농성을 진행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파병 거부를 촉구했다. 또 양대노총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총파업과 더불어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속해있는 전국의 지구당 항의 점거농성과 내년 총선에서 범국민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노총은 300여 노동자·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에 걸친 파병반대 집회를 벌였다. 특히 이 집회에는 지난 14일부터 요르단 암만에서 반전운동을 벌이다 이날 귀국한 민주노총 전쟁반대 대표단이 참석해 요르단 현지의 반전 분위기와 국경지역의

비참한 난민촌 상황을 전했다. 반전평화팀 단장인 김영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1일 요르단 반전집회에 참가한 많은 국제활동가들이 '당신들 정부가 이 전쟁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명분으로 한 파병방침을 통렬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양대노총 대표단과 함께 파병을 반대하는 4만여 시민의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국회의 한국군 파병결정은 헌법유린 행위인 동시에 전범국가가 되는 길"임을 거듭 강조했다.

"파병결정은 전범국 되는 길"

◎ 오후 4시경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면담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과 20분 가량 면담을 가지면서 "파병동의안 표결 의사일정을 연기하고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파병동의안 처리는 당론 투표가 아닌 개별 투표에 맡길 것"이라고 답하고, 대표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최고회의에 전달하겠다"고만 말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표단의 면담 요구에 대해 "만날 필요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표단은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의사일정을 민중의 실력행사로 저지하는 것"이라며 "파병저지로 이라크 민중

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파병반대 집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성직자·병역거부자들도 단식 돌입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10여명의 성직자들은 이날부터 단식기도에 돌입,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과 한국군 파병반대를 촉구한 데 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 나동혁, 유호근 씨도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 참여연대 등 전국 15개 지역단체가 소속된 참여자치연대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표결결과를 2004년 총선에서 후보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것'이라 천명했다.

이라크와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

저녁 7시부터는 500여 시민이 국회 앞에 모여 파병철회 촉구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를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의 피를 부르는 이 더러운 전쟁범죄의 공범국 국민으로 만들지 말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공포에 떨고있는 이라크 어린이들은 오늘 국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한국군 파병이 증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내부에서 파병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을 뿐 파병계획에 관한 인권위 입장 표명 문제는 회의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해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허혜영/배경내)

2003 제7회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출품작 공모 이달 31일까지 (문의: 741-2407)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지난 20일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이라크 공격이 개시되었다. 텔레비전 뉴스는 연일 미국의 CNN을 통한 전황을 알리고 있다. 어떤 공영방송 뉴스에도 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많은 시청자들은 컴퓨터 게임을 즐기듯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던 중 어느 인터넷 신문에 실려 있는 카타르의 알 자자라 방송의 보도를 인용한 한 장의 사진은 전율을 느끼는 차원을 뛰어넘어 극도의 공포를 갖도록 만들었다. 미군의 공습으로 머리가 으깨진 한 어린이의 처참한 모습이였다. 전쟁은 컴퓨터 게임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엄청난 재앙임을 알려주는 사진이었다.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민중들이 희생당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오싹 소름이 끼친다. 전쟁만큼 반인권적인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20세기 초 두 차례의 대전을 치르면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새로운 인권의 목록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틀만 나면 인권을 수출하고 그들의 인권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인권을 비판하던 미국은 하루아침에 반인권국가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미국은, 아니 더 정확하게 미국의 지배계급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시정권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권은커녕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법조차 무시한 채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반미를 외치는 데 머무를 수 없다. 극미(克美), 즉 미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전세계인의 반전 열기가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서도 미국이 전쟁을 감행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전쟁의 원동력은 물론 미국의 압도적인 무기체계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개전 이후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70%에 달하는 미국 민중들의 의식이다. 그들의 의식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언론이다.

자주외교를 주창하며 등장한 참여정부는 부시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에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제 한국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한반도 위기 시에 세계의 반전 평화세력의 힘을 결집하여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한국정부가 자초하였건, 아니면 피치 못할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건 간에 구령팅이에 빠진 한국정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파병거부이다.

오늘 열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양심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 파병거부 결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포함한 한국의 지배세력은 미국과 함께 한국을 지배하는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한국 민중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재벌의 이해관계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 민중들의 역할이다.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와 국회는 자신의 역할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말았다. 반전운동을 통한 인권운동의 주체는 결국 전쟁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 민중들이다. (이창호 씨는 경성대학교 법학 교수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1. '아, 이럴 수가...' 세계를 휩쓴 '충격과 공포' 미·영·스페인, 유엔 안보리 이라크 공격 결의안 표결 포기(3.17)/ 부시, "후세인 48시간내 떠나라"고 최후통첩 발표...영 행정부 고위 인사들, 이라크 침략 지지에 항의해 사임 표명...한국 인권·사회단체들도 전쟁반대·파병반대 외쳐(3.18)/ 미, 후세인 망명해도 진격 계속하겠다고 밝혀...영·호주·덴마크, 전투병 파병키로(3.19)/ 미, 한국 시각 11시 30분경 이라크 침략 단행...노 대통령, 미국 지지가 국익에 부합한다며 5-6백명 규모 공병대와 150명 규모 의무병 파견키로...김원웅·심재권 의원 등, 한국군 파병 반대 농성 돌입(3.20)/ 유엔 사무총장 유감 표명,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 침략 불법성 지적하며 공격 중단 요구(3.20)/ 지구촌 곳곳 반전시위 확산...바르셀로나 50만명, 뉴욕 25만명 참가(3.22)/ 민주노총 등, 파병반대 국회앞 농성 돌입(3.23)/ 이라크정부, 미·영 연합군 폭격으로 민간인 70명 사망하고 5백명 부상했다고 밝혀(3.24)/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과 여연 등 여성단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도 파병반대 요구(3.24)

2. 양심의 자유, 기지개 켜까... 노 대통령, 검찰에 한총련 이적규정 전향적 검토 당부(3.17)/ 검찰, 한총련 강령과 규약개정을 '이적규정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밝혀져(3.18)/ 법무부, 준법서약제 폐지 검토 중(3.23)/ 정부, 4월말 또는 5월 초쯤 양심수 특별사면 단행키로...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면에서 제외하고 수배해제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3.24)

3. 대구지하철, 희생자 원혼과 위험 안고 달린다 대구지하철 참사 한달째, 아직도 실종자가 201명에 이르고 종합적 안전대책도 마련 안돼(3.18)/ 대구 중앙로역에서 출발한 참사 유가족 도보대장정 서울 입성...법국민적 관심 촉구(3.18)/ 대검, 대구 현지에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참사 원인 직접 수사키로(3.19)/ 고건 총리, 14개 부처장·차관, 대구시청에서 참사 조기수습 관련 특별 대책 논의...실종자 신원확인 작업 조속히 진행키로(3.20)

4. 기타 전교조, 당사자 동의없는 NEIS 정보입력 관련 학생·학부모 손해소송 제기하기로... 전국 학부모 2만여명, 1차 정보수집 거부 서명 발표(3.17)/ 윤덕홍 교육부총리, 더 이상의 교육시장 개방은 안된다며 WTO 개방계획서 제출 유보 방침 밝혀(3.18)/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여자노동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당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3.20)/ 각계 1천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발표(3.19)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인권하루소식>은 국제인권단체들을 비롯한 각국 민간단체들이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59차 유엔인권위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 채택·발표할 공동성명서(안)를 번역해서 소개한다. 성명에는 국제법률가위원회, 파스로나 등의 민간단체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시 민사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안 전보장이사회의 분명한 승인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국제여론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2. 우리는 '예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다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종결된 유엔 무기사찰의 재개를 요구한다.

3.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유엔헌장에 위배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에 적극 동조하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이번 선제공격을 평화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개탄한다.

5. 국제인권사회는 사담 후세인 정권 하에서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발해온 동시에 강제 제재로 인해 무고한 이라크 민중이 겪는 부당한 곤경과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제59차 유엔인권 위원회는 문서(E/CN.4/2003/40 and addendum 1)에 담겨있는 바대로 이라크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룰 것이다.

6. 우리는 어떠한 일방적인 무력 사용도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는 없다는 것과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무력의 사용은 특히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의 대의는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추구되어야 한다. 전쟁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유엔헌장을 벗어난 전쟁은 큰 실패이다.

7.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은 그 피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보편적인 관할권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이 보편적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이것이 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으며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일방적이고 강제 조처에 의존하지 않고 인권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다.

8. 우리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인권감치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인류 파멸의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권의 원칙 위에 세워진 진정한 민주주의만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인권이 없는 평화는 공허한 환상이며 평화 없는 인권은 맹목이다.

9. 우리는 진행 중인 군사 행동이 2002년 9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채택한 밀레니엄발전목표(MDGs)에 담긴 빈곤퇴치나 인도적 원조와 같은 지구적 과제들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을 빼앗고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10.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유엔헌장에 기반한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새겨진 인권의 원칙을 확인하고 유지할 임무가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기를 다루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라크 문제를 다룸에 있어, 평화,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의 상호의존성의 원칙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11. 이러한 불법적인 침략의 당사자인 국가들이 유엔인권위의 회원국으로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의 위기는 유엔안보리뿐 아니라 유엔인권위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12. 유엔헌장 71조에 근거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 역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에 담긴 인권의 원칙을 보존할 의무를 갖고 있다.

13. 위에서 언명한 바에 따라, 우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촉구한다.

- i) 유엔헌장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이번 침략을 규탄하라.
- ii) 현재의 위기를 인권 및 인도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특별 회의를 개최하라.
- iii) 장래에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라.
- iv) 이라크의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하라.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매주 화요일자에 실리는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진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새 필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창호(경성대 법학교수)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김철준(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 박영희(장애여성공감 대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반전물결, 국회 파병결정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불법적 침략전쟁과 학살에 가담할 수 없다는 전국민적 열망과 힘이 모여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 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온 나라에 울려 퍼진 파병반대 함성으로 결국 파병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파병 동의안이 완전 철회된 것은 아니다. 이날 말 본회의가 다시 개최되거나 4월 2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파병 동의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오후 4시경 여야 총무회담에서 표결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이날 하루 국회 앞은 파병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 시시각각 벌어지며 숨가쁘게 돌아갔다.

숨가빴던 국회 앞 현장

표결을 앞둔 국회의사당 주변은 빼곡하게 진을 친 전경들과 전경버스로 물샐 틈 없이 채워져 있었다. 오전 11시 40분, 인권·사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 50여명이 전쟁 중단과 파병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정문 앞 기습시위를 전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둘러 모두 국회 맞은편으로 밀려났다.

본회의가 시작될 오후 2시가 가까워 오자, 집회 참가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천여 명에 이르렀다. 1시 40분경, 민주노동당 소속 조합원들은 국회 앞에 늘어선 전경버스에 올라가 "이라크 민중 살육하는 더러운 전쟁에 파병이 웬 말이나"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국회를 향해 펼쳐들었다.

2시경 차량의 경적 소리가 의사당

앞에 울려 퍼졌다. 민주택시노동조합 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여의도 일대에서 파병을 반대하며 경적 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이어 수천 50여명도 국회 건너편에서 평화의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비슷한 시각, 대학생 30여명이 파병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 후문 쪽으로 달려갔으나 이내 전경들에게 전원 연행됐다. 한 학생은 전경버스로 연행된 뒤에도 붉은 글씨로 'NO WAR'라고 쓰여진 홍보물을 밖을 향해 퍼들었다. 이후 국회 본관 후문의 서터는 굳게 내려진 채 사람들의 출입을 완전 봉쇄했다.

"우리의 힘이 오늘 표결 막아냈다"

4시쯤 파병동의안 본회의 상정이 미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사발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한상렬 목사는 "매일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애쓴다고 말해주는 국회 직원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우리의 힘이 모여 오늘 파병 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막아냈다"며 감격해 했다. 그러나 한 목사는 "폭력에 발이 잘린 한 이라크 소녀의 사진, 이라크군에 포로로 잡힌 아들의 사진을 보며 오열했다는 한 미군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 전쟁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다"며 전쟁 중단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파병 동의안이 완전 철회된 것은 아니어서 참가자들은 이후 투쟁 일정을 확인하며 해산했다. 앞으로 전쟁 중단·파병 저지를 위한 행동은 26일~28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 29일 낮 3시 민중대회, 31일부터

2003년 3월 26일(수)

제 23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파병 동의안이 철회될 때까지는 반생 농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경찰 노상 감금 법적 대응키로

한편, 이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집회장을 겹겹이 둘러싸고 참가자들의 출입을 통제해 분노를 샀다. 심지어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해 소변을 볼 수 있는 임시 화장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따른 불법 노상 감금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접수시켰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국회 출입 통제 강력 항의

한편, 11시경부터 국회경비대가 일반인들의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자, 국회도서관과 의원회관을 찾은 학생과 시민 10여명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오후부터 경비대가 주민번호를 일일이 적은 후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이러한 절차에 다시 항의한 끝에 결국 주민번호를 적지 않고 경비대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국회도서관을 방문한 시민 구정화 씨는 "단지 시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한 폭탄 다루듯 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방청 간 사람들까지 끌려나와

이날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국회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방청을 일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2시 30분경 최철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활동가 등 40여명이 미리 발부받은 방청권을 갖고 국회 본관을 찾았지만, 입장이 불허됐다. 그러자 이들은 방청권을 높이 들고 "방청을 보장하라"며 강력 항의했다. (☞2면에 계속)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5일 교육부가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중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4시 30분경 열린 윤덕홍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진보네트워크 등 인권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NEIS를 통한 정보집중 자체가 인권침해인 만큼 그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학생·교사·학부모·인권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부총리는 "이 중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 교사·학부모·인권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NEIS 시행 중단은 학교행정의 마비를 불러올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심의기구는 NEIS의 중단까지 포함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이렇게 이날 면담은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면담결과를 전해들은 전교조도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국장은 "NEIS의 시행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심의기구 설치의 결국 개인정보집중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은 채 시행상의 문제를 일부 수정·보완해 이 시스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들러리서는 것에 불과한 그러한 심의기구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혜영)

(☞이면에서 이어짐) 간단한 항의집회를 가진 뒤 국회 본관 앞으로 가던 이들은 전경들에게 전원 연행됐다. 이에 앞서 본관 면회실에 들어와 방청을 기다리던 환경운동연합 명호 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명도 방청 불허에 항의하며 로비에서 5분간 연좌농성을 벌이다 사무처 직원들에게 끌려나왔다. 이들은 모두 청량리경찰서와 종암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4시 40분경 풀려났다.

국회의 이 같은 방청 불허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시민들의 방청마저 불허한 것은 국회가 민의의 대행기구라는 정체성을 정면 거부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주영/최은아)

제1회 한국전쟁기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금정굴학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 때: 2003년 3월 26일(수) 낮 1시
- 곳: 고양시 일산구청 대회의실 (3호선 정발산역)
- 내용: 우익테러와 '태극단'의 실체, 학살 실태 등 발표·토론
- 주관: 고양 금정굴 학살 공동대책위원회 (031-967-9944)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서울 한천중학교의 한 정규 교사가 2000년 3월부터 1년간 휴직했다. 이에 아무개 씨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근무했다. 계약은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단위로 체결됐다. 이듬해에는 다른 교사의 휴직으로 다시 기간제 교사로 일했는데, 학기 단위의 계약은 마찬가지로였다. 결국 아무개 씨는 정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방학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었다.

한천중학교의 차별 대우는 이뿐만 아니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사실상 1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호봉 수가 아무리 높아도 최고 10호봉까지만 인정받았다. 이에 아무개 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 진정사건과 관련,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한천중학교장 등을 상대로 △1학기 이상 일한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연가 및 월차휴가를 인정하고 △호봉 책정시에도 현 10호봉 상한을 좀더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덧붙여 교육인적자원부에게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비용절감, 교사통제 등의 이유로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환영할만한 일로 평가된다. 특히 유시춘 인권위원은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라며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권고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상징적인 지침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전교조 이강훈 교육국장은 "교육부가 해당학교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가령 '방학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고 고치는 등 교육부의 지침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책임용 불안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언급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주목할 만한 또다른 문제점은 이번 진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8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조사국의 기초조사가 3개월만에 끝난 반면, '차별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 무려 5개월이나 소비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길어진 이유는 인권위의 각종 회의가 대개 2주마다 1번 열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회의 때 사건의 논점을 정확히 정리해내지 못하는 인권위원들의 문제가 더 크다.

인권위원들은 회의 이전에 사건조사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회의 한번 할 때마다 조사결과와 치명적인 결함을 명확히 지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회의 이전에 조사관에게 보완할 지침을 통보하는 성실성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2주에 1번 회의가 열리더라도,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27일(목)

제 23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라크전쟁 반대 입장'을 밝혀 현 정부의 파병계획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6일 인권위는 오전 7시 30분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현 이라크전과 관련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UN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미국의 무차별 공중폭격으로 이라크 민간인 희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지상전이 본격화될 경우 희생자 수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쟁의 조속한 종단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헌법 5조 1항의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과 '이라크전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파병 반대'라는 명시적 언급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인지 이번 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가 이라크전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은 사실상 파병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45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창국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인권위원들이 참석했으며, 2명이 반대의를 개진했지만 결국 인권위 입장을 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전화로 찬성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5일 파병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앞둔 시점까지도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아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 방기 아니냐'는 비판을 인권단체들과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인

권위 직원 30여명도 인권위의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자, 25일 오후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독자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침묵하던 인권위가 긴급히 의견서를 내놓기 까지는 이러한 안팎의 요구와 국민적 반전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면서 인권위의 느낌보 행보와 명시적 '파병 반대'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도 "뒤늦게나마 인권위가 국가기구 중 유일하게 반전 의견을 내 한국이 이라크민중과 세계인 앞에 덜 부끄러울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먼저 독자 입장을 표명했던 인권위 직원들도 인권위 의견서가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인권위 의견서로 자신들의 의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다. 한

나라당은 인권위 의견서가 발표되자 대변인 논평을 내고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사실상 대통령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분을 망각한 국론분열 선동행위"라며 김창국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했다. 민주당도 "정부와 사전조율 없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인권위 직원들의 성명 발표를 '집단행동 파문'이라는 식으로 문제삼아 인권위 흠집 내기에 나섰다.

이러한 신경질적 반응들은 모두 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권한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자 파병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진 활동가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인권옹호기관인 인권위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 직원들의 성명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는 추세에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배경내)

만화 사랑방

이동수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담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최근 체불임금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금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도 정부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유일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고용주가 "출입국에 넘겨버리겠다"며 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강제 출국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탈출을 해야 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의 김명순 간사 역시 "최근 단속이 두려워 노동환경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으로 옮겨가 나 낮에는 아예 외출도 하지 않고 밤에만 일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증가해 왔다"면서 "고용주들의 횡포뿐 아니라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역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출국 유예조치가 추방을 앞두고 애 태우던 15만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숨을 되돌릴 여유는 주었지만, '이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정부의 단속·추방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관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다. 안양이주노동자집 이영아 상담원은 "당분간 이주노동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8월말까지 이들에 대한 추방이 유예된 것일 뿐"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추

방을 앞두고 고용주들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인권침해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고석권 계장은 "이번 출국유예 조치는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고 외국인력이 일시 출국할 경우의 인력난 심화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해 우리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출국과 유예가 반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이윤주 지부장은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일부 이주노동자만을 합법화하는 고용허가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원)

역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최옥란을 기억하라

25일, 장애인에 대한 솔한 역압과 차별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다 쓰러져간 최옥란 씨 1주기를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주간이 선포됐다. 이날 2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투쟁기획단)은 "가난·장애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 땅 장애인들의 현실을 바꾸고자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를 되새기며, 열사의 1주기를 시작으로 장애인차별철폐투쟁주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투쟁기획단은 "1년 내내 계속되는 차별과 역압을 단 하루 동정의 기념잔치로 은폐시켜왔던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의 날로 만들어 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이날 투쟁기획단은 "장애인의 분노로 미국의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한다"며 향후 반전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쟁기획단 박경석 공동대표는 "2차대전 당시 나치는 전쟁수행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장애인들을 가장 먼저 가스실로 보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야만성이며, 때문에 더러운 탐욕을 위해 무고한 장애인과 여성, 어린이를 학살하는 전쟁과 어떠한 전쟁 지원도 장애인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최옥란 열사 추모제'는 그녀의 삶과 저항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악값도 안 되는 최저생계비의 반인권성을 폭로하고자 겨울 갈바람 속에서 농성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라며 그마저도 반납했던 그녀"를 기억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녀의 절규" 또한 기억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삶을 옥죄고 있는 역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그녀를 똑바로 기억하는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오후 투쟁기획단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노동권, 교육권 확보' 등 10대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폭력적 노동강도, 남은 건 망가진 몸”

전국 노동현장,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예고

금속사업장을 넘어 전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몰아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투쟁이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준비되고 있다. 27일 서울·목포·군산·울산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과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린 데 이어, 오늘 마산과 창원에서도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27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앞에서는 16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악화가 근골격계 직업병의 급증 원인"이라며 향후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풀무원 춘천지역 노조와 오픈에스이 노조가 참석해 노조원 19명의 집단요양 신청을 승인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했다. 오픈에스이 노조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주로 하는 32명의 노동자 중 11명이 최근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정 받았다. 김만수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최저금액으로 임찰하는 관행 때문에 사업비를 최대한 낮추어 용역사업을 파내왔다"며 "결국 저임금 단기간 계약 노동자들을 고용해 더 많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풀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1, 2월에 걸쳐 94명의 노동자를 검진 한 결과, 47명의 여성노동자 전원과 30명의 남성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자로 나타났다. 풀무원에서 11년째 근무

해온 홍춘자 씨는 "4시간 일하고 15분 쉬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두부 등을 만들어 왔다"며 "작업라인에 인원이 줄어도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참았는데, 결국 남은 건 망가진 몸뿐"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뒤이어 열린 결의대회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의 이훈구 단장은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공단은 관행적으로 치료를

강제 종결시키거나 산재환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직업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 중심의 요양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단 등 관련부처에 촉구했다.

실제로 자동차 실내부품을 만드는 한라공조 노조에 따르면,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공단의 감시 때문에 병원에만 누워있으면서 심지어 허리디스크를 얻기도 한다. 또, 공단은 병원에 치료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요양이 더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몰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술한 시간동안 폭력적인 노동강도 속에 몸이 으스러져라 일해온 노동자들이 선포한 이번 투쟁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의 시작이 되고 있다. (김영원)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26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전쟁반대 입장과 관련, 정치권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인권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인권위가 일방적 침략과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파병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에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한 것은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위의 입장 표명에 여야 모두가 탄축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무지에

서 비롯된 것임과 동시에, 어떻게든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는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반할 때에는 주저없이 비판해야 할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가 현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소신있게 전쟁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인권위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비판했고,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역시 '인권위의 입장 발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2003년 3월 28일(금)

제 23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지난 3월 11일 인권단체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사회보호법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사회보호법의 역사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불량배 일제 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6만7백여명이 검거됐고, 이중 4만여명이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5세의 학생을 비롯해 주부와 교사, 언론인 등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는 대로 끌려갔으며, 삼청교육대에서는 무자비한 폭력과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이듬해 1월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폭압'은 계속됐다.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생들을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시킬 목적으로 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사회보호법을 제정, 이들에게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한 것. 그 결과 총 7,478명이 재판절차나 어떠한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보호감호라는 명분하에 다시 군부대에 수용됐다. 그리고 이들 중 정부 기록만으로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이하 청송감호소)가 완공되면서 군부대에 수용됐던 피감호자들이 이감되기 시작했고,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도 함께 수용됐다. 삼청교육대의 광기가 청송감호소로까지 이어지면서 피감호자들의 반발도 거세어졌다. 이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보호감호 철폐, 교도관 폭행 근절,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자해를 불사하며 참혹한 청송감호소의 실태를 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하지만 보복은 무자비했다. 84년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피감호자 박영두 씨는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끝내 사망했고, 이러한 사실을 바깥 세상에 알려려던 동료 피감호자들은 모진 고문 후 추가형을 선고받거나 빛도 들지 않는 독방에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

했다. 수용자들의 시위는 매년 최루탄과 군화발로 진압됐다.

88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청송감호소의 실상이 세상에 하나 둘 알려지면서 한때 사회보호법이 개폐될 수 있는 호조조건이 형성됐다. 대법원의 위헌 제청에 이어 대한변협과 평화민주당도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보호감호가 부과된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이 삭제되고 법원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했고 보호감호의 대상 범주도 축소됐지만, 사회보호법의 대대적 개정이나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96년까지 진행된 4차례의 개정 역시 요식행위에 그쳤다.

91년과 2002년에는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진행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라며 두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단지 91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변정수 재판관이 "피감호

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나 보호감호 대응시설의 실태가 교육 개선보다는 흑시 이들을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인간쓰레기로 보아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자는 의도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합헌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악명을 떨치며 철옹성을 자랑하던 청송감호소는 90년대 후반 윤치고, 유득형, 대도 조세형 씨 등 피감호자들이 잇따라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하면서 10여년 만에 다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지탄 여론에 못 이겨 사상 최초로 청송감호소를 인권단체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 뒤 지루한 폭로와 공방이 계속돼 오던 가운데 지난해 청송감호소에 있는 피감호자들은 93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조직,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을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타전을 세상을 향해 보내왔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인권단체들도 사회보호법 제정 이후 최초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지난 11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로써 피감호자들의 피로 검게 물든 사회보호법이 다시 한번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유해정)

클릭! 인권정보자료

차별금지법 넘어 다룰 수 있는 권리까지 - 「성적 소수자의 인권」

펴낸 이: 양현아, 한재연 외/ 펴낸 곳: 사람생각/ 2003년 3월/ 280쪽

과연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는 어떤 존재인가? 보편을 내세우는 인권 개념에 과연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녹아들어 있는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새롭게 재정리하고 있다. 우선 양현아의 논문은 기존의 인권체계가 '보편'이라는 이름 하에 남성, 이성애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을 비판하면서, 여성·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의 인권개념을 새로운 틀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양 씨는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다수자의 타자화된 시선으로 존재해 왔다고 꼬집고 있다. 그러면서 양 씨는 성적 소수자들이 '말하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차이'를 인간의 존재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보편적 인간성(humanity)에 주목하며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타인성을 보듬고 배려하며 귀기울일 수 있게 하는 인간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성적 소수자인 한재윤 씨는 체험적 관찰자로서 성적 소수자의 특성,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실제와 해결방안을 실감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석태 씨는 성적 소수자들이 차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짚었고, 홍춘의 씨는 성전환자의 성별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다루면서 외국 판례에 비해 본 우리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최은아)

‘침략전쟁이 불가피한 조치’라니...선준영 유엔 뉴욕본부 한국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3월 29일(토)

제 23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선준영 유엔대사, 미 뚫마니 자처하나

인권사회단체들, '침략전쟁 불가피' 망언 강력 규탄

지난 26일 유엔뉴욕본부 주제 선준영 한국대사가 이라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 현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데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녹색연합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나선 선준영 대사의 사죄를 요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군사작전에서 열화우라늄 탄 등 치명적인 독성 무기들과 네이팜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폭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 협약 제1의정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규정(로마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자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반인권적·반인도적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파병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ICC의 당사국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인권·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처리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유엔뉴욕대표부가 ICC 재판관으로 한국인 송상현 교수가 선출되기까지 인권·평화·정의의 실현이라는 ICC의 목적과 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국제사회에 공언해 왔던 터라 이번 선 대사의 발언은 더욱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나아가 현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인권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법 기소를 준비하고 있음을 주시킴으로써, "반약 한국정부가 로마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계속 지지하고 파병까지 감행한다면 한국정부도 전법 기소 대상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선언했다. (배경내)

파병동의안 처리, 31일로 연기

27일로 예정됐던 한국군 파병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이는 박관용 국회의장이 반전평화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의의원 71명의 요구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 2시 본회의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참석해 국회에 파병동의를 요청하고 파병안이 상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본회의를 앞둔 여의도 국회 주변에는 오전부터 파병저(=2면에 계속)

<논평> 우리 아이들이 겪는 '전쟁'에도 'No'라고 말하자

지난 26일 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를 덮친 화재로 8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참사를 보며 한달 전 대구 지하철 참사, 곧이어 99년 유치원생 19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수련원 참사를 떠올리며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이다. 얼마전 한 신문에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대형참사 가운데 재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참사 유형으로 '씨랜드 화재'를 꼽은 적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가를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토록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들, 특히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련시설이나 학교시설 등이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마저도 부와 권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향유되고 있음을,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한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뼈아프게 일깨워준다. "청와대, 국회의사당에 불 났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보질 못했다"는 한 시민의 한탄이 가슴을 울리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부랴부랴 요란한 땀질 처방을 내놓는 정부가 못미더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이번 참사가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육성에만 목매드는 학원 스포츠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금 많은 어린 선수들이 가혹한 훈련과 열악한 숙소에서의 합숙을 강요당하며 '운동기계'로 전락해가고 있다. 학교와 지도자들은 오로지 대회 '입상'만을 목표로 이들을 과열경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심지어 거리낌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권까지 박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린 선수들은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제대로 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의 하늘 아래 있는 아이들이 미·영 연합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지금 이 땅의 아이들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며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을 '씨랜드의 악몽' 속에 가둬두지 말자. 더 이상 아이들을 또 다른 '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말자. 건강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조와 교육현장, 자원의 배분 순위를 총체적으로 바꾸어내자.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

한국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59차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라크전쟁의 결과로 인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주 제네바 유엔대표부 정외용 대사는 투표 전 발언을 통해 "한국은 이라크 국민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문제를 다룰 적절한 기구이고 현재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특별 회의를 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며 거부사를 밝혔다.

이어 벌어진 투표에서 한국정부는 반대표를 던졌고 특별회의 요구 소집안은 찬성 18, 반대 25, 기권 7, 불참 3으로 부결되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일부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프랑스와 독일 등 안보리 동맹 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영국에 비판적인 국가들도 이번에는 미국의 적극적 대변인 역할을 해 많은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인권전문가는 "정부들이 말하는 인권을 외쳐도 실제 행동은 국가안보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익 중시의 이중잣대에 따라 행동한다"면서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국가가 인권에 대한 독점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실 자체가 유엔 인권위의 모순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 이라크 특별회의 소집 반대해 반대표를 던진 대다수 국가는 한국 정부처럼 안보리 회의의 개최를 명분으로 내걸고 반대표를 던졌다. 또 "특별회의가 정치쟁점화 될 수 있다" 혹은 "개별 국가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의제항목 9에서 이라크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회의 소집을 적극 지지했던 대다수 비정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인권침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갖 핑계를 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스스로 무

능하고 비현실적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 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인권위가 특별회의를 개최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오히려 이번에 특별회의를 반대한 국가야말로 인권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회의 소집이 무산된 직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여성단체연합 등 유엔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 23개 국제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가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침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생명권을 포함한 제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선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과 달리 당일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한 선준영 대사는 대규모 인권침해를 야기한 불법 침공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자아냈다. 게다가 "이라크 문제를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서 접근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인권고등판무관, 미국 눈치보기 급급

일부 인권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 국제인권법의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서지오 드 멜로(Sergio de Mello)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정치적' 처신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3개 단체의 성명서는 "인권고등판무관이 표결 직후 한 연설에 따르면 인권침해가 벌어질 때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인권침해가 난 이후에야 인권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표결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라크 현지에 독립적인 인권조사단을 파견하라"고 주장했고, 국제앰네스티 역시 별도의 성명서에서 "유엔안보리가 즉시 인권감사단을 이라크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한 직원은 "메리 로빈슨 전 판무관이라면 강대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라크 침공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분명히 선언했을 것"이라며 판무관실 내에서도 현 판무관의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봉사회(ISHR)의 아드레안 전 소장은 "메리 로빈슨 판무관의 퇴임과 서지오 드 멜로 판무관의 임명에 미국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판무관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전쟁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침공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일부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일 침공 당일 발표한 호소문에서도 갈등 양측에 인권과 인도법의 준수를 촉구하고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만 언급했을 뿐 침공 자체의 반인권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인권단체로부터 "도대체 그가 인권 판무관인지 난민판무관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네바:이성훈)

(=>1면에서 계속)지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11시부터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는 "이라크 민중들 머리 위로 용단폭격을 쏟아 붓고 있는 무시와 그의 푸들이 되어 학살에 동참하겠다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다. 뒤이어 행진을 시작한 이들은 전투경찰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국회정문앞 대로까지 진격해 '학살중단·파병반대'를 외쳤다. 화물트럭과 트레일러 10여대를 몰고 온 운송노동자들과 택시운수 노동자들도 국회 주변을 돌며 경적시위를 벌였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며, 한국군 파병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1일(화)

제 23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동,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31일 과천정부청사 앞은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새벽길을 뚫고 달려온 2천 여명의 화물운송노동자들로 꽉 들어찼다. 전근대적인 지입제에 의한 노동착취와 생존권 박탈이 이들로 하여금 일손을 놓고 투쟁에 나서도록 만든 것이다.

과천정부청사 앞에 모인 2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65시간을 운행하고 한 달에 절반을 차안에서 자면서 일하는 데도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그들을 버랑 끝으로 내모는 지입제의 철폐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부터 화물운송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차량을 강제 불하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97%의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지입차주라는 특수고용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회사는 운송비용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지입료를 착복했고, 노동자들은 지입차주란 허울을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운송하역노동자 김종인 위원장은 "지입차주들은 산재보험에서도 배제되어 개인보험에 들어야 하나 대부분 계속된 적자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쳐서 일을 못하는 동안의 소득손실도 지입차주가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전한다.

또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차주이면서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이없는 현실에 분노를 토했다. 4년 전 지입차주가 된 심두섭 씨는 "회사가 지입된 차량으로 보증을

서 노동자들에게 차량구입을 강제하는 바람에, 내 차는 작년 3월부터 압류된 상태"라며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지입제의 전근대성을 폭로했다.

이에 더해 8천여 개에 이르는 알선업체들에 의한 이중삼중 중간착취도 그들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 오윤석 경인지부장은 "잠을 설치며 서울-부산을 뛰어다니다 단계 알선업체들의 중간착복비와 기름 값을 빼고 남는 돈은 5만원, 그나마도 지입료, 보험료 내고 나니까 적자"라며 참담한 상황을 토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얼마 전 경유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2006년까지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7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비싼 골프채나 호화 사치품에 붙이는 특소세를 생업을 위한 경유에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곧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더 이상 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운송하역노동자 대표단은 노동부·재경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4개부처와 1시간30분 가량 면담을 가졌다. 면담자리에서 대표단은 △노동자성 보장 △지입제 철폐 △경유세 인하 △다단계 알선 근절 등을 포함한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의 해결방안을 오는 12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허혜영)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가 잇따라 뱉어낸 반인권적 발언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송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반인권적 의식과 전력을 가진 송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내부의 반인권적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면서 "송 후보가 이러한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 후보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양심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양심수가 없다"라고 답하고, 준법서약제도 긍정하는 발언을 해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검토중인 법무부의 방침과도 대조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며 "국가보안법도 대남적화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송 후보는 이러한 '소신'에 따라 1994년 경산대 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 이 사건을 지휘하며 당시 공안물이에 적극 앞장섰던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29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돼있는 양심수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반인권적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를 긍정"한 송 후보의 반인권적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배경내)

●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

-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해괴한 논리가 세를 얻어가고 있다. 이라크전에 의료병을 파병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나도 전쟁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의료병 파병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이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좋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유지하게 되니 최선의 방책 아니냐"고. 심지어 반전 성명을 발표해 간만에 찬사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병을 파병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의료병의 파병은 의미가 무척 크다고 봐요"라고 말할 땐 정말이지 아연실색할 지경이었다.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의료병은 탱크나 미사일로 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를 유린하는 침략군대가 아니라 말인가?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집령지에 들어가 미군이 주민들에게 식량과 약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침략군이 아니라 말인가? 과연 '인도적인 침략 군대'라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 정녕 이것이 맞다고 우길 셈인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폭격으로 인해 시정판에, 거리에 사람들의 주검이 즐비한 것이 지금 이라크 민중들의 현실이다. 병원에도 폭탄비가 쏟아질까 두려워, 썩어 들어가는 상처에 흐느끼며 병원에도 못 가는 참혹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5살 미만 어린이 120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엔의 경고는 이미 이라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미·영 침략군에 의료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퍼붓는 미·영 침략군의 폭격과 12년 동안 지속된 가혹한 경제제재가 이라크 민중들이 겪는 고통의 진정한 이유이지 않은가. 의료병이건 공병이건 무엇이건 간에, 침략전쟁의 지원원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지금 그 길을 향해 끝끝내 가려고 하고 있다.

침략 전쟁에 동조한 이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위치를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침략군의 일원을 자처하고서 집짓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인 양 치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다시 논의될 내일,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 국회를 향해 외칠 것이다. 전쟁을 도와 전쟁을 면할 수 없지 않은가. 진정 이라크의 민중들을 죽음의 늪에서 구하고 싶다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고 싶다면, 당장 전쟁을 중지시키는 데 힘써라.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들을 향해 '더 이상은 죽이지 말라'고 말하라. 그리고 약과 주사, 그리고 삼은 침략군에게 약세사리로 쥐어줄 것이 아니라, 진정 평화를 일굴 민간단체들과 유엔기구에 들려주어라.

(이주영 씨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1. 파병반대 물결 위 '파병동의안' 두동성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 국회 앞 파병저지 시위·연좌농성, 민족문학작가회의·문화예술단체 등도 '파병반대' 성명...여야,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합의(3.25)/ 국가인권위, "UN의 합법적 승인 거치지 않은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고 입장 밝혀(3.26)/ 미, 전쟁포로와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능력 추가 파병 요구(3.26)/ 대학생 30여명, 미대사관 진입 시도하다 연행...시민단체·민주노총, 파병동의안 찬성 의원 낙선운동 전개 천명(3.26)/ 국제민주연대 등 19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하고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적극 옹호(3.27)/ 민변·평화인권연대 등 13개 인권·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내 유엔뉴욕본부 선전영 한국대사의 "현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망언에 대해 사과 요구(3.28)/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결정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31일로 연기...국회 앞 600여명 파병저지 집회(3.28)/ 여야, 파병동의안 2일 노무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처리하기로 결정(3.30)

2. 전세는 '교착', 민간인 학살은 '파죽지세'
사담 후세인, TV연설서 '결사 항전' 촉구...이라크군 반격 본격화(3.24)/ 미군, 바그다드 향하던 선봉부대에 대한 이라크군 격렬 저항으로 '교착국면'(3.25)/ 이라크, 전쟁 7일 동안 민간인 1천여명 사망·5천여명 부상·40만여명 난민 발생했다고 밝혀(3.26)/ 미·영군, 악천후·보급선 불안·이라크 저항 '3중고'(3.26)/ 미국, 중장기전 대비해 10만여명 병력 다음달 추가 파병키로(3.29)/ 미 비밀정보기관, 후세인 대통령 등 이라크정부 요인 암살 위한 '더러운 작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3.29)/ 자살폭탄 공격 미군 4명 숨져...이라크, 추가 공격 예고(3.29)/ 미군 바그다드 공습으로 민간인 58명 사망(3.30)

3. 교육부, "정보 도둑은 안 잡겠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NEIS 시행 중단 불가' 입장 재확인(3.25)/ 학생 5명, 서울지방방법원에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해소송 제기...전교조·인권사회단체 대표단, 학생·학부모 정보입력 등의 거부서 1만8천여장 2차로 교육부에 전달(3.26)

4. 기타
정부, 이주노동자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필요에 따라 추방·유예 오라가라(3.25)/ 4·20장애인지원법제정추진공동기획단, 고 최옥란 씨 1주기 맞아 4월 20일 장애인들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의 날로 선포(3.26)/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 기자회견 열고 근로계약서 직업병 관련 전국 투쟁 조직해나갈 것이라 선포(3.27)/ 정부, 내년부터 3년 미만 불법체류자 대상 고용허가제 도입하기로(3.2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2일(수)

제 23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지난 달 19일 현대자동차의 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가해진 식칼테러로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폭로된 가운데, 1일 금속산업노동조합 연맹(아래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의 온상임을 입증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단체가 지난 10월부터 금속연맹 산하 52개 사업장의 직영노동자와 사내하청노동자 1천4백여 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내하청 노동자 8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하청업체가 아닌 사용업체(모기업)의 사용자 또는 정규직 사원이 작업지시를 내린다'고 응답했다. 특히 절강과 기계금속업체의 경우, '사용업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다'는 응답자가 각각 84.2%와 70.7%에 달했으며, 심지어 '출퇴근 관리를 사용업체에서 담당한다'는 응답도 무려 63.2%와 45%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박영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기획장은 "사내하청업체들이 도급계약을 가장해 사실상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단체와 함께 실태연구에 참여한 신원철 성공회대 연구교수도 "기업들은 사내하청을 합법적 도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내하청업체들은 독자적인 경영·인사관리 기능 등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채 도급을 가장하고 있는 불법파견업체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내하청은 불법적인 비정규고용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90년대 이후 사내하청을 통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급증은 직

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노동조합의 규제를 회피·약화시키려는 경영자들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며, 이러한 경영전략은 국가의 목인 하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국장도 "노동부가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야 마지못해 조사에 나서는 등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다시 시작된 수업, 웃음꽃 핀 에바다학교

복지관에 임시 동지 마련...구 재단측, 농아원생 수업 참가 막아

에바다학교에 모처럼만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3월 개학 첫날부터 때아닌 조기방학에 들어가는 등 파행을 겪어왔던 학교가 지난 31일 에바다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업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원 학교건물은 여전히 구 재단측 인사들에 의해 불법점거된 상태여서 복지관 한켠에 임시 동지를 틀 수밖에 없었지만, 교사와 학생들은 거의 1년5개월만에 제대로 된 수업이 처음으로 이뤄지자 모두들 감격했다. 이 자리에는 1년이 넘게 책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 수업을 받아왔던 해아래집 학생들은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배치를 보류했던 신입생 12명과 지난해 농아원쪽으로 통학했던 몇몇 학생들까지 총 24명의 학생들과 교사 15명 전원이 모두 모여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

신원철 교사는 "교실다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게 된 것도 기쁘지만, 원 에바다학교와 해아래집으로 나눠졌던 교사들 전원이 함께 모이게 된 것도 의미깊다"면서도 "구 재단측에 의해 복지관으로의 수업 참가를 제지당하고 있는 농아원 아이들도 하루빨리

이번 실태조사는 또 절반 이상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영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월평균임금은 직영정규직의 58.9%에 불과하며, 저임금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게 됨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무려 55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날 실태조사 발표에 참석한 박영규 금속연맹 부위원장은 "연맹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 문제를 전면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혜영)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렵사리 마련한 이 새 보금자리도 침탈의 위험 앞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몇 차례 있었던 해아래집 침탈사건처럼, 이번에도 구 재단측 인사들이 농아원생들을 동원해 경비가 허술한 복지관을 침탈, 폭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측이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 놓았지만, 그동안 폭력행위를 방조해 왔던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 줄지는 의문이다.

구 재단측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 역시 학교 정상화에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법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의사까지 고려도 묵살하면서 신입생 배치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복지관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적극 지지하다 막상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농아원생의 수업 결손'을 빌미로 학교측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교사는 "농아원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장본인은 아이들의 수업 참가를 가로막고 있는 구 재단측"이라며 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인권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급 이하 인권 위 직원들은 지난 28일 투표를 통해 직 장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을 직원조직 의 형태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올 해 초 직원조직 설립준비위를 결성, 각 과별로 대표를 뽑아 직원조직의 형태에 대해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인권위 노조가 인권위로부터 인정받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협의 회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노조'라는 명칭의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듯하다. 지난해 3월 이미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가 출범해 1년 넘게 활동을 전개해 왔고, 최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며, 노동부도 노조 명칭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가입대 상을 6급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급부터는 관리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박재범 정책기획국장은 "중앙부처의 5급은 평직원과 똑같고, 실제로 5급 이상에도 관리직 업무와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노조 가입대 상을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노조 가입률이나 활동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인권 위 5급 직원들도 조사관으로서 간부 라기보다는 사실상 실무자에 가깝다.

이에 따라 인권위 직원들의 노조 설 립 움직임에 대해 인권위 스스로가 분 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일단 박경서 인권위원은 "모든 인간은 집 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의해 인권위에 노조가 태동하려는 것 은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건설적인 노 조는 항상 (소속기관의) 창의력을 돕 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인권 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더욱더 가 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

를 부여하기도 했다.

물론 인권위원들 사이에 입장 차이 가 존재하겠지만, 인권위가 현행법과 정부방침을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는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시 해야 하 며, 기존의 법률과 정책이 반인권적일 경우에는 인권의 잣대로 적극적인 개 선 권고를 내려야 할 위치에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단지 인권위 노조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현 정 부에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라'고 적극 적인 정책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박 국장은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 이 중앙부처 공무원들 스스로가 노조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 기를 기대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노 조의 경우는 기존 법률의 한계를 뛰어

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 면, 중앙부처 노조의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권위 직원들은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몇몇 인권위 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거나 극도로 언급을 삼가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까지 노조 설립 추진 주체나 준비 정도가 견고하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수 없기에 실 제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 국민의 바람은 인권위 직 원들이 기존 반인권적 법률과 정책에 불복하고 자신들의 노동권을 스스로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일 게 다. 노무현 대통령이 침략전쟁을 지지 하고 파병방침을 결정한 상황에서 전 쟁반대·파병반대 성명을 먼저 발표함 으로서 인권위의 반전입장을 이끌어냈 던 인권위 직원들의 당당한 모습을 다 시 한번 기대한다. (범용)

<기자의 눈> '전쟁반대' 의견서 파문과 소신없는 인권위원의 행보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쟁 반대' 의견서를 내놓자, 조 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야당들은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론분열 을 선동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 했다. 정부와 야당도 인권위의 의견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와 같은 공세 때문인지 인권위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서를 폄 하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 상임위원은 라디오 인터뷰 중에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공병과 의무병의 파병에는 찬성한다"며 "전쟁반대"라는 위원회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제시해 진행자로부터 빈축을 샀다. 인권 위 직원들 중에도 이런 위원들의 무소신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 왔다. 한 직원은 "말이나 하지 말든지 스스로 인권위 위상에 딱질을 하는 위원 들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고까지 했다. 인권위원들 중 유일하게 위원장만이 정 차권이나 언론의 비판에 개의치 않는다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전쟁 반대' 의견서가 발표되자 지금까지 인권위를 비판하던 분위기였 던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인권위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고, 심지어 는 "인권위원들을 존경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지금까지 인권위에 대해 비 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19개 인권단체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권위 가 현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옹호기관 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밝 히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서가 발표 되기 이전 홈페이지에 전쟁·파병 반대 성명서를 게시했던 직원들도 자신들 의 성명서를 위원회 의견서로 대체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러 한 지지가 무색할 정도로 위원들의 무소신 발언들이 이어진 것이다.

결국 '인권위가 마땅히 할 일을 했고 할 말을 했다'는 모처럼의 지지와 옹호 는 인권위의 위상도 제대로 모르는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탄죽질기에 겁먹은 인권위원들의 무소신 행보에 의해 빛이 바랬다. 앞으로 인권위가 정치권의 눈치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을 확실히 밀고 나가면서 자신 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런 대목이다. (박래군)

이달의 인권 (2003년 3월)

흐름과 쟁점

1. 들불처럼 번져간 함성, "전쟁반대, 파병 반대"

미국이 유엔안보리 표결을 포기하고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이라크 침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40여개 시민· 사회단체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침략 움직임을 강력 규탄하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했 다(3.18).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정부의 파 병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19).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반전평화 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시작됐다(3.20). 이에 사회 각계 각 층에서 전쟁중단과 파병반대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반전·파병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파병반대 목소리에 동참하는 국회의원 들도 늘어나면서 국회는 파병동의안 처리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3.25, 28). 국 회의원 전원이 모여 파병동의안에 관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 되면서(3.28~29), 결국 파병동의안 처리는 4월 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국가기구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 전 쟁에 반대 의견을 밝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제 목소리를 냈다(3.26).

2. NEIS 불복종운동,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나섰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하자 NEIS 정보입력을 거부하 는 등 교사들의 불복종 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교조 교사 30여 명은 NEIS 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에 들어갔다(3.3). 전교조 는 또 NEIS 강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 판단을 문겠다는 입장을 밝 히고, 1차로 자신의 신상정보의 NEIS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학생의 서명서 2만1천장을 모아서 공개한 후 교육부에 전달했다(3.17). 그러나 윤덕 흥 교육부총리는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NEIS 시행중단은 교육행정 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며 중단 불가 입장을 밝혔다(3.25). 교육부의 강행에 맞서 학생 5명은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 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며 손해소송을 제기했다(3.26).

3.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노동법 개정으로 뿌리뽑자!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 에 대한 손배·가압류' 조항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 당, 민변은 현행 노동법을 대폭 수정,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3.5). 또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장관의 직접 중재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모두 취하하고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도 40%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결국 타결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노동법 개정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3.12).

4. "교육시장개방, 교육 상품화와 불평등 불러온다"

3월말 정부의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교육시장개방이 물고 울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는 정부의 양허안 제출 중단과 교 육개방의 종합적 제검토 등을 주장하며 '교육개방 저지 시국선언'을 발표했고(3.6), '교육개방반대 세계행동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도 교육개방 저지 와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행사가 개최됐다(3.13). 교육개방 반대의 목소 리는 범국민 대회까지 이어졌다(3.15). 그러나 결국 정부는 1차 WTO 양허 안에 성인교육과 대학부분의 시장 개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3.28).

논평

- 인권위원 실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건가 (3.8)
-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3.15)
-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질서의 도래 (3.22)
- 우리 아이들이 겪는 '전쟁'에도 'No'라고 말하 자 (3.29)

인권이야기

- 김정아 - 르레방 인순 언니 (3.4)
- 한상희 - NEIS, 그 국가감시의 폭력 (3.11)
- 김해진 - 나의 '동지'들 (3.18)
- 이창호 - 이라크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3.25)

인권정보자료

- '서준식의 생각', (3.7)
- '2002 검열백서', (3.14)
- '나는 평화를 꿈꾸요', (3.21)
- '성적 소수자의 인권', (3.28)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 (3.12)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 (3.19)
- 8개월만에 나온 '7기제 교사 차별말라' 권고 (3.26)

특집 1 - 인권운동사랑방 10월

-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바란다 (3.5)
- 활동가들의 다짐 -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 운동의' 깃대를 세운다 (3.5)

특집 2 - 3·8 세계 여성의 날

-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얹어매는 빈곤과 차별 의 눈 (3.6)
-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 의 연장 (3.7)
- ③ 여성과 장애: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역량이 낳 는 잔혹한 일상 (3.8)

연재 -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 만 (3.22)
-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 기: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 (3.29)

기획 -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3.2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3일(목)

제 23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성명>

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끝내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점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과 평화, 정의는 손쉽게 '명분론'이라 치부된 채 휴지통에 내던져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전범국가 '대한민국'이 결국 약속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라크 아이들의 희생과 미국의 지배력 아래 예측된 한반도의 허울뿐인 평화를 맞교환해, 유치하게 될 외국인 투자인가? 점령군의 일원으로서 얻게 될 석유에 대한 이권인가? 그들이 세련되게 말하는 '국익'이란, 악육강식의 정글에서 포악한 사자의 친위대 노릇을 함으로써 손에 쥘 안전과 먹이감에 다름 아니다.

2003년 4월 2일, 이 날을 우리의 역사는 치욕스런 날로 기록할 것이다. 세계의 양심들은 대한민국을 강대국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더러운 국가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헌법이 부인하는 침략 전쟁이 '국익'이란 이름으로 지지되는 현실 앞에 이 땅의 민중들은 한동안 심각한 '자 기분열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역사 속에서 인권과 평화, 정의는 거저 주어진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회가 헌법이 옹호하는 가치를 부정한 이상, 평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의사를 묵살한 이상, 국회의 파병 결정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죄 없는 이라크 민중들의 죽음과 패배가 곧 침략군의 일원,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는 비참한 시나리오를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할 때, 우리 역시 침략전쟁에 가담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역사적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 4. 2.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국회가 기어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학살자의 일원이 되길 자처했다. 2일 오후 5시 20분, 박관용 국회의장이 파병안 가결을 외치며 의사봉을 내려치던 순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로, 이라크와 세계인의 가슴에는 한국이 이라크 침략을 결정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전 10시 파병안 처리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로 시작된 이날 본회의는 여야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3시 다시 속개, 2시간 여의 토론 발언을 거친 후 결국 정부 원안대로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70명 가운데 2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이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만간 건설공병 600여명과 의료병 100여명이 침략군의 일원으로 이라크로 투입, 기지 건설 지원과 전후 복구사업 등을 벌이게 됐다. 한편 의료병만 파병하지는 김경재 의원 외 29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44표, 반대 198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박세환 의원의 파병결정 진실 고백

토론자로 나선 8명의 의원들 가운데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파병을 선택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 의원은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자랑하면서 크게 세가지의 파병 찬성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우리를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미국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전투병을 보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곳도 미국뿐"이므로 "한미동맹 지속비용으로 생각하고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 둘째 "6·25전쟁이 일본을 부강하게 하고, 월남전이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해 주었듯, 우리도 파병을 통해 전후 복구'사업'에 필히 참여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며, 걸프전 때처럼 파병의 적시성이 부족하고 원거리에 배치된 것을 이유로 전후 중동 건설수주에서 밀려났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중동으로부터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석유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것. 덧붙여 박 의원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라크에서의 실전 경험은 우리 군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 외국과의 연합작전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인 만큼 비전투병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해 전투병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은 거짓말

한편,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자리를 뜨거나 졸거나 잠담을 나눠 토론이 단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 또 발언을 듣는 동안이나 투표표를 하는 순간에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는 자의 표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밝고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이 '기꺼이' 파병을 선택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한 오전 9시 50분경부터 파병동의안 처리를 지지하려는 1천5백여 시위대의 국회진입 시도가 이뤄졌다. 시위에는 전날부터 밤샘농성을 벌여온 여중생 범대위와 전쟁반대평

화실현공동실천의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학생, 시민들이 참여해 국회의 파병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오후 1시 30분경, 시위대는 기습적으로 국회 정문 20미터 앞까지 진출, 도로를 점거하고 다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대학생 1천여 명도 동맹휴업을 결의, 국회 앞으로 달려왔으며, 이어 교수·학생 결의대회도 열렸다. 사발한 영화감독, 차도르를 쓴 여성, 기타를 든 음악인 등도 한 목소리로 "전쟁중단, 파병반대"를 소리높여 외쳤다.

'더러운 선택'에 대한 분노와 규탄

마침내 오후 5시 20분경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시위대는 "오늘은 전범국 국민 된 슬프고도 분통이 터지는 날"이라며 대오를 가로막고 있는 전경차량을 밀고 국회진입을 시도하며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이라크 어린이의 사진을 부여잡고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시위대는 저녁 8시까지 규탄집회를 계속하며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이후 전쟁반대와 파병 중단을 위한 직접행동은 4월 4일 학생행동의 날, 4월 11일 한총련 동맹휴업, 4월 12일 범국민 결의대회 등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배경내/고근예)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제주 4·3항쟁(아래 4.3)이 55돌을 맞았다. 3일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였음을 인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차원에서 채택되기도 해 4·3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4·3의 온전한 역사적 의미가 복원되고 과거와 같은 대규모 인권유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아야 할 산은 많다.

우익세력들의 마지막 발악

우선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이나 보고서 채택 이후 가해지고 있는 우익세력들의 압력은 4·3의 온전한 복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4.3진상보고서는 4·3특별법에 따라 2001년 1월 구성된 4·3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이 2년여의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미군정하의 군·경 토벌대와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음을 밝혀낸 소중한 성과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된 희생자의 수만 해도 1만4천여 명에 이르고, 미확인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희생자 수는 2만5천~3만 명에 이른다. 이중 78% 정도가 군·경 토벌대에 의해 이뤄졌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민간인 학살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가혹히 탄압하라"는 명령에 의해 이뤄졌고, 미군도 진압작전에 개입했음을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김점근 진상규명 위원(경희대 명예교수)이 '보고서의 좌편향'을 지적하며

사퇴하는 한편, 보고서 채택 이후에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나서 "진상규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보고서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우익세력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우익단체인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모임도 신문광고를 통해 "4.3은 공산무장폭동"이었다며 "살인자들을 희생자라며 명예회복을 시키겠다"는 정부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정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정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인권위는 "정보법 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에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개리리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97년 정보법이 제정된 이후, 인터넷을 포함해 '동성애'와 관련한 출판 및 간행물·영화·방송 등 모든 매체가 각종 심의기구의 통제를 받아왔고, 그에 따라 이 자의적 기준에 대한 비판 역시 커져왔다. 실제로 피시방 등에 강제로 설치돼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막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역시 이 심의기준을 근거로 한다.

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 총리 역시 보고서 채택 당시, '향후 6개월간 추가사실이 발견될 시 수정할 수 있다'는 유보 단서를 달아 보고서의 최종 채택을 미루는 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작성기획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김순태 교수(방송대 법학)는 "이제는 고 총리가 보수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면서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4.3관련 공식 사과를 내년으로 미루도록 한 것도 고 총리의 작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고 총리의 위령제 참(2면에 계속)

한국동성애자인권연합의 박수진 활동가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그동안 있었던 정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도 성명을 통해 "동성애는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라는 어이없는 조항 한 줄을 없애기 위해 오랜 시간 벌여온 투쟁이 이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온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모두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에 따라 이 심의기준의 개정을 언급해 왔던 정보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과연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위 보호기준과 이주현 사무관은 "단순히 동성애라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기준의 개정은 정보법 개정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개정이 늦어지는 만큼, 유해성을 판단하는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근에)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청송보호감호소는 흉악범들의 소굴이다." 우리 사회가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다. 그러나 실상도 그럴까?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에 부과된다. 대상 범죄로는 절도, 사기, 폭력을 비롯해 강간, 강도상해, 약취, 살인 등이 폭 넓게 망라돼있다.

하지만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사람의 절대 다수는 단순절도범이다. 2001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는 피감호자의 76%가 절도사범임을 확인해 준다. 강도 7.9%, 폭력 5.9%, 사기 3.0%가 그 뒤를 이었고, 흔히 흉악범이라 불리는 강간과 살인은 각각 2.0%와 0.8%에 그쳤다. 법 시행 20년동안, 절도범들이 피감호자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통계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주목을 끄는 또 하나의 사실은 피감호자들의 대다수가 학력이 낮은 빈곤계층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학이 21.9%인 것을 비롯해 초졸이 40.3%, 중졸이 25.4%에 달했다. 이에 반해 대졸은 0.4%에 불과하다. 이들의 가정형편이 사회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피감호자들의 대다수가 빈곤계층 출신으로 범죄성향 역시 '좁도둑들', 즉 '빈곤범죄자'들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0년 현재 피감호자들의 재범율은 35.5%, 피감호자들의 과반수는 6명 이상의 전과자들이다. 피감호자들의 대다수가 몸종이 하나밖에 없는 형편에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보호감호로 인한 장기수용으로 사회적응력마저 저하된 상태로 출소하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빈곤은 개개인의 부도덕함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낳는 필연적 병폐이며, 따라서 그 해결 역시 사회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모든 문제를 소외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보호감호라는

굴레를 하나 더 덧씌우고 있다. 결국 사회보호법은 빈곤계층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해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나뉜다. 보호감호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에게 부과돼 7년의 기간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된다. 심신장애자 및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치료감호가 부과된다. 매해 2백여 명에게 부과되는 치료감호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집행되는데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보호감호와 치료감호가 가중료된 이들에게는 보호관찰이 기다리고 있다. 보호관찰은 가출소 후 3년간 일상생활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유해정)

(비면에서 계속)석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교수는 "향후 6개월간 민간인 희생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는 증거 외에 나올 게 있겠냐"며 보고서 내용의 후퇴 가능성을 부정하면서도 "6개월 유보나 정부의 사과 연기 등이 모든 일은 궁지에 몰린 보수기득권 세력의 마지막 발악인 셈"이라고 평했다.

4.3 보고서, 모호한 타협의 산물

보고서 자체가 가진 한계도 있다. 관련 전문가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제주의 유족들과 4.3관련 단체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은 이번 보고서는 막판 심의과정에서 학살자측을 대변하는 위원들에 의해 주요 용어들이 수정되면서 '조직적인 국가범죄'로서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다.

예초 초안에 쓰여졌던 '집단살상'이라는 용어는 '집단인명희생'으로, '초도화 작전'이라는 용어는 '강경진압작전'으로 변경되는 등 내용상의 후퇴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승 교수(국민대 법학)는 "강경진압이라는 말은 국가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의미할 뿐, 국가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힘들다"며 "당시 비

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억울한 인명피해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범죄였음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정심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은 "4.3특별법 자체에 한계가 내장되어 있지만, 이번 보고서 역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마치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것인 양 해석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양 연구원은 "4.3을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수난의 역사'로만 바라볼 뿐, 당시 미군정과 경찰 등 부당한 권력의 탄압에 저항했던 '항쟁의 역사'로서는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4.3의 온전한 진실을 드러내지 못했다"며 "지금의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 당시 4.3항쟁의 주체들보다는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처럼 4.3을 단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만 규정해서는 4.3의 온전한 역사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전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4.3관련 단체들이 지적하듯, 4.3진상보고서의 채택이 '반세기 넘게 제주도민을 짓눌러왔던 4.3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 "내년 위령제에는 꼭 참석하겠다",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공식 사과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국가차원의 재발방지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가폭력을 제어하는 물꼬가 될 것임도 틀림없다. 그러나 4.3이 광주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4.3을 제주만의 것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수난의 역사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4.3 진상보고서의 채택은 100만이 희생된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학살 문제를 푸는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김 교수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33일간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을 마치고 국회를 향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가 있다. 이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 역시 4.3의 온전한 복원과 함께 가야 할 길이다. (배경내)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29일 4·3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진상조사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4·3일지, 참고문헌, 토벌대·무장대 조직표 등이 수록된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6개월간의 수정 기간 설정으로 추후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의 핵심인 '조사결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 4·3사건은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 4·3사건의 정의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 발발 원인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긴장상황이 있었고, 이후 외지 출신 도지사에게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봉, 테러, 고문치사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에서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남로당의 개입과 역할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선거관리위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 조직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이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희생자의 수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만4028명이나, 이 숫자를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인명 피해를 2만5천~3만 명으로 추정했다.

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만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천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 가해별 통계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 (1만955명), 무장대 12.6% (1764명), 공안 9% (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된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여성의 희생(21.3%·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 무장대에 의한 피해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다.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4면에 계속)

(3면에서 이어짐)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 서북청년단의 개입과 역할

서청 단원들은 '4·3' 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 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 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을 용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 강경 진압작전에 의한 피해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 마을을 초도화시킨 강경 진압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 집단피해 마을

9연대에 이어 제주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즉결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주민 집단살상사건인 '복춘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곳에 이른다.

◎ 군법회의의 적법성 여부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사건 군법회의'는 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이틀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재판 정황을 볼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계엄령의 집행 문제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정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 테두리를 이탈했음을 지적한다. 계엄령 하에서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이 빈번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군지휘관들조차 계엄령을 잘 알지 못했다.

◎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

중산간마을 초도화 등의 강경 작전을 펼친 9연대장과 2연대장에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받긴색원해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 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해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 미군의 개입 범위와 역할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교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은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고,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계속 보유하였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경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마을을 초도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교문단장 로버트 준장이 송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

◎ 연좌제 피해

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4·3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

동을 제약받았다.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되었지만,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48년 제주섬은 (당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

◎ 조사의 한계

이 조사는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 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이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대정부 건의문

1. 진상보고서에 규명된 내용에 따라 제주도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 추모기념일을 지정해 역울한 닛을 위 무하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3.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평화와 인권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추모공원인 '4·3 평화공원' 조성예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생활이 어려운 4·3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6.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원하고, 유해 발굴절차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존엄성과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을 충분히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
7. 진상규명사업과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 다음 하루소식은 4월 8일자로 찾아갑니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초등학교 인권교육, 이렇게 해봐요 - 『애들아, 인권공부 하자』

엮은 이: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펴낸 곳: 사람생각/ 2003년/ 345쪽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담은 교재를 출간했다. 그동안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교사들에게 이 책은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실천적인 실무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차별금지, 생명권, 인간다운 삶, 노동권, 교육·문화권,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프라이버시권 등 각각의 권리에 대해 교사들이 쉽게 개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인권교육방법론은 아이들이 인권침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익혀야 할 지식과 가치는 물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 책에는 수업 진행시 필요한 교육자료로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읽을거리와 시청각 교재가 담겨있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과 보충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실고 있다. 하지만 권리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피해 사례를 통해 제시하려 한 점이나 아이들의 행동능력을 기르겠다는 애초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98년 결성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은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임을 재확인하면서 인권교육이 아이들과 교육자, 아이들과 아이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은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제도 문제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난 3일 청와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하고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를 시범 실시하는 민주당 방안이 사실상 합의해 줌에 따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당초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공언해 온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처럼 후퇴한 데는 경제 5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제계의 압력에 굴복해 시급한 인권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인권·노동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시킨 데 대해 “국내외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주노동자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즉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 같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이 전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난 28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고용허가제 방안 따르면,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도입, 알선,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국가가 제시한 이주노동자 풀(pool) 가운데 사업주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하

고 근로계약은 해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이동을 허용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이러한 고용허가제 방안은 사실상 현행 연수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쌍무협정으로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송출·유입하도록 하면 필연적으로 중간 브로커들이 양산되고 그에 따라 송출비리 문제도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년마다 갱신되는 근로계약 역시 사측의 일방적 노동조건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덧붙였다.

지난 6일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 폐지”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도입 역시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연수생제도의 즉각 폐지와 함께 △이주노동자와 한국 정부가 송출·유입의 주체가 되고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의 주체로 인정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혜영)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미 절반 이상의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모든 통신행위에 명찰을 붙이려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걸머지는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

행될 것”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합의하고 발전시켜 왔던 인권의 원칙들을 대폭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인터넷 실명제로 사전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의 정철중 사무관은 “민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의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청와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도입을 위한 실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내)

● 김철준의 인권이야기 ●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군사패권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설마’하는 심정을 버리지 못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반전여론이 들끓고, 많은 반전운동가들이 인간방패가 되어 이라크를 감싸고 있는데 설마 그곳을 폭격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국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버렸다며 발가벗어도 미국은 막무가내로 전쟁만을 고집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를 차지하며, 군사벨트를 건설하겠다는 욕망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를 더 전율케 하는 것은 인권국가라 자임하던 미국과 영국 국민들이 전쟁의 잔혹함을 지켜보면서도 압도적으로 전쟁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자 교훈이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비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마’하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마저도 정부정책이나 외교전략만을 논할 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반전평화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재야단체가 벌여온 소파개정운동이나 반미운동은 촛불추모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여성평화단체와 인권단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폭을 넓혀왔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릴 가로막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에 젖어 반전을 외치면서도 반미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패배주의에 갇혀서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면서도 파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온 국민으로 하여금 미국의 이라크침략이 남긴 인권침해의 참상을 똑똑히 보게 하고,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해야 한다.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문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들을 아울러 모든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하는 반전포럼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온몸으로 전쟁을 막아낼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두려웠던 경제적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라크의 참혹한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철준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1. 국회의 '더러운 선택'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파병반대 기자회견·농성 이어져 (4.1)/ 노 대통령, 국회 표결 앞서 국정연설에서 파병안 통과 설득...국회, 찬성 179표 반대 68표로 파병동의안 통과시켜 (4.2)/ 파병안 통과되자 인권·사회단체들 일제히 규탄성명 발표...국회 앞에서도 거센 항의시위 이어져 (4.2)/ 국방부, 공병 566명과 의료병 100명 지원 받아 파병키로...이 가운데 경계병력 60명은 특전사 요원 중 차출 (4.2)/ 참여연대·민변,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4.3)

2. 이라크는 '미' 민간인학살 전시장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중부 나자프 9번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미군의 민간차량 포격으로 어린이·여성 10명 숨졌다고 보도 (3.31)/ 저스틴 휴스턴-로버츠 영국군 자문변호사, 참전중인 병사 2명이 민간인 희생 이유로 전투 거부해 귀국조치 됐다고 밝혀 (3.31)/ 미 국방부, 필요할 경우 이라크 민간인 30일 구금 허용 (4.1)/ <로이터통신>, 미 미사일이 병원들 민간시설 폭격해 25명 이상 다쳤다고 보도...이라크쪽, 침략이후 민간인 653명이 숨지고 4800명 가량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 (4.2)/ 미군, 민간인 인명피해 큰 신행 집중탄 사용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 (4.2)

3. 아직도 잠들지 못한 남도
노 대통령, 4·3 관련 정부입장 표명 1년 유보키로...한나라당·자민련, 4·3 정부보고서 진상규명 미흡하다며 공격 (3.31)/ 주미에 의원, 대통령 사과 유보 결정에 대해 약속 이행 촉구 (4.1)/ 노 대통령, 총리실에 4·3 유사 사건 처리 및 해결방안 연구·검토 지시 (4.2)/ 4·3 55돌 맞아 고건 총리 등 정부대표 다수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 열려 (4.3)

4. 교육부 '징계' 위협, NEIS 저지운동 암초 되려나
교육부, 'NEIS 시행지시·WTO교육개방 반대 전국교사대회' 참석한 교사 1800여명 징계 검토 (3.31)/ 교육부, 학생질병기록과 학부모 직업항목 등 입력대상에서 제외한 뒤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혀 (4.1)/ 전교조,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통해 NEIS 강행 저지키로 (4.2)

5. 기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 열고 초등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훈련 전면 금지키로 (4.1)/ 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 삭제' 권고 (4.2)/ 검찰,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한 검사와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김아무개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 (4.1)/ 강법무장관, 한총련 수배자 자수 땀 불구속수사 할 수 있다고 밝혀...준법서약제 폐지방침도 재확인 (4.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반전평화 불꽃, 다시 지핀다

귀국한 반전평화팀 9인, 명동성당 노상농성 돌입

"당신은 묻는다. 전쟁이 터졌고, 한국군 파병안도 통과됐다. 반전운동은 무의미한 행동일 뿐이다. 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왜 하냐고 묻는다. 나는 한가지만 말하겠다. 이 시기, 추악한 전쟁에 맞서 이 농성장에 앉아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8일 노상 농성에 들어간 은국 씨의 글이다. 이날 오후 2시, 은국 씨를 포함해 이라크 바그다드와 요르단 암만에서 반전평화활동을 벌이고 귀국한 허혜경, 오김숙이, 임영신 씨 등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9명은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여 '한국군 파병 저지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중단'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성당측의 반대로 천막을 치지 못한 채 노상 농성에 들어갔지만, 이들의 의지는 결연했다. 이들은 명동성당 농성장을 중심으로 현재 이라크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량학살행위와 한국군 파병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농성을 시작한다"는 오김숙이 씨는 한국군 파병이 결정되고 난 뒤, 확산되던 반전평화의 기운이 움츠러드는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오김숙이 씨는 "농성은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이라며 농성에 돌입하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한편, "이제는 실제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농성과 함께 이라크 민중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이라크에서 귀국, 농성에 동참한 임영신 씨는

"반전평화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시민·사회·의료단체 등과 나누고 이라크 민중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씨는 이러한 지원활동이 현재 미국과 유엔이 벌이고 있는 구호활동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했다. 임 씨는 "이라크의 정수시설에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투하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미네랄 워터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미국의 전쟁과 미국의 구호, 그 양면을

사회원로·각계인사 550명,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는 민주주의 시금석"

이르면 이달 중순께 새 정부의 양심수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원로들과 각계인사들이 직접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함세웅 신부, 민주노총의 유덕상 부위원장, 전국민중연대의 오종렬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공동대표 등 6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사회원로와 각계인사 5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는 새로운 사회는 오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전 시절의 잘못된 법과 과도한 적용으로 고통받은 양심수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3일 현재 민가협 통계에 따르면,

특바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난민캠프에 이라크 난민이 적은 현실을 꼬집으며 "고작 난민캠프를 만들어 놓고 전쟁이 터진 이후에 난민을 기다리는 식의 유엔 활동이 과연 이라크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임 씨는 "작지만 우리가 나누는 약 한 알과 빵 한 조각이 '이라크 민중 스스로의 재건'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 매일 저녁 7시 명동성당 들머리 반전평화 촛불집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임과 병역거부자 후원모임인 '전쟁없는 세상'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농성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근에)

양심수는 미결수를 포함하여 모두 45명, 정치수배자는 17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양심수 명단에는 1,100명이 넘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양심수 사면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향방 역시 주목된다. 민가협 집계 양심수의 약 50%, 정치수배자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 혹은 수배 중인 상태라는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양심수와 정치수배자 없는 세상'이 요원함을 증명한다.

그러나 최근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닌 대체입법' 입장을 밝힌 강 법무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 하에서도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이 계속 양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은 "유사입법은 또 하나의 인권 침해를 가져올 뿐"이라며 "이번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배 해제를 통해 확실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근에)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의록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인권위가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법원에다 이창수 대표가 인권위에서 한달 가장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원고(새사회연대)의 대표자인 이창수가 장기간 부재하면서도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서류(준비서면)를 제출했다. 특히 16일부터는 이 대표가 거의 혼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새사회연대는 서류상의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역설했다.

인권위가 문제삼은 농성은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해동 등, 아래 학살규명위) 관계자들이 인권위 휴게실을 점거한 것을 가리킨다. 학살규명위는 피학살 유족, 관련 학자, 사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창수 대표는 여기서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인권단체가 중대한 인권현안을 해결하고자 장기간 농성을 하며 사무실을 비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인권위가 자신의 비공개 관행에 쐬기를 박으려는 한 인권단체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인권위는 새사회연대가 제기한 소송이 "개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단체를 모독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오영경 씨는 "인권위가 인권단체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준비서면으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 이하"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나 인권위 소송수행자 윤명석 사무관(행정지원국 법무담당관실)은 "재판부에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이창수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어느 정도 의구심이 들어 해당 준비서면을 냈던 것"이라며, "이는 (새사회연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소송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지휘는 판사가 한다"면서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는 별개"라고 덧붙혔다.

결국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새사회연대의 당사자 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소송기술적'인 부분으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윤 사무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나'는 물음에 대해 윤 사무관은 "소송수행자의 입장

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집요하게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나 아니냐' 물어보면 안 된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회의록 공개와 민간인학살 농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동일하게 바라봤다는 것 자체가 소송기술적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농성으로 눈 밖에 난 단체에 대해 인권위가 소송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흠집내기'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준비서면 때문에 인권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범용)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한 갈등을 빚고 있는 NEIS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교육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오는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을 선포한 가운데 열린 만큼,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청문회에는 교육부와 교원·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발표자 10명이 참석, NEIS 시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한국교총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반대론자들은 인권침해와 국민통제의 위험성을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찬성 측으로 참석한 오양호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NEIS가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라고 대응했다. 보안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전산원의 신상철 국가정보화센터 단장은 "NEIS는 최상급의 보안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네트워킹센터 황규만 기술국장은 최근의 해킹사태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어떤 보안기술도 100%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은 더욱 쉽다"고 반박했다. 또 황 기술국장은 "정보유출 위험도는 정보의 가치와 규모에 비례한다"면서, 학교별로 수집·관리해 온 정보들을 NEIS로 집중시킴으로써 정보유출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한 방청객이 "NEIS 정보입력 동의거부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이 이미 10만 명에 이르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묻자, 교육부 김정기 교육정보화기획관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답해, 수많은 학부모들의 반대여파는 교육부의 고려사항이 아님을 그대로 드러냈다.

팽팽한 대결 속에 진행된 청문회가 끝난 후 인터뷰에 응한 박경서 인권위원은 "오는 14일에 정책소위를 열어 정책권고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권고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부가 인권침해를 야기할 정보항목을 대거 포함한 채로 오는 11일 NEIS 강행을 발표한 만큼, 인권위가 더 이상 판단을 늦추서는 안 되며, 대립하는 입장들에 대한 정치적 중재안이 아니라 인권적 원칙에 근거한 권고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명의 조선업종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달 3일 현대중공업 권혁일 씨에 이어 6일 현대중공업 박주법 씨, 26일 현대삼호중공업 김재원 씨 그리고 이달 4일 STX조선 김중숙 씨와 7일 한국메이드사(현대삼호중공업내 하도급업체) 이기성 씨. 이들은 모두 추락하는 탓에 놀러, 혹은 육중한 석분에 꺼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노조)은 7일 성명을 내고, 안전장치를 무시한 채 노동감도만 강화해 온 사용자와 이를 방제한 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무리한 1인 1조 작업이 어느 사업장을 막론하고 횡행하고 있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일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이창길 산업안전국장은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은 노동감도의 강화"라고 잘라 말한다. 이 국장은 "사용자 측에서 기본 생산비용을 줄이고자 과거 2인 1조로 했던 작업을 지금은 모두 1인 1조로 변경시켰다"며, "1인 1조 작업은 안전사고를 불러 올 뿐 아니라, 사고 후에도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고를 증언할 증인조차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26일 고소차(리프트)작업 중에 사망한 삼호중공업 김재원 씨도 고소차에서 혼자서 용접과 운전을 병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다.

금속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 역시 "노동감도가 강화되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작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맨홀 작업이나 블록내부 탱크, 배관 속에서 가스용접을 할 때, 혼자서 작업하는 사람이 가스에 질식했는지 어쩐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무리한 1인 1조 작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사측에 '2인 1조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이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아서 원시적인 사고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박 국장은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신종 직업병을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죽는 일은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

2003년 4월 10일(목)

제 23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산하 조선업재해예방팀 송태용 대리는 "년간 계획 속에 재해예방 홍보를 하고 있지만, 수천·수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20개 사업장을 5명의 재해예방팀원이 점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놴다. 송 대리는 "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재해예방팀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이는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창원지방노동사무소 변원수 감독관은 "조만간 전문가와 함께 특별감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조선소 노동자에게 드리워진 중대 산업재해,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 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고근에)

알림

하루소식 지로 납부는 매달 10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침략전쟁 개시 이후, 미군은 이라크에서 민간인 학살에 이어 외신기자들의 숙소와 알자지라 TV지국까지 폭격하는 등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국내에서도 또 다른 인권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 갈수록 폭력화되는 경찰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경찰이 반전 시위대를 향해 고무총탄과 사과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AP통신에 따르면, 오클랜드 항구의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선박회사 앞에서 평화적 피켓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고무총탄을 발포, 시위대 10여명과 이를 지켜보던 부두노동자 6명이 크게 다쳤다. 심지어 수십 대의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달아나는 시위군중을 향해 최루가스나 파편을 분출하는 사과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당시 시위의 대상이 된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라는 회사는 최근 이라크 움카스르 항구로의 운항 계약으로 4백8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일자 <알자지라> 영문판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18명이 구금됐고, 전쟁 발발 후 첫 이틀간 이 도시에서 체포된 인원은 2천 여명에 달한다. 7일 뉴욕에서도 군수산업체인 '칼라일' 건물 앞에서 "칼라일은 전쟁으로 자신을 살찌우고 있다"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수십 명이 체포됐다.

◎ 재갈 물린 표현의 자유

'덕시 칙스'에 이어 반전 발언을 한 라그럽 '필 잼'도 미국인들의 거센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필 잼'의 리드싱어 에디 베퍼는 지난 1일 덴버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반전 발언과 함께 "부시는 리더가 아니라 텍사스 리거"라는 내용의 'Riot Act'를 부른 후 마이크 스탠드에 부시 대통령의 가면을 꽂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에 분노한 수십 명의 팬들이 퇴장했고, 이후 필 잼의 홈페이지도 비난과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글들로 불타고 있다. 자신을 '자랑스런 양키'라고 부른 한 미국인은

"닥치고 노래나 불러라. 아니면 수잔 서랜든, 손 팬 등과 함께 이 땅을 떠나라"고 폭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지난달 부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과 방송 중단, 음반 화형식의 대상이 됐던 '덕시 칙스'는 지금도 엄청난 협박 메일에 시달리고 있다. 내달 1일 그린빌에서 열리기로 한 콘서트도 항의집회 예정으로 취소됐으며, 발언의 주인공 나탈리 메인은 권총을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사재판 앞둔 미군 병역거부자

이라크전에 반대해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한 미군이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스티븐 이글

핑크라는 이름의 이 20세 청년은 "이번 전쟁은 부도덕하며 위선적"이라며 지난 1일 군복무 중단을 선언했다.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말 군에 자원했던 핑크는 12주간 훈련을 받는 동안 매일 "죽어! 죽어!"를 외치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 하원에 제출된 유엔 탈퇴 법안

강력한 자유시장 주창자인 론 폴 하원의원(자유당)이 지난달 13일 "유엔은 미국민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서 유엔 탈퇴를 위한 '2003 미 주권 회복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9년에도 제출됐다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제출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져 있는 상태다. 현재 미국이 유엔을 대하는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의 제출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 (배경내)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5월 23일이면 제7회 인권영화제가 개막된다. 작년처럼 서울아트시네마와 광화문의 아트큐브 두 곳의 극장에서 6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의 주요한 테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30만을 넘어섰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지만, 정부와 자본은 이들을 임시방편의 "싼 노동력"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싸워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 없는 '고용허가제 시범실시' 방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또 올해는 1990년 채택, 올해 초 발효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한국정부가 가입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의 사슬을 끊고 이들의 인권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그들의 권리를 영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상영이 확정된 작품은 현재까지 3편. 네덜란드 의료시설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남아공 간호사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다룬 <모험 Adventure>과 20세기초부터 미국 멕시코인 이민사를 드라마로 엮은 <도시 The city>, 그리고 정치·경제적 난민들이 런던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삶의 고단함을 런던의 숙박시설 B&B를 통해 살펴보는 <방이 없어요 Sorry No Vacancies> 등이다. 2-3편이 더 추가될 예정이며 국내이주노동자에 대한 작품도 포함될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상영이 확정된 작품은 모두 10편이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를 기소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파트리시오 구스만의 <피노체트 재판 Pinochet case>과 1960년대 브라질의 시네마 노보 운동을 실천했던 영화 <20년 후 Twenty years later> 등 주제와 스타일 역시 다양하다.

또한 한국영화 출품이 지난달 31일 마감돼 총 21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 작품들은 여러 심사 단계를 거쳐 이 달 말경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11일(금)

제 23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새 정부의 첫 양심수 사면이 이달 중순경에 예정된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1백여 명을 이번 양심수 석방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면, 징집과 병역의무, 전쟁과 무장충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마땅히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사면·복권과 대체복무제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입대 후 징역을 거부,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병역거부자 가운데 이미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양심수 2백52명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군사법정에서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민간법정의 병역거부자는 물론 항명죄로 군사법정에 선 병역거부자들 모두에게 1년 6개월형이 선고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거 3년형을 받고 이미 1년 6개월 이상을 감옥에서 지낸 병역거부자를 형평상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한 임종인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그간 사회일각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병역거부자가 양심수냐'는 문제에 대해 "자신

의 종교 혹은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양심수"라고 설명하면서 "민주화운동에 한해서만 양심수라고 보는 것은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에 자신의 몸이 구속되고 전과자로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며, "전쟁으로 피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 당하는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오히려 존중·찬양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인권단체들이 나서 무려 1천1백여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수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연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근에)

클릭! 인권정보자료

에이즈 바이러스는 과학이 아닌 가설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역은이: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퍼낸곳: 휘닉스/ 2003년/ 398쪽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아래 인권모임)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아래 에이즈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며 에이즈 공포로 야기되는 인권침해를 고발한 단행본을 출간했다. 인권모임은 2000년 11월 20일 다음 카페 '에이즈는 없다'를 시작으로 HIV/AIDS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인권모임은 에이즈를 만들어낸 과학자와 제약회사의 행위에 대해 '과학적 사기' 혹은 '과학적 범죄'라고 주장하며, 에이즈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의심케 하는 여러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인권모임은 가설에 불과한 이 주장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정설로 둔갑한 후, 그동안 에이즈 치료라는 미명 하에 여러 사람들이 치료제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 공포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의 인권문제도 파헤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로버트 겔로 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 게다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가 고가의 가격으로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전 세계 GNP 20-30%에 달하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윤창출 구조와 공포심 유발을 통한 사회통제 장치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인권모임은 말한다.

인권모임은 또 이러한 가설을 근거로 한국에서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보균자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실례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일단 보균자로 판명 나면, 당국으로부터 거주·이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당하고 이웃으로부터도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것이다.

에이즈는 없고 다만 편견이 만든 공포와 제약회사의 상술만이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에이즈의 가면을 벗겨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최은아)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정역 5년에 보호감호 5년. 정말 이번만큼은 사회에 나가서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청송보호감호소를 나올 때 제 손에 쥐어져있던 돈은 고작 4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범죄의 유혹을 느낍니다." 한뿐이라도 더 모을 생각에 다친 팔의 치료도 출소 뒤로 미뤘다는 김모 씨는 상태가 악화돼 김스까지 해야 했던 왼쪽 팔을 보여주며 울분을 토해냈다.

사회능력 제거하는 교육·직업훈련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법 1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피감호자들은 보호감호소에 수감되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다는 이유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은 보호감호소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훈련이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능력 제거' 프로그램이라고 맹렬히 비난한다. 사회정착을 위한 밀착훈련은 커녕 기술습득도 되지 않는, 오직 노동력 착취와 시간 때우기를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3년 4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위생비닐장갑 포장 및 개수 세기 △소쿠리 만들기 △열쇠 고리 만들기 등 총 3가지. 일반교도소에 있는 작업의 수가 평균 10여개를 상회하는 것에 비한다면 정말 초라한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하나같이 단순 작업에 불과해 숙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반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통근제도(외부 공장에 출역하는 제도) 역시 청송보호감호소에 존재하지 않는다. 청송보호감호소가 극단적인 오지에 위치해 있다보니 인근에 작업을 하러 나갈 공장도, 작업을 위탁해오는 사업주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피감호자들은 보호감호

소 내의 허름한 공간에 둘러앉아 '무의미한 시간 때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직업훈련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정보화교육을 비롯해 타일, 건축도장, 보일러, 미용 등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10개의 직업훈련이 실시돼 합격률 90%를 자랑하지만 이 역시 사회에 나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도소표' 자격증에 불과하다.

타일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한 출소자는 "평소 하는 훈련이라고 밖에 타일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전부"라며 "시험 보기 이를 전부터 교도관이 가져다 준 도면을 달달달 외우고 가면 대부분 시험에 합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렇게 판 자격증을 갖고 출소 후 막노동판에라도 가면 '교도소표'라며 욕만 잔뜩 먹고 쫓겨난다"며 "그런데도 직업훈련을 받는 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조금이라도 일찍 가출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적업은 보상이 없는 강제노동에 불과

작업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피감호자들에게는 1천4백원에서 많게는 5천8백원의 일당이 '근로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데, 대개는 2천원 가량을 받는다. 1일 최저임금이 1만8천2백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피감호자들이 세 차례의 단식농성을 통해 인상시킨 액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피감호자가 한달 내내 버는 돈은 채 5만원도 넘지 못한다. 때문에 지난 3월엔 근로보상금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소원을 낸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의 근로보상금 제도는 결과적으로 범죄를 국가가 양산하는 체제의 뿌리이고 무보상의 강제노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호감호소 생활을 하다 보면, 저속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호소에서 지급되는 생필품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질도 매우 떨어지다 보니 의약품은 물론이고 내의류와 일용잡화의

구입 역시 피감호자들의 몫이다. 휴지, 운동화, 신문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을 제하다 보면, 결국 출소할 때 주머니에 든 돈은 채 1백만원도 못 된다. '재기'의 가능성도, '정착'의 밀착도 없는 출소자들은 또 다시 '한탕'을 꿈꾸다 어느 순간 보호감호소로 되돌아오곤 하는 것이다.

학사반 운영은 빈 껍데기

그렇다면 교육은 어떨까? 기술도 못 배우고 돈도 못 모으는 형편에서 피감호자들의 '희망'은 '학력취득'으로 출된다. 명목상으로나마 청송보호감호소에는 학사반이 마련돼 있다. 대부분의 피감호자들의 학력이 매우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름만 학사반일 뿐 교육과정이 따로 마련돼있지는 않다. 작업에서 면제시켜주고(근로보상금은 주어짐), 검정·학사고시 등에 합격할 경우 가출소심사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 비치된 책이려곤 90년판 학사공부책 한 질만이 덩그러니 '기증'이란 마크가 찍힌 채 방만한 구석에 박혀있을 뿐이다.

청송보호감호소 역사상 처음으로 감호소 내에서 학사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김모 씨는 "1년 8개월 공부하는 동안 감호소측으로부터 단 한 권의 책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내내 학사반에서 공부했다는 이모 씨 역시 "학사반은 감호소를 선전하기 위한 전리품에 불과할 뿐 실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사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 검정고시를 통과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도 출소 후 아무런 지원프로그램이 없다. '되돌이표'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 지난 8년간 교도소와 보호감호소에서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김모 씨는 출소 후 내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 김 씨는 말한다. 보호감호가 앓아간 것은 단지 감호기간 동안만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이자 전 인생'이라고 말한다. (유해정)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지난 토요일자에 실려야 할 유엔인권위 소식을 필자 사정으로 오늘 실었습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과연 '인권외교'의 철학과 정책이 있는가? 59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의 구두 발언을 들으면서 떠오른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국정부는 회의 개막 후 지금까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항목5), 나라별 인권상황(항목9), 시민·정치적 권리(항목11)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구두 발언을 했다. 양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부실공사'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발언에는 인권의 기본 원칙에 기반한 철학과 정책차원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른바 '국익'을 앞세운 통상외교와 눈치보기 외교에 인권이 뒷전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인종문제 전혀 언급 안해

한국정부의 첫 발언은 지난 3월 24일 인종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발언이 그렇듯, 이 발언도 상당 부분이 인종차별철폐 관련 인권의 기본 원칙과 이미 제출된 인종주의 관련 유엔 보고서를 요약하는 데 할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종주의 퇴치와 관련된 활동을 간단히 소개했다.

현재 인종차별철폐조약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준비중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연 국제연대 간사는 이 발언문을 검토한 후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차별이나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등 인종주의와 관련된 한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서 "국내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적 의지나 관점 없이 그저 듣기 좋은 교과서적 원론만을 나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한국정부는 지난 2001년 더번에서 열린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WCAR)를 "세계공동체가 인종주의와 싸워나가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연대의식을 촉진하는 데 시의 적절하

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더번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정부는 이 행동계획의 핵심 권고사항인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지금까지 수립한 바 없고 수립하고자 시도한 적도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한국 상황에서 인종차별철폐와 중요한 관련을 지닌 이주노동자협약 가입을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기 위한 로마협약을 초대 한국인 재판관을 배출하겠다는 '국익'차원에서 서둘러 서명·비준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수십만 이주노동자와 일본 등 해외과거 한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인권협약은 '이권'에 밀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협약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여 없이 올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정부, 발전권이 원지나 아니

3월 26일에 있었던 발전권에 관한 발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드러났고, 심지어 반인권적 내용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발전권은 경제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다. 전자가 발전권을 고사시켜 인권의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그 중요성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 후자는 발전권의 강화를 통해 불공정한 국제경제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국정부는 남북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국내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 양자를 통한 균형있고 종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타협, 협력 및 이해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개혁을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돌이켜볼 때 "국제공동체의 협력 이외에도 법치, 민주주의, 모범적인 공치(good governance) 등 개별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겉으로는 중립의 명분을 취하는 것이지만, 뒤집어 보면 한국정부가 발전권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역량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한 인권전문가는 "최근 유엔 안팎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경제 세계화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요지의 인권보고서가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인권이 아닌 세계은행과 IMF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 경제위기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있었고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의 후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그러한 현실을 단순히 경제문제로만 볼 뿐 인권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한국정부가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후 내린 권고문을 여전히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 한국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한국의 발전모델이 인권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아동권리위원회도 지적한 바 있다.

인권전문가 없는 인권외교 주무부처

한 인권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는 유엔 인권위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에 인권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인권 마인드가 없거나 부족한 통상전문가나 일반 외교전문가가 인권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권이 항상 통상외교의 장애 아니면 장식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통상외교의 수단으로 주고받기 또는 바꿔치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발언을 볼 때 현 참여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라별 인권상황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한국정부의 구두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 유엔인권위 소식에서 살펴본다. [제네바: 이성훈]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12일(토)

제 23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새 정부의 인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밝힌 '양심수 사면복권과 준법서약서 폐지, 노동부와 공안부문의 분리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한총련 수배자의 선별 불구속 수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사면 제외 방침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확고하게 세워야 할 인권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인식"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 발상 자체를 거둬들일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과거 정권들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대체 입법을 거론해왔고 김대중 정권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사상·양심을 재단하고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과 대동소이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특수 상황이 과대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과거 정권들이 보

수·공안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보수·공안세력에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보수·공안세력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그 법을 통해 억압적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논평>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주장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유서'까지 서슴없이 '대필'하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왜곡이 정확히 '전교조 죽이기'를 겨냥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물론 우리 교육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반인권적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악의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한다.

현재 보수 언론까지 가세해 서 교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제 여교사 진모 씨와 전교조 총남지부의 사과 요구가 과연 잘못된 것이었던가. 진모 씨는 항상적 고용불안과 차별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라는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서 교장과 같은 학교의 교감은 약자인 진모 교사에게 '차 시중'이라는 업무 아닌 업무를 강요했으며, 차 시중을 거부하자 보복적 노동통제를 가한 바 있다. 그러한 부당한 요구와 관행을 비판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일은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일이었다. 나아가 남녀평등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아이들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할 교사로서 그러한 반인권적 관행에 도전하는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러한 정당한 노력을 '협박'으로 매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시켜 전교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호기로 삼고 있다. 이는 전교조의 교육 민주화운동을 통해 흔들리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고, 그를 통해 다시 한번 학교현장을 반인권과 권위주의의 요새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 1인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위계질서야말로 학교현장의 반인권적 관행들에 끈질긴 생명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교육적 실험들에 족쇄를 채우는 장본인이다. 지금 엉뚱하게 전교조를 겨누고 있는 비판의 칼날을 당장 거둬라. 그리고 그 칼날이 겨냥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반인권적 질서와 이를 유지시키려는 수구 기득권세력임을 똑바로 인식하라.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이견을 절충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권의 원칙과 관점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양심수, 한총련 이적규정, 보안관찰법 등 우리 사회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법·제도의 개혁 요구도 함께 포함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억압장치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허혜영]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 9)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항목이어서 가장 많은 수의 인권 NGO의 주목을 받는 의제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1일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구두발언에서 탈북자, 남북 이산가족, 국제형사재판소(ICC), 그리고 200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공동체'(CD) 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정의용 제네바 한국대사는 발언 서두에서 "올해가 세계 인권발전의 이정표인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비엔나 행동계획의 권고에 따라 한국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권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을 단계적·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탈북자 인권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등 북한 관련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과 현실 사이 줄타기 외교 여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정 대사의 발언은 유럽연합이 준비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협력은 '햇볕' 아래에서, 인권은 '그늘' 아래에서 추진하는 이중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전략적'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정부의 깊이와 일관성 없는 인권철학과 정책에서 기인하는 '무전략'이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른바 '할 말은 하고, 다른 것은 달랠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참여정부'의 외교원칙이 인권에서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눈치보는 줄타기 외교'로 전락한 셈이다.

똑같은 문제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관련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정부는 주장과 달리, 10년이 지났지만 비엔나 행동계획의 핵심적 권고사항인 국가적 차원의 인권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은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초대 외교부장관을 지낸 한승주 현 주미대사는 1993년 비엔나 대회에서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성년(come of age)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선언했었지만,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권에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3개 유엔 인권위 정회원국으로 활동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스스로의 자발적 주도로 결의안 한번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의 초라한 인권현실이다.

'인권 현실' 왜곡한 채 '국정홍보'만

지난 7일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에 관한 한국정부의 발언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인권외교는 사라지고 '국정홍보'가 등장한다.

한국정부는 발언에서 2000년 이래의 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과거 비민주적인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된 고문 등 불법적 인권침해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불처벌(impunity)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한국의 인권 현실은 이와 다르다. 고문은 여전히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고, 제2 4·3 민간인 학살 문제는 불처벌은커녕 불인정의 단계도 못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유엔에서 현재 논의중인 '감재실종에 관한 인권협약'에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여한 바도 그다지 없다. 국내 인권현실의 개선에 발맞추어 국제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국내 인권수준에 대한 '홍보'와 '왜곡'의 구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다수결에 떠밀린 인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형제도 폐지 문제에 대한 발언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 외에도 인권에 대한 무지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안보 환경 하에서 예외로 취급된다"고 주장하고 "한국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만 말했다 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못해 감옥에 갇혀있는 1천명이 넘는 양심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문제에 관해서도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이래 집행을 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사회의 모든 집단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이에 관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사형폐지는 인권이 아닌 정치적 문제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주장이다. 즉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할 때까지 그러한 인권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경제와 통상의 '국익'에 의해 발전권과 경제·사회적 권리가 실종되었다면, 이번에는 '국가안보'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시민·정치적 권리가 부정됐다. 이라크전 파병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한국정부가 이번에는 여론을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에서 작년으로 채택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결의안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발언에서는 유엔 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마치 "일부 사람들의 근거가 약한 주장"인 것처럼 오도했다. 한국정부는 인권선진국으로 지칭되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하나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적극적 인정과 사형제도의 폐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지금껏 국민들에게만 선진국 국민답게 행동하기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그랬듯이,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큰 장애는 '국민'이 아닌 '정부'였다.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는 데 오히려 '참여정부'가 장애인 것이 오늘의 뼈아픈 현실인 셈이다. (제네바; 이성훈)

■ 한국정부의 발언문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15일(화)

제 23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1인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호주제나 가족부나 매한가지"

14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서 일인일적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다.

16개 인권·여성·사회단체들과 정당들로 구성된 공동연대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제는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적 명분 하에 모든 여성들을 성차별의 굴레에 굴종시킨 채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가족부는 남성 중심적 현행 호주제의 문제를 상당부분 그대로 발생시킬 것이므로 일인일적제가 가장 적합한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라고 주장했다.

일인일적제란 모든 개인이 '나'를 중심으로 자신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는 하나의 호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남성 가장 중심의 종속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일인일적제의 개인 신분등록표에는 자신의 부모·배우자·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이외의 다른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부와 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가족부는 호주를 없애는 대신 행정편의를 위해 부부의 협의 따라 호적상의 '기준인'을 두도록 하기 때문에, 현행 호주제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동연대의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최현숙 여성위원장은 "부부간 협의든 추천이든,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든 간에 남성이 기준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가족부는 또 다른 가부장적 신분등록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가족부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남편을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이 95%를 넘는다. 또 가족부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혼·재혼·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이 드러나는 만큼, 동성애자·한부모 가정·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불식시키지도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일인일적제가 가족해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은광순 씨는 "일인일적제의 신분등록표를 통해서도 부모·배우자·자녀의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주장은 명분없는 가부장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공동연대는 일인일적제가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확정될 때까지 대국민 홍보와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1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허혜영)

구 재단측 졸업생들, 에바다 학생 폭행

에바다학교 정상화 방해 목적 구재단측 사주로 의심돼

최근 에바다학교가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상화의 발걸음을 조금씩 내딛어 가는 가운데, 구 재단측이 장악하고 있는 농아원 졸업생들이 에바다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에바다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19세)은 지난 12일 밤 9시 45분경, 현재 농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졸업생 최모 군(20세)에 의해 오산터미널 화장실로 끌려간 후, 15차례 정도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모 군에 따르면, 당시 최모 군은 김모 군이 농아원에 오지 않는다면 폭력을 휘둘렀고, 최근 농아원에서 나와 에바다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도 농아원원으로 데려오라고 강요했다. 같은 농아원 졸업생 성모 군(21세)은 김모 군을 처음 오산 터미널로 불러냈으며, 이후 폭행현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밤 11시 30분경 강제로 농아원으로 끌려간 김모 군은 "학교에 가면 죽

는다"는 협박을 계속 받았다. 새벽 0시 5분경 틈을 타 도망쳐 나온 김모 군은 14일 등교해 이 같은 사실을 교사들에게 알렸다. 병원진단 결과, 김모 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바다학교의 권오일 교사에 따르면, 이번 폭행에 가담한 최모 군과 성모 군은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해아래집 침탈과 교사 폭행 사건에도 적극 가담한 바 있다. 권 교사는 "지난 3월이래 농아원을 나와 에바다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8명으로까지 늘어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구 재단측이 졸업생들을 사주해 농아원생들의 이탈을 막고 에바다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모 군은 오늘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폭력사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는 미지수다. (배경내)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 장애여성 선희의 4월

김해공항엔 비가 내리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다.

"내가 가야겠니?"

"응, 언니가 와줬을 좋겠어. 언니가 보고 싶어"

"알았다. 내가 갈게."

난 많은 일들을 뒤로 미루고 황급히 부산으로 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때문에 서울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까르르 넘어갈 듯이 웃던 그녀의 명랑성은 자타가 인정할 만큼 대단했다. 그러던 선희의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울기만 한다.

선희(가명, 척추만곡증, 37세, 그녀에겐 딸 하나와 아들이 있다)는 얼마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비장애남성과 결혼한 선희는 남편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을 했다. 큰딸을 낳을 때에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모험을 해야만 했었다. 그녀의 작은 신체 때문에 태아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폐를 압박하였고, 산달이 가까워지면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다. 결국 10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미리 제왕절개로 큰 딸을 낳았었다. 그랬었는데 또 아들을 낳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건 모험을 하는 것이다.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들을 꼭 낳겠다는 일념뿐인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비장애 남성과 결혼할 때, 시가 쪽에서 많은 질타와 원망들이 이후 그녀에게 모두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기를 쓰면서 아들을 낳겠다는 이유도 시가 쪽으로부터 아들을 낳음으로 인정받겠다는 것만 같았다. 결국 아들은 낳았지만, 그녀의 폐는 무리가 되어 기능이 저하되어 밤에는 산소 호흡기를 꺼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관절염으로 더 외출이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보려는 의지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신감도 상실하고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그녀는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금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선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선희와 같은 모습은 장애여성들 사이에서 쉽게 발견하게 된다. 장애를 가진 몸 때문에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고 가사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선희가 지금 아픈 것은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에 장애여성들이 대부분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장애여성들이 스스로 말할 하게 되면서 그만큼 치유도 빠르게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선희가 회복되길 바란다. 진심으로...

(박영희님은 장애여성공감 대표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1. 양심의 자유, 아직도 갈 길 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총련 수배자 108명 대상 건강 검진 결과 발표...수배자들 평균 1.7개 질병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4.7)/ 사회원로·각계인사 550명, 정부에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 촉구(4.8)/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민변·평화인권연대 등, 양심수 석방 대상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1백여명도 포함시킬 것 촉구(4.10)/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제출...'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이라 주장(4.11)

2. 이런 게 이라크 해방이야?
미군, 바그다드 중심부 진격해 이라크군과 교전 대치...미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한 시간에 1백명씩 병원으로 부상자 밀려들고 의약품 보급마저 끊겨(4.7)/ 미·영 정상,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체제 와해 선언(4.8)/ 미군, 바그다드 사실상 함락...이라크군 저항 거의 없어(4.9)/ 미국,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 착수(4.9)/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 증거 여전히 없다고 밝혀(4.12)/ 미군, 후세인 정권 최후 저항지 티크리트 진입 교전...미군 바그다드 점령 이후 약탈과 환란이 이라크 전역으로 확산되자 국제사회 미군 무책임성 비난(4.13)

3. 반전평화의 불꽃, 꺼뜨릴 수 없다
귀국한 반전평화팀 9인, '한국군 파병 저지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중단' 명동성당 노상농성 돌입(4.9)/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여중생범대위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주최로 시민·학생 5천여명 모인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서 열려...전국 25개 주요도시와 전세계 수십여 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4.12)

4. 기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조선업종 노동자 5명 무리한 1인1조 작업으로 인한 산재로 사망...급속노조, 안전장치 무시하고 노동강도 강화한 사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 규탄(4.7)/ 노무현 대통령, 고용허가제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혀...시범실시안 국회 타결 주문(4.7)/ 서울대 장애인 학생, 교내에서 교육권 보장 요구 1인시위 나서(4.7)/ 전농, 국회 앞서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농성 벌여(4.7)/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인권사회단체, 인권위에 정치적 중재안이 아닌 인권적 원칙에 근거한 권고 내야 한다고 요구(4.8)/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지역 이주노동자 204명 대상 근로·생활실태 조사 결과...입국비용 평균 471만원, 하루 11시간 근무, 월소득 96만원, 4명 중 1명 주당 4차례 이상 야근, 건강·산재보험 혜택 4% 등으로 드러나(4.1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16일(수)
제 23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철도파업, 노동자·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 위원장 천환규)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친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또 14일부터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13명의 철도 해고노동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15일에는 전국궤도노조연대가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벌여왔던 단체협약 협상이 2월 6일 최종 결렬된 후, 철도청의 책임 회피로 6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파업이라는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 관련부처가 진지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한 1인승무제 철회와 인력충원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 민영화법 폐기와 철도 시설-운영 분리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는 철도만의 문제가 아닌,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일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돼 있는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교통부, 법무부, 노동부, 행사부 등의 관계부처 차관과 철도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4일 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업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규정,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과 민주노총은 14일과 15일 각각 성명을 발표, '사회 통합적 노동정책으로 노사관계를 풀어가겠다'던 새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었냐며 비난했다.

또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백성권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

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12월에 행정지도 결정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조정내용이 없었다고 해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조정신청 이후 일정 기간(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는 15일)이 경과했다면, 구체적인 조정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절차를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구체적인 조정'이 되었든 '행정지도'가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1년 11월 1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같은 해 6월에 있었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정기간을 거친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철도 노사양측의 교섭이 오늘 오후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고근예)

< 철도노동자, 왜 파업 준비하나 >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가장 핵심적 요구사항은 바로 부족한 현장 인력의 충원에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철도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2백여 명의 현장 인력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1인 승무제의 비현실성

철도청은 지난 2000년 '1인 승무 계획'에 따라 무려 1,481명이나 되는 인원의 감축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1인 승무제를 사실상 도입하지 못하고, 대

신 그만큼의 인원을 기관사 외의 다른 분야에서 감축해 왔다.

철도노조는 1인 승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외국과는 달리, 애초에 차량 내부의 안전장치 설비 수준이나 선로 및 신호체계의 여건 등 우리 철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1인 승무제는 도입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철도노조는 "현재 기관사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차장이 함께 승차하는 2인 승무제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철도청 스스로도 1인 승무제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으며, 실현되지도 못할 1인 승무 계획에 따라 무분별하게 감축된 1,481명의 인원을 다시 충(2면에 계속)

정부, 또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개월, 지하철은 이제 안전한가. 지난 15일 공공연맹등이 주최한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사회단체, 전문가, 노동자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졸속대응이 또 다른 대형참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구지하철 시민사회단체대책위의 김경민 진상조사단장은 "참사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를 지하철 안전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진상규명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가 만든 8쪽짜리 빈약한 지하철 종합안전대책 문건이 유일한 대책"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 비난했다. 지하철 화재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부른 것은 '불쏘시개'처럼 타 들어간 전동차의 내장재와 방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안전성을 무시한 무리한 인력감축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 제거나 책임자 처벌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동차 내부의 불연재 교체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맹의 황하일 정책국장은 "건교부가 발표한 '불쏘시개' 전동차만 6천3백량에 이르지만, 이를 불연재로 교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지난 달 25일 관계자관회의에서 대구 지하철 전동차 204량 내부를 전면 불연재로 교체한다는 예초의 방침을 변경, 의자·바닥재·통로 연결막만 불연성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경우 화재시 발생하는 총 열량의 25%만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박창화 인천전문대 토목학과 교수는 "전동차를 불연재로 전면교체하지 않는 한, 방재시스템이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해도 대형화재참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대구참사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전동차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력감축도 마찬가지. 도시철도노조 허인 위원장은 "현재 역사당 근무인원 2-3명으로는 매표·순찰·기기 조정 업무에다 종합사령실 내 20개의 시시각각 바뀌는 모니터를 점검하고 불시의 사고에 대처할 수 없으며, 더구나 화재 시 기관사 1명이 화재진압, 사령실과의 교신, 승객도피 지원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1인 승무제 철도와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90년대 중반이래 자동화를 발미로 진행되어 온 인력감축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역시 또 다른 대형참사를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1km 당 근무인원은 43명으로 파리의 78명, 동경의 63명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

허 위원장은 또 "대형참사를 부른 안전설비 미비와 인력감축은 지하철 공사의 안전을 무시한 수익성 중심의 운영에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난사고 책임자 법적 명시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허혜영)

(☞1면에서 계속)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인력감축으로 꼬리 무는 죽음들

그럼에도 철도청은 '공무원 총정원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금까지 부족한 인력을 채우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선로, 차량정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산재 증가라는 짐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왔다. 2001년 36명, 2002년 21명, 올해만 해도 벌써 11명이나 철도노동자들이 사고나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은 철도노동자의 파멸적인 노동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제 지난 3일 선로를 순회하다 과로사의 한 형태인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순천 전기사무소 소속의 고상순 씨(36세)도 무분별한 인력 감축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이 사망 원인이 된 경우다. 규정상으로는 2인 1조로 선로를 순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혼자서 순회하다 아무도 없는 선로변에서 쓰러져 1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결국 죽음에 이른 고 씨의 안타까운 사례는 또다른 철도노동자들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시민 생명 불모로 달리는 철도

2000년 현재 한국 노동자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7.8시간인 데 반해, 철도노동자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63시간에 달하는 현실도 무리한 인력 감축과 무관하지 않다. 열차 승무원이나 선로보수 노동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75시간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과로사의 위험도 높아지고 이와 함께 시민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대구기관차 승무사무소 소속 조달수 씨(45세). 이미 1인 승무제가 도입된 도시통근형 동차를 혼자서 운전해 왔던 조 씨는 올 1월부터 거의 휴일도 없이 일하다 과로사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관사가 운전 중 과로사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철도가 달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찔한 작업환경에 내몰린 선로·고압선 노동자들

더구나 철도청이 경영개선을 명목으로 감축해 온 인력에는 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열차 감시원도 포함돼 있어, 필요한 곳에 열차 감시원이 배치되지 않거나 열차 운행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자리가 대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짧게는 5분, 기차가 다니지 않는 동안 선로 보수나 선로변 고압선 작업을 시급히 끝내야 하는 시설·전기 분야의 노동자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철도청이 추진해 온 외주용역화 역시 통합적 운행 시스템을 붕괴시켜 사고 다발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신태인에서 선로를 보수하던 외주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 숨진 끔찍한 사고가 대표적 경우.

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외주용역화 철회를 요구하는 데에는 이러한 절박한 사정이 깔려있는 것이다.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민간단체의 주된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경우는 정반대다.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인권위의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할 책무를 지고 탄생한 국가기구가 바로 인권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제 19조 8호)을 인권위의 업무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외까지 명시된 이 이례적인 업무를 위해 인권위는 국내협력과를 두고 있다. 국내협력과 감대철 과장은 올해 사업목표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 파트너쉽 구축"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인권단체 실무자와의 정례모임 △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민간단체 프로젝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공동 파트너쉽이 구축되려면 국내협력과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국내협력, 기획·조정하라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곳에서 △침해의 대상을 확인하고 △옹호의 내용을 확정하며 △활동의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위 안의 단순 행정지원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는 사실상 국내협력을 자신의 활동 방식 중 하나로 적극 취해야 한다.

이는 국내협력이 단지 국내협력과만의 업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외적으로 국내협력과는 인권위와 인권단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국내협력에 관한 '기획조정실'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협력과가 인권위 각 부서의 국내협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기획조정하려는 모습을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인권위가 진정 국내협력을 강화하려

면 각 부서별로 국내협력 담당자를 두고, 국내협력과가 중심이 되어 부서별 국내협력 담당자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정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국내협력 기획조정 회의'는 부서별 국내협력 업무를 조정하고 인권단체들과의 협력들을 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협력의 틀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인권현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활동방식으로서의 국내협력은 인권현안이 적극적으로 제기됐을 때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인권단체와의 정례모임, 가능하려면?

국내협력과가 올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인권단체 실무자 커뮤니티'다. 국내협력과 김성희 씨는 "이름이야 어떤 인권단체들과 정기적인 의견교류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국내협력과는 5월 중 첫 모임을 갖고 이후 짝수 달마다 모임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 정례모임을 통해 인권위는 자신의 사업을 브리핑하고, 인권단체들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의제로 올린다. 필요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나 담당 국장도 배석한다.

커뮤니티는 인권단체들이 그 동안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인권위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일부 인권단체들이 배제된 문제와 그 동안 인권위가 보여왔던 폐쇄성·관료성 등에 대해 인권위가 명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한, 인권단체들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현 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공개적인 선언의 형태는 아니지만, 다산인권센터 등도 내부적으로 협력거부의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모든 인권단체들이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위 출범과정의 문제점과 폐쇄성·관료성 등의 지적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애 사무총장은 지난 2

월말 과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장님 인권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과거 문제에 대해 내용적으로 유감표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인권단체와의 관계를 풀고자 하는 인권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와의 관계가 개선된 후라야 커뮤니티는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다. 협력거부 입장을 견지하며 인권위 출범과정과 현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인권단체들의 문제의식을 국내협력과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인권단체를 교육한다고?

'앞으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전제 아래 국내협력과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인권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상 4곳에서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인권위에 대한 이해 △유엔의 활동방식과 국제연대 △인권운동의 역사와 전망 △인권상담을 위한 법률지식 등이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간담회 정도면 되지, 국가인권위가 교육한다고 하면 누가 들으러 가나요?"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단체를 교육하겠다고 나서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2001년 3월 의문사위 주최로 열린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 파출관 대다 위원 초청간담회'는 인권위가 눈여겨볼 만한 행사다. 외국의 인권위원과 활동가들을 짝으로 초청해 그 나라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 강연을 듣는 것은 어떨까? 섭외와 재정의 문제로 인권단체들이 업무를 내지 못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국내협력에 대한 전략적 사고 속에 기획된 것이 아니기에, 올해 국내협력과의 사업은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지금 국내협력과에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17일(목)

제 23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4시경,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이번 결의안은 53개 유엔인권위 위원국의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애초 유럽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결의안 제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표결과정에는 불참했다. 찬성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포함됐고, 반대국에는 중국,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북한정부는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을 허용할 것 △외국인 납치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것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제네바에 위치한 파스로나 이성훈 사무국장에 따르면, 표결에 앞서 중국 대표가 "왜 약소국에 대한 결의안만 계속 제출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북한이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한반도 긴장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대표 역시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악의 축'을 정

당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반대의를 표했다고 이 사무국장은 전했다.

또한 인도 대표는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부당한 내정 간섭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권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으며, 북한 대표는 향후 북한과 유럽연합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은 "제네바 현지의 해외 언론들과 인권단체 대부분은 '왜 지금 북한인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해마다 중국 인권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해 온 미국이 올해는 대중국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반해,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를 후원한 것에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대부분 해외언론과 인권단체들의 관측이라는 것이다. (배경내)

내일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성훈씨의 기고글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새사회연대 '모독' 사과 받아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한 인권단체에 어처구니없는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아래 열린회의) 대표단이 16일 10시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날 25일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새사회연대가 "유명무실한 단체"이며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개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인권단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2면에 계속)

만화사랑방

이동수



평화운동가들 겨는 이스라엘의 총구

이스라엘군, 「국제연대운동」 평화운동가 잇따라 저격

세계의 관심이 이라크에 쏠려있는 사이,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최근 국제 평화운동가들을 잇따라 저격함에 따라 팔레스타인 내 인권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1일 「국제연대운동」(ISM) 소속의 탐 헌달(22)이 이스라엘군 저격수에 의해 머리에 총을 맞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헌달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지난 4일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에 도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저항하는 인간방패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사건 당시 라파 난민캠프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던 헌달은 이스라엘군이 휴장난을 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어린이 3명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것을 목격, 어린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던 중 머리에 총을 맞았다.

<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의 크리스 마르스텐은 16일 기사에서 "당시는 환한 대낮이었고 헌달이 눈에 잘 띄는 밝은 오렌지색의 자켓을 입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저격수로부터 불과 1백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여서 '고의적인 저격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적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독립적인 조사 요구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국제연대운동 소속 평화운동가들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총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속돼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일랜드인 시아움 버틀리(23)가 다리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고, 지난달 16일에는 미국인 레이첼 코리(23)가 한 팔레스타인 가족의 집을 철거하는 이스라엘군에 항의하다 불도저에 깔려 숨졌다. 이 달 5일에는 뉴멕시코주 출신의 브라이언 애버리(24)가 예년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보호하다 불과 50m 거리에서 얼굴에 총을 맞고 중태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레이첼 코리의 죽음은 명백한 살인행위였음이 목격자들과 사진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이스라엘군 조사단은 코리가 "흙더미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불도저 운전병의 눈에 띄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역시 "불법적으로 가자 지구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며 이스라엘군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승인해주는 한편, 그간 발생한 자국민들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배경내)

(1면에서 이어짐)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열린회의 대표단은 이날 10시 강명득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인권위가 소송에서 승리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인권단체를 가차없이 모독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인권위가 △준비서면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면을 작성한 소송담당자 윤모 사무관에 대한 적절한 조

여덟번째 반딧불이

모략당한 이들의 분노의 증언, <내 딸 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황을 독점하다시피 한 CNN은 수많은 오보로 지탄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미디어 전략은 '사실로 치장된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해 상대에게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악마적 힘을 가지고 있다.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내 딸 없이>는 미국의 '미디어 사기극'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는 23일과 24일, 반딧불에서 먼저 선보이게 될 이 영화는 특히 미국 영화를 통한 '아랍인 악마 만들기'의 성공 사례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조목조목 들추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91년 개봉된 미국 영화 <솔로몬의 딸>은 국내에도 출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작품으로, 미국인 베티 마무디가 자신의 경험을 담아 출판한 책을 다시 영화로 만든 휴먼 드라마이다. 베티는 이란 출신의 의사 사예드 보조로그 마무디와 결혼해 이란을 방문한다. 이란에 도착하자 남편은 갑자기 폭군으로 돌변, 그녀에게 이란식 생활을 강요하며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 18개월 이상 시달리다 6살짜리 딸 마탑과 함께 이란 국경을 넘어 도망쳐 자유의 품인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내 딸 없이>는 이러한 내용의 <솔로몬의 딸>이 중상모략임을 입증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사예드와 그 지인들의 증언, 베티의 현재 태도를 통해 감독은 베티가 주장하는 탈출극이 사기라는 걸 증명하는 데 성공한다. 또한 모략당한 이들의 사무치는 분노와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역시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딸>과 같은 거짓이 '결코픈 지지'의 정서적 동인이 되었음을 소리없이 외치고 있다. 7시 30분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상영된다. (김정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이라크 파병 선발대 마침내 출국

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에서 벌어져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한국군 파병 선발대 20명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파병에 항의하던 시위대 사이에서 통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회 각계각층의 파병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병 선발대는 이렇게 이라크를 향해 출국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소속 회원들과 학생·사회단체 활동가 3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국군 파병 선발대 출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 파병 선발대가 출국하는 공항 입구에서 '학살전쟁 파병반대', '대한민국 전범국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다함께' 활동가 김광일 씨는 "정부가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며 이제 파병은 학살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전을 하는데, 전쟁이 끝났다면 왜 파병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씨는 "식민통치를 위해 이라크 민중과 벌이는 미국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파병을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선발대에 포함된 문인숙 간호장교는 "국가를 위해 선발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파병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판단될 것"이라 말해 대조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시위대로 곤혹스러워하는 파병 선발대와 이들을 배웅하러 나온 가족, 그리고 파병을 반

대한 시위대의 모습이 서로 엇갈렸다. 눈물짓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파병반대? 엄마, 이 사람들 왜 여기 있어?"라고 묻는 어린이, "멋지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하며 출국하는 아들의 힘을 북돋우는 어머니, "학살전쟁 파병을 반대한다"며 선발대를 향해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의 고리를 끊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협하는 성폭력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이예자)은 16일 오후 2시,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아래 서울상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99년, 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당시 20세)이 13세부터 7년 동안이나 몇몇 마을 주민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커다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나, 이듬해에도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서울상담소의 활동이 시작됐다.

장명숙 서울상담소 소장은 2002년 한 해 동안의 서울지역 상담 사례를 피해 여성장애인의 학력, 연령, 장애인 등록 시기 등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 소장은 "밝혀진 87건의 피해사건 중 피해자가 무학인 경우가 23건을 차지하는데, 이 경우 사건이 형사 고소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의사표현에서부터 불리함을

파켓을 높이 들어 보이는 시위대가 뒤섞이면서 착잡한 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도 파병을 반대하는 기습시위가 이뤄졌다.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소속 회원들은 오전 8시 30분, 광화문 앞 세종로를 점거하고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범국가가 된 날입니다"라는 현수막을 펼친 채 시위를 벌였고, 12시경에는 종로에서 '파병이 만드는 풍경'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한편, 파병 본대는 이 달 30일과 다음달 14일에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근예)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가 전체 87건 중 77건으로 88.5%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장 소장은 "학력이나 직업의 조건이 나쁜 장애인만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 등록조차 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상담소에조차 접근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추정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450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등록된 장애인인 130만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상담소를 찾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등록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숨겨진 성폭력 피해자의 존재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또 피해 유형에서 강간 비율이 83.9%라는 압도적 수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자행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를 잘 보여준다"면서 "이는 강간 이외의 은폐된 성추행과 성희롱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참가자들(2면에 계속)

2003년 4월 18일(금)

제 23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기획 연재> 소리없는 '시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음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처우에 대한 규정이 단 한 조항도 삽입돼 있지 않다. 피감호자들의 모든 처우는 행형법에 준하도록 돼 있으며,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이란 명칭으로 이름만 달라져 피감호자들의 생활을 옥죄 뿐이다.

청송 제1교도소 바로 옆에 자리잡은 감호소는 '감호소'임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현관이 없다면, 외관상으로 교도소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독거수용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으며, 2평 남짓한 방에 5명이 수감돼 갈증을 자는 경우도 흔하다. 여름엔 습기와 곰팡이에 시달리고 겨울엔 동상과 치질에 노출된다. 선풍기도, 텔레비전도 청송교도소에 설치가 끝난 후에야 들어올 만큼, 기본 시설은 교도소보다도 뒷전이다. 교화와 재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감호소를 지키고 피감호자들을 처우하는 이들 역시 교도소에 상주하는 일반 교도관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 피감호자들은 "우유(교도소의 처우)를 사이다병(보호감호소)에 넣고 사이다(보호감호)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지난 10월 가출소한 김모 씨(49)는 "교도소에서 감호소로 넘어왔을 때 달라진 거라곤 수의색깔이 황토색으로 변한 것뿐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감호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외부교통권의 제한이다. 외부교통권이란 자유권을 박탈당한 수용자가 외부 사회와 접촉·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수용자는 서신, 접견, 귀휴, 출판물 이용 등의 외부교통권을 통해 가족 및 친지들과의 끈을 유

지하고 사회변화를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서신은 검열되고 신문은 교도소 관련 기사라도 나는 날이면 신문은 걸레가 되어 들어온다.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감호소는 서울에서만 꼬박 5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도착할 수 있지만, 집결은 교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크릴판을 사이에 둔 채 10여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족들은 쉽게 면회 올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7백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소에 면회실이 달랑 하나밖에 되지 않는 이유다. 가족이나 친지가 찾아오기 어렵다는 피감호자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담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귀휴'와 '사회견학'은 교도소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귀휴는 사회적응을 위해 일정 기간 수용시설을 벗어나 생활하도록 하는 감옥 안의 휴가와 같은 제도로 외국의 경우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행형법은 귀휴를 가족의 사망, 화갑 등과 같은 경조사와 각종 훈련과 시험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출소 후 사회복지를 돕기 위해 도입된 사회견학 역시 나가 본 피감호자가 손에 꼽힐 지경이다.

결국 엄격히 제한된 가족 및 사회와의 접촉은 가족의 해체는 물론 피감호자들에게 사회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킨다. '사회복귀'란 미명하에 영구적인 피감호자 '사회격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김보영)

(이면에서 이어짐)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확대와 사회 전반에 걸친 예방·치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정 병원조차 시설미비를 이유로 여성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실, 성폭력 피해가 밝혀진 이후에도 성폭력 위험이 존재하는 가정과 지역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여성장애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를 일일이 쫓아다니며 조사에 참여해 왔다는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평생에 처음 맡았다는 경찰에게 어떻게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에 전문적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근예)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철도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정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건강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변 노동위원회, 민교협, 참여연대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구조적 과로'로 올해만 철도노동자들이 무려 12명이나 산재로 사망하는 등 '제도적 타살'을 당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면서 인력 총원이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철도노조가 정당한 쟁의조정절차를 밟았고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총원 요구는 당연한 단체교섭의 대상인 만큼, 공안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노조의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파업의 쟁점이 철도청의 결단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가 제시한 핵심 5대 요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날 교섭에서 철도청은 '기관사 1인승무 계획의 철회'와 '해고자 신규 채용'이라는 다소 진전된 안을 제시했으나, 인력 총원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구체적 해고자 복지방안 등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양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교섭을 재개한다. (배경내)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위에서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사전에 알려진 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국인 북한은 위원국이 아니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표결 전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의안 주요 내용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은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국인 납치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것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다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을 허용할 것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인권위의 공식의제에 포함되었고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북한정부에 대한 압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통 나라별 결의안은 한 국가내의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청되는 경우에 유엔인권위에서 채택한다. 이 제도는 인권의 보편성, 즉 인권이 더 이상 주권국가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8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그 동안 나라별 인권결의안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둘러싸고 유엔 인권위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근의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이번 북한

결의안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악용될까 우려

먼저 정당성의 경우, "왜 지금 북한인가?"라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를 10여년 넘게 취재해 온 <르몽드> 기사는 표결 직전 "통과되리라 본다. 그러나 왜 올해 중국 인권결의안은 없고 대신 북한이 등장했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른바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유럽과 미국 등의 서방국가들이 자신들의 자의적 기준에 비추어 입맛에 맞게 결의안을 채택할 나라들을 선별한다는 주장이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인권외교', 즉 인권을 이른바 '국익'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일례로 "유럽연합은 조시 부시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란에 대해서는 왜 올해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는가?"라며 유럽연합의 '이중잣대' 적용을 지적했다.

게다가 이라크 사태 이후의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악용'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의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한 정부의 대다수 뿐만 아니라 인권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대다수도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구실로 정당화했던 이라크 침공처럼 이번 결의안도 부시 정권에 의해 북한정권 제거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결의안 채택, 실효성 있을까

실효성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일단 북한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 북한

정부는 투표 전 발언에서 "이번 결의안 내용은 조작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전적으로 배격한다"며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유럽연합과의 관계와 유엔인권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대표는 '최근 확대되고 있던 유엔 인권기구와 유럽연합과의 인권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유럽연합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배신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의 한 외교관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며 "그 동안의 관계를 볼 때, 길으로는 부정하지만 결의안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유럽연합과 북한이 최근 형식적인 대화와 협력은 가졌지만, 인권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거의 없었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며 이번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유엔을 통한 국제적 압력이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해 인권위에 참석한 북한인권개선시민연합의 이해영 간사는 "그 동안의 인권침해 규모와 정도를 고려할 때 늦은 감도 있지만 매우 기쁘다"며 "이 결의안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북한 정부는 사전 발언 이외에 이번 결의안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결의안 편파성 비판 목소리

한편,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균형을 상실한 편파적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표결 직전 설명에서 (= 4면에 계속)

(= 3면에서 이어짐) "이번 결의안은 너무 일방적이고 내정간섭으로 비쳐질 정도로 지나쳐서 찬성할 수 없다"며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역효과 불러올 것"

중국은 "최근 북한과 유엔 인권기구 및 유럽연합 사이에 인권분야에서 많은 협력이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비난조의 인권 결의안은 최근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부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쿠바와 시리아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북한 지지 발언을 했다.

이는 찬성표를 던진 나라 가운데 아무도 왜 찬성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과 큰 대조를 이루었다.

인권위 정치화로 공신력 상실 우려

같은 날 북한 이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 버마(미얀마)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반면, 수단과 짐바브웨, 체첸 결의안은 상정되었지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 인권전문가들은 "인권위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공신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나라별 결의안이 인권침해의 심각성보다는 강대국과의 이해관계(체첸의 경우)나 당사국의 정치·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외교력(수단, 짐바브웨의 경우)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중 잣대는 이미 관계가 되어 버렸고 인권이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거나 합리화를 위한 장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 내용에도 문제 있어

한 인권전문가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

구하고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결의안 자체는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결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에는 △권리로서의 발전권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기아와 식량 부족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가 시민·정치적 권리의 부정으로 연결된다는 상호불가분성(indivisibility)의 원칙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화없는 인권은 맹목적이지만 인권없는 평화는 공허하다'는 인권과 평화의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e)의 원칙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북한을 철저히 배제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정부, 무능력 미숙함 드러내

한편, 한국정부는 아무런 공개적 입장 표명없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인권외교에 있어서의 무능력과 미숙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창피함은 둘째치고 결의안에 찬성한 진영과 북한 양측으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게 되었다.

지난 김대중 정부는 작년 유럽연합의 북한결의안 추진에 대해 반대여사를 분명히 밝혔고 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추진을 포기했다. 그러나 올해 노무현 정부는 찬반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묵인했다. 물론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과의 협의는 이라크 침공 이전에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라크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다시 북핵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되는 맥락에서 북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현실적·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 초기의 "반대하지 않지만 찬성에 참여하지는 않겠다"에서 "찬성하지 않지만 반대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로 입장이 바뀐 셈이다. 이에 따라 기권에

서 불참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결의안을 지지한 서방측 외교관들은 대체로 "이해하지만 실망했다"는 반응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 뗏뗏하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제네바 현지의 한 한국 외교관은 표결 후 "아쉽고 부끄러운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현지의 분위기로 볼 때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면 기권표를 행사하고 발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 외교적으로 볼 때 순리였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 관계자는 "애초에 유럽 연합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했을 때 반대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국정부가 내용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자신의 집안일에 당사자는 꿀 먹은 벼어리 마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객들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판이 벌어진 셈이다.

참여 포기한 '참여정부'

이라크 파병결정이 참여정부의 '거꾸로 참여'였다면,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에의 불참은 참여 자체의 포기였다. 인권 이전에 한국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주어진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사태는 일관성있는 철학과 정책에 기반한 장기적 전략 없이 상황 논리와 눈치보기로 점철되어온 한국 인권외교의 현주소이자 예정된 결과였다.

표결이 끝나자 인권위 의장은 물리적으로 자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한국을 무시하듯, 한국의 불참 자체에 대한 언급도 없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4월 16일은 '담당함'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인권외교에 치욕의 날이었다.

(제네바: 이성훈)

① 이번 주 <클릭! 인권정보자료>는 이번 관계상 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삼성 SDI 악명높은 노동탄압, 분신 부를 수도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경 삼성 SDI 공장이 있는 경남 언양의 한 아파트 주변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노동자의 '분신 예고' 유인물이 뿌려졌다. 유인물에는 "명예퇴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휘둘러온 삼성 SDI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으며, '삼성 SDI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을 위해 오는 4월 18일 회사 앞에서 분신을 감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정된 18일, 다행히 분신은 시도되지 않았고 유인물 속 주인공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그저 해프닝으로만 넘길 수는 없다. 삼성의 악명 높은 강제 구조조정과 무노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릴 노동자들은 또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언양 삼성 SDI 공장 앞에서 만난 해고 노동자들은 "삼성의 노동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치를 떨었다. 해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98년이래 삼성 SDI 언양 공장에서 8천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 중 3천5백여 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제 해고됐다. 그리고 그 중 70% 이상은 사내하청 노동자로, 사실상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로 재고용 됐다. 이러한 삼성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음독·투신 자살로까지 몰고 갈 만큼 악랄한 것이었다. <본지 2002년 1월 3일자 참조>

지난 2001년 12월에는 삼성 SDI 언양 공장에서 18년을 근무한 노동자 김명동 씨(당시 43세)가 사측의 강제퇴직 압력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오른 쪽 팔다리가 완전 마비되고 언어능력까지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삼성은 산재처리마저 거부했다.

99년 9월 회사의 감압에 못 이겨 자필 사직서를 쓰고 나온 김모 씨(여, 29세). 93년부터 삼성SDI 언양공장에서 모니터 보정 작업을 해온 김 씨는 98년 사측의 끈질긴 강요와 회유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되었고, 그 무렵 우울증과 함께 걷기 힘들 정도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성은 산재처리느커녕 오히려 "나가라"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차라리 해고시켜 달라"는 요구에도 "해고는 안된다"고 응수했다. 김 씨는 "삼성이 말하는 희망퇴직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김 씨는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갈 수 없을 땐 정말 절망적이다"고 고통스럽게 털어냈다.

이러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부당노동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르게 위해 삼성이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는 것이 바

로 '무노조' 신화다. 언양에서 만난 삼성 SDI 해고노동자들은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악용한 어용노조 선점', '노조설립 지도부에 대한 납치·감금·폭행' 등 온갖 냉혹한 수법이 총동원돼 이루어지고 있다"며 분노를 토했다.

98년 해고된 송수근 씨가 대표적 사례. 당시 삼성 SDI는 노사협의회 노동자 위원장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씨가 구조조정에 반대하자 그를 해고했고, 그 후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그를 직원과 강패를 동원해 납치·감금까지 하며 탄압했다. 노조설립에 뜻을 함께 했던 동료 노동자들 역시 사직을 강요받거나 해외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삼성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송 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두 번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이러한 전근대적 노동탄압에 희생당한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삼성의 노동탄압이 계속되는 한, 18일 예고됐던 분신은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허혜영>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죄 건가

유엔인권위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문제가 북한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의 인권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과 향후 이 결의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 역시 저버릴 수 없다.

유엔이 자국의 국익만을 우선시하는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들만의 외교 각축장으로 전락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인권기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던 유엔인권위가 매우 '정치적'인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다른 여타의 유엔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수단화되어 가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인권위가 개막된 지(=2면에 계속)

(=1면에서 이어짐)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미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이 개시되었음에도 이 문제를 공식적 논의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던 유엔인권위가 유독 북한 인권 결의안만은 기필코 통과시키는 것을 보며, 과연 북한정부는 물론 세계시민들이 이 결의안을 '승고한' 문서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라크가 미국에 의해 불법 점령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다시 한반도를 드리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북한 침략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서가 채택된 것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 그 동안 '악의 축' 운운하며 대북 압박을 가해왔던 미국이 이 결의안을 내세워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이라크전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이 또다시 '해방군'을 자처하며 한반도를 피의 전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법이 과연 있겠는가.

나아가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나 '전쟁의 공포'와 같은 자결권과 평화권에 대해서는 애써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시민·정치적 권리 상황만을 부각시키는, 서구사회의 편향된 인권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안고 있는 식량·에너지 난, 그리고 전쟁의 공포가 북한정부로 하여금 더욱더 체제 수호에 매달리게끔 만들고 그에 따라 시민·정치적 권리 상황도 악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지속적인 봉쇄정책이 북한 인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이게끔 하는 데 기여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7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대북 압박의 협상 수단으로 삼아온 서구국가들이 북한 인민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길을 택한 것은 '인권을 명분으로 인권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결의안 채택의 숨은 공로자 가운데 하나인 국내 일부 북한 인권단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인권단체'임을 자처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해 왔다. 또 이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 인권을 특정한 목적을 겨냥한 정치의 종속물로 전락시키는 단체를 어찌 인권단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진정 그들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원한다면 '정치가 아닌 인권의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인권 운운하며 이득을 쫓아다니는 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문제를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노동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1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외국 노총들과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강제노동 피해자 문제 해결과 ILO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올 6월에 개최되는 ILO 총회 의제로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문제를 상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ILO에서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문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 95년. 그해 일본 오사가 영어특수학교 교사 노조(OFSET)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ILO에 제기하자, 이듬해 'ILO 전

문가위원회'는 이 문제를 강제노동금지 ILO 29호 조약 위반사항으로 결론지었고, 99년에는 강제징용 문제 역시 같은 조약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 정부와 사용자 측의 강력한 반대뿐 아니라, 일본노총의 소극적 자세로 의제 상정이 가로막혀 왔다. 99년 노동자위원회에서 많은 외국 노총들의 지지를 얻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하고자 했을 때는 일본노총의 반대 에 부딪혀야 했다. 격론을 거듭하다 2001년 노동자위원회에서 어렵사리 의제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을 때는 다시 사용자위원회가 (노동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 목록을 그대로 통과시키던) 관례를 뒤집고 상정에 반대했다.

그러다 주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 바로 지난해. 당시 일본노총은 올해 노동자위원회가 의제 상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고, ILO '기준적용위원회' 산하 노동자위원회와 사용자위원회도 다음해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올 6월 ILO 총회에 상정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됐고, 그리하여 올해가 ILO에서의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부장은 "ILO의 핵심 조약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면서 전문가위원회가 무려 6차례나 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중대 문제로 간주한 이 문제를 ILO가 정치적 이유로 다루지 않는다면, ILO의 존재 의미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ILO는 선진국에 의한 조약 위반 사례까지도 다룸으로써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보편적 감시·감독기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제부장은 또 "세계 곳곳에서 무려 분쟁 하의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ILO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의미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ILO가 이러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발도상국의 노동문제만 주로 다루어왔던 ILO의 편향성도 문제이고,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올해라고 해서 특별히 변화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노총 역시 이 문제가 29호 조약 위반임을 명백하지만, ILO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물론 지난해 일본노총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지만, 일본노총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한국 주최측은 일본노총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일본노총은 회의의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약속을 뒤집고 불참 의사를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올해 이 문제가 ILO 총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사용자측은 물론이고 일본노총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배경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접근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이 산재 사전승인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전승인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런 현실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사전승인제도, 보험적용의 장벽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씨도 “산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일용노동자·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알고 있다 해도 해고와 그에 따르는 생계의 위협 때문에 산재신청서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사전승인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 동안 사전승인절차는 산재를 은폐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고, 1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사전승인절차 기간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폐지 요구가 거세다.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제공의 타당성은 사후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평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 산업안전부장은 또 “그 동안 산재승인의 권한을 독점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은 징수업무와 산재에 방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산재노동자들의 원직 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준 산재보험공대위 정책위원도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임금노동자 임금전액 보상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열악한 급여수준도 쟁점이 되었다.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큰 데다,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경우 해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특히 임금평균이 89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산재가

2003년 4월 22일(화)

제 23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발생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산재노동자협의회 회장도 “산재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중이 높아 휴업급여를 모두 치료비로 지출해도 치료비 연체로 퇴원 압박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있다”면서 “휴업급여 하한선을 대폭인상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직장 복귀 법제화 절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일차적인 책임인 만큼, 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산재보험제도가 산재노동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른 재활 프로그램 제공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백만여 명에 이르는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혜영)

여덟번째 반딧불이

-미리 보는 제7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내 딸 없이>

때 : 4월 23, 24일 (수·목)

장소 : 광화문 아트큐브

시간 : 저녁 7시 30분 (1회 상영)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인권에 관한 단상(斷想)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인권의 역사는 불과 20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의 인권수준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자들은 소외계층의 인권 요구 때문에 못 살겠잖아도 항상 불합식적으로 충고를 주려는 사들임에 들떠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 그 자체가 그들의 인권을 넘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뿐이다.

인권운동은 인권이 필요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인권이 필요없는 사회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구상에 압제와 전쟁이 존재하는 한, 반목과 적대가 존재하는 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과 착취가 존재하는 한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다. 압제와 전쟁, 계급과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그렇게 쉽게 도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평화와 행복이 보장되는, 인권이 충만한 사회를 향한 그 길은 멀고 험난하다. 하지만 가야할 길은 가야 한다. 현재의 역사단계에서 우리는, 험한 비탈길을 오르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정상에 올라 잠시 희열을 즐기는 등산가처럼, 인권의 확대를 위한 힘든 투쟁의 대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무장이 필요하듯이, 인권이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의 각성과 진출이다.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 자체가 인권운동이다.

인권운동은 인권운동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동운동을 포함한 모든 진보운동은 그 자체가 바로 인권운동이다.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존재하는 한 노동자에게는 인권이 없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일방적 통제가 존재하는 한 학생의 인권은 없다. 사법기관에 의한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수형자에 대한 강제와 통제와 감시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인권은 없다. 억압과 착취, 압제와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몸부림은 그 자체가 인권운동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7일 결국 이라크에 파병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유린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전세계 반전평화 애호세력의 공격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강제하는 이라크의 평화는 그 자체가 이라크 민중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파병에 반대한다. 머지 않은 장래에 파병을 결정한 국회와 정부의 관련자들을 국제사회에서 전범으로 처벌하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인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가.

(이창호님은 경성대학교 법학 교수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1. 한반도 인권과 평화로 가는 길은 어디에?

유엔아동기금 평양사무소 리처드 브라이들 대표, “북 어린이가 7만 명 영양실조, 인도적 지원 없으면 죽게 될 것”(4.16) / 미국, “북 핵 계획 폐기 때 체제보장·경제지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53개 위원국 중 찬성 28개국, 반대·기권 24개국·한국 불참(4.16)

2. 기차도 안전하게 철길을 달리고 싶다!

정부,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방침 밝혀(4.14) / 서울 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6개 궤도노조로 구성된 ‘전국 궤도노조연대회의’, 철도파업지지와 공동투쟁선언(4.15)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민변노동위원회·민교협·참여연대 등 51개 사회단체,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4.17) / 철도노조, 잠정합의안 가결로 파업 철회...인력충원·‘1인승무’ 폐지·손배취하·해고자 기능직 채용, 구조개혁 이견 불써 남아(4.20)

3. 끝내, 한국군은 이라크로 떠났다

미국, 이라크 마지막 저항거점 티크리트 장악(4.14) / 전 유엔사찰단원,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전 대량살상 무기 보유의혹 증거들 근거 없다”(4.14) / 유엔 서아시아경제사회이사회, “이라크 침략 아랍경제에 4천억달러 손실과 200만명 일자리 앗아가는 효과 낼 것”(4.14) / 이라크 시아파, 임시정부 구성 첫 회의 날 대규모 반미시위...미국 주도 회의 참가 거부(4.15) / 이라크 파병, 선발대 20여명 인천국제공항 출국...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4.17)

4. 노조탄압의 리스트는 이제 그만!

대우자판 노조, 조합원 성향분석하고 조직적인 노조 탈퇴 작업 시도해온 사실 보여주는 회사 문건 공개(4.17) / 노동부, 대우자판 부당노동 특별조사(4.19)

5. 기타

‘일인일직 실현 공동연대’ 발족...호주제나 가족부나 매한가지(4.14) / 공공연맹,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어(4.15) / 중소기업대표 50여명, 고용허가제 촉구 기자회견(4.15) /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총련 수배학생 가족 만나...수배해제 검찰과 협의 검토(4.15) →정재욱 한총련 의장, 한총련 관련 김·경에 공개대화 요청(4.17)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마련’ 토론회(4.16) / 양대노총, 외국 노총들과 국제 심포지엄...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문제 ILO에서 해결하자”(4.17) / 재미학자 이도영 박사,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 민간인 대량학살 현장 사진 공개(4.17) / 서울지법, 경찰로부터 과잉 신체수색 당한 여성노조원에게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여성단체, “인권권 과소평가” 반발(4.1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사북항쟁 23년 '폭동' 멩에 벗어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 23주년 기념식 열어

"지옥이었어.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벌렁거리서 말이 안 나와. 하루에 일곱 번씩 (조사실로) 끌려가 맞고, 두 번씩은 까무라치곤 했었다니까. 고무호수로 때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다 붓고... 어휴, 말도 못해." 주름진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짓는 김본년 씨(69)는 80년 사북의 봄을 이렇게 떠올린다.

사북항쟁 23주년을 맞은 4월 22일. 하지만 지금까지도 80년 4월의 사북은 '무지렁이들의 폭동', '술취한 광부들의 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 민중항쟁이 있기 한 달여 전인 이날, 강원도 사북의 광부들과 가족 6천여 명이 어용노조의 퇴진과 노조 직선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벌였던 사북노동항쟁. 그러나 이 항쟁은 경찰과의 투석전, (어용이었던) 노조지부장 부인 린치사건을 전면에 내세운 언론과 신군부에 의해 '난동', '폭동'으로 규정됐다.

당시 주동자로 몰렸던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그 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말도 못한 채 20여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다 다큐멘터리 <먼지, 사북을 묻다> (감독 이미영)의 제작과정을 통해 비로소 말문을 열고 서로를 다시 묶어 세우기 시작했다. 당시 주동자로 몰린 사람은 모두 81명이었지만, 연락이 닿은 30여명만이 모여 2001년 9월 '사북노동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꾸리고 매년 사북에서 기념식을 갖고 있다.

이날 10시 30분, 항쟁 23주년을 기념해 추진위와 강원도 지역단체가 함께 마련한 광복 행진과 기념식에서 이원갑 씨(80년 당시 반(反) 어용노조추진위원장 후보, 현 추진위 위원장)는 "땀흘린

만큼 대가를 받고 인간 대접받으며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폭도로 매도당했다"며, "사북의 노동항쟁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리에 함께 한 추진위 회원들도 하나같이 20여년간의 고통을 호소하며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강윤호 씨(56)는 "노동운동을 폭도라고 끌어들여 패면, 누가 노동운동을 하겠냐"며 "20년 동안 손가락질 받으며 직장도 못 얻고 고생해 왔는데, 이제라도 똑같은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했다"는 강

씨는 "탄광에서 쓰던 폭발물을 보관하던 무기고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13개월이나 복역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군에 내 이름을 알려 준 사람도 고문에 못 이겨서 그랬노라고 작년에 무릎 꿇고 울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털어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사북항쟁 참가자 5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제출한 명예회복 청원에 대한 답변 역시 기약이 없는 상태다. 추진위는 사북항쟁 참가자들의 정당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고근예)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최근 보성초등학교 사건 이후 비정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국의 비정규 교사들이 부동노동행위 중단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 전국의 비정규 교사 443인이 참여했다. 비정규 교사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집합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에서 비정규 교사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를 시작하거나 부당한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차별, 보험적용 제외, 연가 불인정 등 각종 차별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열정과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비정규 교사들을 끊임없이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 교사들은 △근로계

약서 작성 의무화 △실질적 신분보장책 마련 △퇴직금과 방중 월급 지급 △비정규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2년째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다는 김모 교사는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진모 씨가 결국 사직하기에 이르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비정규 교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현실을 올바르게 전달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며 이번 선언이 나오게 된 직접적 계기를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들은 최근 몇 년간 급증추세에 있는 2만여 비정규 교사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교육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제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도 별 계획이다. (배경내)

2003년 4월 23일(수)

제 23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2월 19일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이 같은 진정 사건은 인권침해조사국의 경우 21건, 차별조사국의 경우 15건으로 모두 3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검찰이 고소, 진정사건에 대해 불기소, 불입건, 혐의 없음, 내사 종결, 공람 종결(검토 종결) 등의 처분을 내리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주의의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런 진정 사건을 조사해야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인권위를 깊은 고민에 빠뜨린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 여하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진정이 붓물 터지듯 밀려들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도 인권위원들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 지난해 5월 제17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신동운 인권위원이 이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래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권위의 방침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4월 14일에 열린 제39차 전원위원회에서도 끝내 인권위의 방침은 정해지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논의가 연기된 것이다.

신동운 위원,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는 인권위가 구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서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동운 위원은 위 법 조문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인권위가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국가기관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논의를 촉발시켰다.

법무부등, "인권위 조사는 바람직안해"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인권위는 4개 법률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중 한국헌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하 또는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법무부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제35조에 규정된 인권위원회의 한계, 타국가기관(검찰)의 고유권한 침해 및 그 기능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조사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가 모든 국가기관의 감독기관화되는 문제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업무 폭주 우려로 의견 합치 못 봐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3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소수 위원들만 각하 또는 이송 의견에 찬성을 표했다. 반면, 다수의 위원들은 신 위원의 주장대로 불기소처분이 국가의 행정처분과 같은 것이고, 법 규정에 명시적인 금지가 없는 한 원론적으로는 수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경우 그러잖아도 업무가 폭주하는 인권위 현실상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전원위원회에서의 의견 합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문가들, "인권위가 검찰 통제해야"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가인권위가 검찰 불기소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대)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인 불공정 불기소 처분을 인권위가 목살하는 것은 행정추구권과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일종의 차별행위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통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조사를 통해 기소 권고를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중요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검찰의 내사 종결이나 공람 종결도 현행법상 통제가 안되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준 변호사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견제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권위가 조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다른 법률가들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인권위가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고, 각하된 사건들을 모아 법무부에 정책제고를 하여 검찰 통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나름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재정신청 대상을 유신시대 이전처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등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억울함 풀어줘야

주요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인의 입장에서 인권위가 이러한 진정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 전원위원회가 다시 열리기 전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별반 없는 현실에서 인권위가 간접적으로라도 검찰 기소권에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인권위가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오는 27일 열리는 제40차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박래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끈질김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비정규직공대위,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0여 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국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느티 나무 카페에서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 환경, 보건의료, 교육,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올 6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올 7월 전면 시행될 계획에 있다. 그 동안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각계 각층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전문업종에 관한 파견업무 확대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허용,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교육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파괴 등의 문제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이 야기할 재앙으로 꼽히고 있다.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기본권 박탈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와 이 법의 전면적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환경문제를 지적한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환경규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환경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규제없이 마구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최인순 집행위원장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보다는 상업적 민간의료에 기대어 있는 우리의료현실을 설명하면서, 이윤 추구를 최대로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모든 투자가 집중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더욱 더 열악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민대책위는 “민중의 권리는 박탈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밝히고,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2003년 4월 24일(목)

제 23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26일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청와대 정책실 면담, 5월과 6월 전국 규모의 상경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고근예)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해야

이달말께 새 정부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사·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미결수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은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제외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3일 (2면에 계속)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또다시 참석자들의 반론에 부딪혀 기구의 설립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11년만에 처음으로 아동권 이행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환영과 기대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또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박경서 상임위원은 “정부가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회의에 참석했고 후속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벤트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로 축사를 대신했다. 지난 2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양희 교수(성균관대 아동학)도 “아동권 기구가 한시적이거나 전시용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아동권 이행기구를 △대통령 직속 △민간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행정 부처 내부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대부분은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는 정부의 아동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해 기구의 설립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김선민 인권연구담당관은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 상임활동가도 “아동관련 정책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구를 만든다면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겠느냐”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충분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아동을 권리 주체라기보다는 보호·관리의 객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동관련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입법 조정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은 아동권 이행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의 김학기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다만 “모든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안으로 만들겠다”는 말로 논의 내용을 대신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가진 제대로 된 아동권 이행 기구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영원)

(1면에서 계속) 사면·복권 계획에 실망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이미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252명의 병역거부 양심수가 제외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전제한 뒤, 병역거부 양심수를 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반대한 국방부를 비판했다 (배경내)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7회 인권영화제,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

미국이 아프간을 침략한 2001년 11월, 마자르에서 미군은 탈레반 포로 8천여 명을 이송하고 있었다. 이 중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넘겨지는 사람들을 제외한 약 4천명은 3백km 떨어진 감옥으로 옮겨지는 도중이었다. 그러나 도착한 포로는 3천여 명뿐. 나머지 1천여 명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다음 달 23일-28일 개최되는 7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아프간 학살 Afghan Massacre>은 이 내막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독일 감독 제이미 도란은 당시 포로였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미군의 포로 학살을 충격적으로 고발한다. 독일에서 방송되자 미국이 즉각 이 영화가 거짓말투성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작품은 미국의 전쟁 범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이 외에도 미국의 전쟁광기를 드러내는 여러 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숨겨진 전쟁 Hidden War>은 걸프전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전쟁 수행의 음모를 낱알이 드러내고 있다. 작품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과연 미국의 대 이라크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나라는 의문과 왜 미국이 집요하게 후세인을 타도하려 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일었던 걸프전 신드롬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논증하고 있다.

미국 극좌파 학생운동이었던 ‘웨더맨 Weather Man’의 활동을 통해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웨더 언더그라운드 Weather Underground>는 전쟁으로 치닫는 미국의 국가폭력의 잔인한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미국 좌파 학생운동의 한 분파였던 ‘웨더맨’은 베트남의 피비린내가 전세계에 진동하던 6, 70년대 ‘전쟁을 여기에서’라는 구호 아래 미 정부를 상대로 폭력혁명을 주도했다. 이 활동으로 75년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수감 중인 티모시 레리를 비롯해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이 작품은 ‘폭력’혁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미국 정부가 휘두른 ‘국가 폭력’을 적나라하게 일깨워주는 영화이다. 당시 미 정부는 베트남전을 수행하면서 국내 반전·민중 운동을 무참히 ‘총살’하고 있었다. 영화는 이에 맞선 이들의 폭력투쟁이 중동 젊은이들의 자살공격과 다를 바 없는 처참한 항거였다는 뼈아픈 자각으로 이끌고 있다. (김정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25일(금)

제 23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 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군대내 가혹행위가 한 이등병을 투신자살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밝혀냈다.

24일 인권위는 2001년 2월 신병 위로휴가를 나온 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모 이병(사망 당시 22세)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이 이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지휘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 인권위가 결정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이 이병의 아버지(53세)가 2001년 11월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육군본부에서는 이 이병의 사망을 '자해자살'로 판정했으나, 이 이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군내 가혹행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10월 육군에 입대, 같은 해 12월 육군 모부대에 배속된 이 이병은 이듬해 2월 16일 자살하기까지 군내에서 선임병과 지휘관으로부터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려왔다. 이 이병은 복장준비가 늦다는 이유로 선임병에게 전두화를 신은 발로 복부를 폭행당한 바 있고, 휴가를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선임병에게 머리를 2회 구타당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작전장교였던 윤모 소령은 이 이병에게 폭행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진술서 작성을 강요, 이 이병이 이를 거부하자 군용차량 페타이어(무게 26Kg)를 목에 씌운 채 두 시간 동안 연병장을 돌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훈육의 한계를 넘어선 지휘관의 과도한 기함과 선임병의 따돌림이 이 이병에게 견디기 어려운 절망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끝내 자살이라는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윤모 소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 병영생활 부적응자의 적응력을 높이고 각종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군 사망사고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권고키로 했다.

"범죄사실 밝히고도 왜 고발 안하나"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

의회'(군가협) 주종우 회장은 "군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인권위가 밝혀낸 것은 의미있다"면서도 "인권위가 범죄행위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가해자를 직접 고발하지 않고 단지 수사만 의뢰한 것은 상당히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공정성이 의심되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인 것이다. 반면, 인권위가 가해자를 직접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경우, 이들 기관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 회장은 또 "국방부장관에게 낸 제도 개선 권고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반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성역화면(=2면에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역은이: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3년/ 239쪽

2001년 8월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구성한 지문날인반대연대가 그간 활동의 결과물을 모아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주민등록증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다양한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부터 사실상 강제 실시되어 왔던 지문날인제도는 무려 27년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다 1997년 주민등록법 9차 개정 때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으로 지문이 처음 등장한다. 그 후 1999년 10차 개정 때에는 지문을 주민등록증에 삽입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렇게 지문날인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안전'과 '행정편의'를 앞세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는 지문날인제도가 불순자 색출, 범죄자 검거, 신원 확인 등에 유용하다고 역설하지만,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연간 범죄건수를 150만건으로 했을 경우 경찰이 지문확인을 의뢰하는 건수는 전체 범죄수의 1.56%에 불과하며 그나마 신원을 확인한 경우도 0.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문날인반대연대가 공식 집계한 지문날인 거부자는 2천9명. 그동안 지문날인 반대운동은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확보 운동 △운전면허시험 지문날인 관행 폐지 △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백서는 지문날인 거부자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차별을 감수한 채 지문날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최은아)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피감호자 황폐화 초래'

지난해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역사에서 전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세 차례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청송2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갈망했지만, 이것이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우선 '가출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감호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 법원에서 부과되지만, 보호감호의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7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감호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감호자들은 감호집행 개시 후 1년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는다.

하지만 가출소의 심사 및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산하의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이며, 이러한 '심판'은 피감호자들로부터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고무줄 심사'라 불리며 오랜 기간 불만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회보호위원회가 객관적 심사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절도는 3-4년, 강도는 5년, 기타 범죄는 6년 이상이라는 공식을 세워놓고 께맛 추가식 가출소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예방을 받기로 피감호자들의 가출소를 엄격히 제한하기도 하며, 장기수용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가족이 없는 피감호자들의 경우는 보호자, 취업예정지, 보증인 등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감옥의 연장인 감호소 생활 속에 가출소가 유일한 '희망'이 돼버린 피감호자들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기 위해 감호소의 비인격적 처우에 입을 다물고 심지어 비굴한 야청을 일삼거나 주위 동료를 고자질하기도 한다. 지난 3월에 가출소한 김모 씨는 "감호소에서 배운 것은 '어떻게 하면 나만 살아남느냐'였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도 없는 학사반에 들어가려는 이유도 바로 가출소 때문이다. 가출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가출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독일과 비교한다면 부끄럽지만 한 대목이다.

이렇듯 내용도 정확도 없이 집행되는 보호감호의 실태는 피감호자의 몸은 물론 마음과 정신까지 황폐화시킨다. 피감호자들의 대부분은 보호감호가 그들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한 또 다른 감옥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감호소의 많은 규칙들과 처우들도 자신들의 재활과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불만과 원망 속에서 과반수가 넘는 피감호자들은 자살을 생각한다.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상습범

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사회보호법의 목적이 과연 제대로 성취되고 있는지 이제는 되짚어봐야 할 때다. (김보영)

(=1면에서 이어짐)군대 내에서 발생한 억울한 죽음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 사법제도의 개선,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등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인권위가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향후 인권위가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할 의견서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이 진정된 지 무려 1년 반이 지나야 인권위 결정이 나온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슷한 시기 인권위에 진정된 40여건의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인권위의 빠른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인권위는 조사관 수 부족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9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군 사망사건은 총 877건, 이 중 자살로 처리된 사건은 380건에 이른다. (배경내)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사회당(대표 김영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죄에 지지를 보내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범"이라고 주장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은 전범재판기구인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오감포 수석검사에게 보낸 기소 신청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에 찬성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시와 블레어의 침략전쟁을 용이하게 한 점', 그리고 '민간인 학살, 비군사시설 파괴 행위 등 전쟁범죄에 동원될 우려가 있는 국군을 파병하도록 하여 전범 범행수단을 제공하려는 점' 등을 들어 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태훈 사회당 당원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신청하는 것은 한국이 전범 국가가 된 부끄러운 실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이 전쟁에 동참하는 범죄 행위임을 잊지 않고 역사에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에는 민주노동당에서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존 하워드 호주 수상을 전쟁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약은 '침략범죄'를 정의하는 데 합의하지 못해, '침략범죄'에 관한 규정을 7년간 유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설령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라고 할지라도(현재 미국은 비당사국이다) '침략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 역시 한국군이 실제 민간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26일(토)

제 23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철야농성

노예처럼 부려먹던 용역업체, 하루아침에 일터 빼앗아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한가로운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대공원, 그 한편에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대공원 30여명의 환경미화 용역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해고에 항의하며 관리사무소 앞에 천막을 세우고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대공원 개원 이래 십 수년간 이곳에서 일해 온 5-60대 노동자들이 철야농성까지 감행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조 민병환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퇴근 무렵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대공원 환경팀장으로부터 "(새 용역업체로) 대원관리(주)가 선정되었으니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가 접수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보니 이미 51명의 다른 외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노조 조합원들이 30여명의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21년 동안 대공원 환경미화 노동자로 근무해 온 윤종금 씨는 "오래 근무한 혜택도 하나 없이 21년을 참고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분노는 말로 다 못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대원관리, 노동자들 노예처럼 부려먹어

이번 사태는 조달청이 2003년 대공원 환경미화 용역업체로 대원관리를 선정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지난 24일 대공원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대원관리가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대원관리는 지난 2002년 웅비환경(주)이 새 용역업체로 낙찰되기 전까지 15년간을 대공원과 청소용역계약을 맺어왔던 회

사다. 이 회사는 각종 비리와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노동자들과 심각한 갈등관계에 놓여있다. 대부분 10년에서 20년동안을 대공원에서 근무해 온 이들 노동자들은 "대원관

<논평> 새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새 정부의 인권의지를 보여줄 첫 양심수 석방이 이 달 말 단행된다고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1,418명의 시국·공안사범이 사면·복권돼 외형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특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45명 '양심수' 가운데 기결수로만 한정해 고작 13명을 내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 각계가 나서서 해결을 요구한 176명에 달하는 한총련 수배자들에게 대한 수배해제 조치는 제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천명이 넘는 병역 거부 양심수의 가석방 문제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은 결코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빛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선적으로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여 왔던 것이고, 그를 통해 정부의 인권개선 의지를 가늠하고는 했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단행되는 첫 특사 방침은 권위주의 시대의 악법과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특사 방침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인 수구·공안세력과의 타협 끝에 선택된 '악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수구·공안의 권력구조를 개혁하리라는 믿음으로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가 역대 대통령처럼 개혁의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치는 님은 길을 걸어가리라는 예상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과 생존권 투쟁마저도 불법시하는 각종 노동법의 개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인권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을 복역한 병역거부 양심수와 미결수들을 포함한 양심수 석방, 전면적 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길 요구한다. 그것만이 개혁세력의 지지에 힘입어 수구·공안세력의 저항과 공격을 물리치고 민주와 인권 개혁의 길을 열어제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구·공안세력과의 타협으로는 국민적 지지만 잃을 뿐이다.

리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십 수년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표현했다. 명절도 없이 한 달에 2천밖에 못 쉬면서 분노처럼 같은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 고작 60여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임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똑같이 일하면서도 10여만원이 적은 임금을 받았고, 비수기에는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2001년 (=2면에 계속)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그 동안 전교조와 학부모, 인권·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 반대운동이 학생 거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2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아래 희망)과 <전국민주중고등학교생연합>은 그 동안 오프라인 조직과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모은 NEIS 학생 동의거부서 1천7백여 장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전달했다.

희망의 정혜규 간사는 "NEIS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도둑질해 온 교육부와 NEIS에 학생들이 직접 반대운동을 표명한 것 자체가 의미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M용지 15쪽 분량으로 'NEIS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작, 이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 학생들까지 직접 나서 NEIS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강행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정 간사는 "NEIS를 시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단 강행부터 나서는 반대를 막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편 오는 28일 인권위는 4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NEIS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빠르면 다음주 초에 NEIS에 대한 인권위 의견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내)

(비면에서 이어짐)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상 결과 임금인상과 주1회 유급휴일을 따냈다. 그러나 대원관리는 그 해 12월 31일 대공원과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52명 조합원들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리

하고 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다음날부터 대공원에서 25일간의 힘겨운 농성을 벌인 끝에 2002년 새 용역업체로 낙찰된 웅비환경으로부터 고용승계를 따낼 수 있었다.

대원관리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97년에는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문서를 위조, 임금을 빼돌려 온 것이 밝혀져 이 회사 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빼돌린 임금은 92년부터 99년까지 총 55회, 1억5천1백여 만원에 달한다.

조달청, 문제 많은 회사 왜 선정했나

노동자들은 "과거 임금탈취나 부당해고 등으로 대원관리가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조달청이 왜 대원관리를 선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민병환 지부장은 "노동자들이 대원관리 선정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조달청은 '이 회사가 소송계류 중에 있고 회사대표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이는 적격심사기준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직 최저낙찰제만 적용해 대원관리를 선정했다"고 비난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박명석 사무처장도 "대원관리가 노무관리에서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공원측과 대원관리가 결탁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2002년 한 해만 용역

업체를 잠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002년 용역업체로 낙찰된 웅비환경 회장이 노조 대표와의 면담에서 "노조를 해체하면 임금을 100% 인상해주겠다"는 제안과 동시에 "대공원 측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말을 흘린 점이 의혹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당시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을 전제로 노조활동 중단에 합의한 바 있다. 더구나 현재 대원관리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하면 17명에 한해 고용해줄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95년 대원관리의 관리직으로 재직했던 김 모씨가 지난 달 26일 노조에게 대공원 관리들과 대원관리의 비리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김 모씨에 따르면, 대원관리측은 생일이나 나들이, 명절 때마다 그에게 대공원 관리들에게 흰 봉투를 전달해 했다. 또 그는 "근무 안 하는 사람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사실을 대공원 측에서 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수시로 봉투를 전달해 했다"고 진술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근거들을 들어 이번 용역업체 입찰에서 대공원측이 대원관리에게 입찰 기준가를 흘림으로써 대원관리가 선정되도록 도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30여명의 서울대공원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대공원 측이 직접 고용하거나 대원관리가 조건 없이 100% 고용승계하고 2002년에 인상된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허혜영)

◎ '59차 유엔인권위 소식'을 다음 화요일자에 옮겨실는다. 다음 기사에서는 25일 폐막된 유엔인권위 회의를 종합적으로 되돌아본다.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첫 번째 워크숍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 발표주제

- 사회보호법에 관한 쟁점들 : 민변 이상희 변호사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쓴소리: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
- 사회보호법 실태조사 내용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 날짜 : 4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 · 국가인권위세신윤위한열린회의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02-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통한 절규

20살 꽃다운 나이... 동성애자 차별없는 세상 먼저 찾아가

한 동성애자가 20살 꽃다운 삶을 마감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이었던 윤모 씨가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것.

27일, 윤 씨의 빈소가 차려진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에서 만난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 회원들은 지난 밤 이미 소식을 접하고 밤새 잠을 못 이뤘는지 모두들 까칠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막 20대의 문턱에 도달한 윤 씨의 옛뎌 보이는 영정을 대하자마자, 이들은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

동인련 회원들, 영정 앞에서 오열

회원 배모 씨는 "언제까지 동성애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돼야 하느냐"며 흐느꼈다. 파리해진 이들의 얼굴에는 어린 한 후배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를 죽음으로 내몬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후배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 한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인지 이들의 등은 더욱 서럽게 출렁였다.

특히 26일 오후 3시께 윤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정윤 대표는 차분하게 회원들을 다독이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정 대표는 "윤 씨는 지난해 말부터 동인련 게시판에 좋아하던 시조를 올리고 행사에도 가끔씩 참여하기 시작했었다"며 "얼마 전부터는 활동에도 좀더 활발히 참여하고 늘 밝은 표정이어서 자살할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차가운 시신이 된 채 누워있는 윤 씨의 곁에는 24일자로 작성된 여러 장의

유서와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윤 씨가 자살을 차분히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유서에 죽을 택한 안타까운 사연 담겨

유서에는 온갖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한 동성애자의 애끓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윤 씨는 "죽은 뒤엔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은 동성애자다라구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아요"라며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윤 씨는 또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남뉘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비인류적인지..."라며 동성애자를 죄악시하고 소외시켜 결국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분노를 토해냈다. 가톨릭 신자이기도 했던 윤 씨는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하느님의 자녀'로도 받아들이주지 않는 보수 기독교단체들에 대해 동성애자를 죄악시키는 것이야말로 '반성경적'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럼에도 윤 씨는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동인련에 기증했던 십자가와 성모상을 잘 간직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하느님께서 동인련에 축복을 내려주소서"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자살 시도 안해 본 동성애자 없을 것"

한편, 윤 씨의 소식을 접한 여성 동성애자인 박수진 씨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자살을 '선택'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동성애자들 중에 한두 번쯤 자살 시도 안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

2003년 4월 29일(화)

제 23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라고 말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주위에 의논할 사람도 하나 없는데다 동성애자임이 알려질 경우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공포에 짓눌려 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성 정체성을 자각한 뒤 자신을 혐오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구조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씨는 또 "동성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자임이 드러날 경우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전학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허다하다"며 "심지어 아웃팅(본인의 동의없이 동성애자임을 폭로하는 행위) 위협을 당해 돈까지 빼앗겨도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 역시 "윤 씨가 지난해 자의로 커밍아웃한 뒤 많이 힘들어 고등학교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차별철폐 위해 애써줘요"

윤 씨는 동인련 선배들에게 "형, 누나들의 수고가 다음 세대의 동성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마세요"라며 동성애자 차별 철폐를 위해 계속 힘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 씨가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차별받지 않고 떨지 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8일 장례를 마친 동인련은 윤 씨의 죽음을 한 개인의 죽음으로 덮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 추모 사업과 함께 동성애자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인권·사회단체들도 윤 씨의 죽음을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로 규정,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배경내)

[알림]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샵이 오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열립니다.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반전평화수업, 심판대에서 내려라!

반전평화 수업이 '반미사상 교육'이라 이념적 덧칠이 씌워진 채 심판대에 올려졌다. 심판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반전평화 수업이 아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학생 시절의 나 역시 주입식 교육, 동원 교육의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반감은 누구 못지 않다. 솔하게 반공을 소재로 글짓기와 포스터 그리기를 해야 했던 기억은 그야말로 악몽이다. 서울을 비롯한 남쪽 땅을 물로 휩쓸어버릴 거라며 금강산댐 건설을 규탄하기 위해 전교생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머리에 띠 두르고 집회를 했던 장면은 씁쓸한 코미디였다.

그러나 오늘날 반전평화 수업을 흠집 내는 데 핏대 올리고 있는 이들이 진정 일방적 주입식 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오는 일방적인 반공 친미 교육에 대해서는 한마디 문제제기 않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스스로 그러한 권위주의적 교육의 전달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들이 왜 유독 반전평화 수업에만 두 눈 부릅 뜨는 것인가?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우방국이라고 줄곧 가르쳐왔던 미국이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명백한 침략국 가입을 아이들이 직시하게 되는 것에 지레 겁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인데..."라며 집짓 아이들을 걱정하는 체 한다. 그러나 아무리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도 현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거니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세상을 판단할 정도로 실제 '미성숙'하지도 않다.

이쯤에서 우리 솔직해지자. 오늘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반전평화 수업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아닌가.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침략해도 용인되는 현실이야말로 아이들을 멍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옳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지지해야 한다고, 즉 힘센 자에게는 굴종하는 것이 살아남는 처세법이라고 가르치는 이 현실이야말로 아이들을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내가 아는 한 초등학교 교사는 평소엔 아이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라크 전쟁을 보며 너무 난감하던 차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이라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선물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 이 '반전평화수업' 때문에 교육청 지시에 따라 교장 앞에 불러 가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인권과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들이 휴지조각처럼 취급되는 현실에 과연 교육이 침묵해야 하는가. 그러한 교육은 '죽은 교육'에 다름 아니다. '정치 중립'이란 이름으로 죽은 교육을 요구하지 말라. 진실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악육강식이 판치는 세상부터 바꿀 일이다. (이주영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1. 이 악물려 일했더니 몸만 만신창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28명, 근골격계 산재요양 승인 받아(4.21) /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사전승인 절차 없어야"(4.21) /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과, "산재장해자 77.3%가 무직상태"(4.22) / 한국경총,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발(4.23) / 노동부, 산재보험 가입 기피 사업장에 직권 가입 조치키로(4.23)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실태조사 결과, "건설일용직 65%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시달려"...20.4%만이 산재보험 적용받아(4.28)

2. 경제자유구역법, "게 쇠거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 결성... "경제자유구역법, 노동권·환경·교육·보건의료 파괴 등 인권재앙 부를 것"이라 경고(4.23) / 학생·노동자 500여명,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및 행진 벌여(4.26)

3. NEIS 강행 명분, 폭폭 숨었다!
경기도 모 여교 교감, NEIS 입력거부 교사 2명에 발길질(4.21) / 교육부, NEIS 홍보 가정통신문 16개 교육청에 배포(4.25) / NEIS 반대운동 학생들 직접 나서... 학생단체들, 1천7백여 학생 동의거부서 국가인권위에 전달(4.25) /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학부모 51.8%가 NEIS 들은 적 없고 8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높다"고 답해(4.26) / 국가인권위 전위원회에서 NEIS 인권침해 여부 논의... 전교조, NEIS 폐기 촉구 청와대 앞 한시농성 돌입(4.28)

4. 휴탕물 교육현장 만드는 건 정말 누구?
전국 비정규직 교사 443인,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차별철폐 촉구 선언(4.22) / 교육부, 교육현장 갈등해결 위해 학교·교육청별 '학교분쟁조정기구' 설치키로(4.25) / 교육부, '반미수업' 실태조사 벌이기로... 시·도 교육청에 '교과의 교육 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규정 엄격 적용 주문(4.25) / 한빛고 학생 200여명, 현 이사진 퇴진과 학교 정상화 요구하며 무기한 등교거부 투쟁 돌입(4.28)

5. 기타
사북항쟁 23주년... 폭동으로 매도당해 온 사북항쟁 명예 회복돼야(4.22) / 국가인권위, "군대내 가혹행위 이등병 투신자살 원인"... 가혹행위 혐의 지휘관 수사외(4.24) /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들 '고용승계'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4.25) / 비닐집 거주 남매 화재 참사... 부모 일 나간 사이 오빠 숨지고 동생 화상(4.28) / 전국 운송하역노조 화물트럭 20여대, 경유세 인하·지입제 폐지·노동3권 보장 요구하며 고속도로에서 저속운행 시위(4.28) / 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지회 삼영현장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저지른 ㈜삼영 노동부에 고소(4.28)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59차 유엔인권위가 6주간 일정을 마치 고 지난 25일 막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번 회기에 모두 86개의 결의안과 18 개의 결정을 채택했다. 양적 측면에서는 예년과 같은 높은 '생산성'을 보였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함께 다량의 '불량품'도 만들어 냈다는 게 대다수 인권단체의 평가다. 전반적으로 작년 인권위가 9.11과 미국의 '부제'로 '순항'했다면, 올해는 회기 중 발생한 미·영의 이라크 침공과 미국의 복귀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다.

“인권위, 정치흥정 장소로 전락” 평가

폐막식 직후 대다수의 국제인권단체 들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고 인권 위 의 미래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당수의 단체들이 ‘인권위가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치적 담합 과 흥정 장소로 전락했다’는 요지의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폐막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인권연합(FIDH)의 앙트완느 메델린 씨는 “인권위는 무역 박람회로 전락했고 인권은 정치적 고려와 ‘국익’에 따라 사고 파는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인권단체들은 올해 다시 위원국 지위를 회복한 미국의 오만과 횡포를 강력 비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는 폐막 성명에서 “미국은 석연치 않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체첸 결 의안 공동제출자 참여를 기피하고, 중국결의안을 포기했다”며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미국은 나아가 자국에 불리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침해에 관한 논의를 정치력을 동원해 차단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이나 특히 18세 이하 아동의 사형문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을 보였다.

미국은 또 발전권과 경제·사회적 권 리에 관해서도 ‘각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또는 ‘경제적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 기존 국제인

권법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또 과거에는 표 대결없이 합의로 채택 되던 많은 결의안들이 올해는 표결에 부처지는 경우가 많았고 서방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대결분위가 더욱 고조됐다. 기본적으로 정권안보에 집착하는 인권후진국들의 방어적 ‘집단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미국의 ‘막 가파식’ 행동에 대한 반작용에서 기인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제네바의 한 인권전문가는 “예년에 비해 ‘내 멋대로’ 식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은 유엔현장을 무시한 이라크 침공의 여파”라며 “최고 규범인 유엔헌장이 정치·군사 논리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현실에서 국제인 권법이 지녔던 규범적 구속력은 약화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지향 관련 결의안, ‘질식사’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위 사상 최초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이 브라질에 의해 제출됐다. 유럽연합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은 이 결의안은 그러나 이슬람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표결에 부처지지 못한 채 시간부족으로 폐기됐다. 인권의 보편성과 피해자의 존엄성이 종교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부 국가들의 정치 ‘공작’에 의해 ‘질식사’당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한국정부, 사형폐지 결의안에 반대

국내 인권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형폐지에 관한 결의안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찬성 24, 반대 18, 기권 10, 불참 1로 채택되었다. 유럽연합과 동유럽,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미국과 대다수의 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잘 모르거나 애매하면 기권 또는 불참(북한결의안의 경우) 하던 관행과 달리, 한국정부는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사형문제에서는 ‘인권후진국’과 입장을 같이했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 기존의 쿠바,

민주주의공고공화국, 부룬디, 버마, 이스라엘 이외에 북한,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이 새로 추가됐고 수단, 짐바브웨, 체첸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라크 침공후 인권문제 안 다루기로

이라크 결의안의 경우, 지금 상태를 ‘무정부 아니면 점령국의 통치 상태로 볼 것인가’, ‘과거뿐 아니라 3월 21일 침공이후 발생한 인권침해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 인권침해만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결의안은 채택됐다. 법적 논란이 결국 정치적 힘에 의해 ‘해소’됐고 이에 항의하여 7개국이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미·영의 침공과 관련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세션에 반대했던 대다수 서방국가들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정부도 이에 동조했다.

아쉬움 속 긍정적 열매도 일부 열려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권위에서 긍정적 성과라고 부를 만한 진전이 몇몇 영역에서 있었다. 예를 들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조약에 따른 개인청원을 가능케 하는 선택 의정서에 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설립 △불처벌 문제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연구실 시 스타테리즘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에 관한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조사연구 △난민과 망명신청자의 보호에 관한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조사연구 보고서 준비 등이 있다.

위원국 자격 논란 거세질 듯

한편, 서지오 드 벨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폐막 연설에서 다시 인권위 위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앞으로 후보국가의 자격 논란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향후 인권위 위원국으로 선출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심 인권조약 비준과 국가보 고서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을 들고 있다. 이 기준이 엄격 적용될 경우, 기존의 인권침해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한국 역시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바; 이성훈)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4월 30일(수)

제 23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노무현정부의 첫 양심수 사면이 우려 대로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자로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감 중이던 기결 양심수 13명이 잔형 집행이 면제돼 29일 오후 5시께 전국 교도소에서 풀려나 자유를 되찾았다. 풀려난 양심수에는 민혁당 사건의 김경환·임태열·하영욱 씨, 간경화로 옥중투병 생활을 해 온 영남위원회 사건의 박경순 씨,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 씨 등이 포함됐다.

구미유학생간첩사건의 강용주 씨, 외국인간첩사건의 정수일 씨(간수) 등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있던 39명은 잔형이 면제되고 복권됐으며, 징감득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선교유예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916명은 형선교실효·복권됐다. 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규현 신부 등 공민권 행사를 제한당해 왔던 432명도 복권됐다.

그러나 ‘대대적’ 사면이라는 포장을 뜯어보면, 지극히 실망스러운 ‘선별’ 사면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인권단체들의 평가다. 무엇보다 풀려난 양심수는 불과 13명에 그친 반면, 시국사건 관련 미결수 32명과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에 있기 때문. 또한 한총련 수배자 176명을 비롯한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도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다.

사면·복권 내용이 발표되자 천주교인 권위원회 등 16개 인권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

민모임> 역시 “이번 사면은 기대했던 바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고, 민가협은 “불완전한 사면”이라 평가했다.

특히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공동 집행위원장인 한홍구 교수는 “불과 1%에 불과한 양심수가 석방되었을 뿐”이라며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양심수를 가두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왔던 국방부가 병역거부 양심수의 사면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며 “국방부는 인권단체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결수 가운데 유일하게 석방되지 못한 이석기 씨(민혁당 사건)의 누나

이경진 씨의 분노는 더욱 컸다. 이 씨는 “암투병중인 팔순 노모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먹여보겠다며 차가운 노상에서 1인시위까지 벌여왔다”면서 “석기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떠나 인륜마저 저버리는 행위”라며 울부짖었다. 특히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이 “그 동안 ‘관결문 임 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석기 씨 등을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씨는 “이미 11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있는 양심수나 생활까지 파탄난 가족들 앞에 판결문의 잉크를 운운하는 것이 말이냐 되냐”며 분노했다.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하영욱 씨의 부인 김소중 씨도 “4년만에 아빠를 만난 두 딸이 이가 될 듯이 기뻐한다”고 전하면서도 “남편이나 나나 나오지 못한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이제 나온 사람들이 양심수 석방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내) →사면·복권 명단은 2면에

“동성애자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

33개 인권사회단체,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성명

인권·사회단체들이 며칠 전 자살한 동성애자 윤모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민변, 보건의원단체연합, 한국성평등상담소 등 3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면서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또 “윤 씨의 죽음은 차가운 편견과 멸시, 소외와 차별의 방벽 속에 갇혀있는 이 땅 모든 동성애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

다”면서 동성애자들을 자살이라는 막대한 선택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폭력을 비판했다. 나아가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일부 기독교단체들과 언론에 대해서는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인권적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나”며 되물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윤 씨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외로움 속에 방황하고, 손목을 긋고 줄에 목을 매다 는 동성애자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며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가장해 동성애자들을 끊임없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부당한 편견과 차별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숍>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적극 적인 인권옹호 기구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아래 열린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숍>이 그것. 밀려드는 진정사건과 눈앞의 실무 처리에 급급해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던 인권위를 보다 못해, 인권단체들이 먼저 전략적인 고민에 나선 것이다.

29일 낮 4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회의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와 함께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제로 첫 번째 워크숍(아래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표방했던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월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태스크포스팀은 '5월 실태조사, 6-7월 연구, 8-9월 청문회' 등과 같은 단선적인 일정만 내놓고 있을 뿐, 전략적인 사고를 담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호법과 같은 반인권 법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지지여론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려는 어떠한 구체적인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사회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은데도, 태스크포스팀이 지금과 같이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활동만을 계획한다면 이후 사회보호법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의 결정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권단체들의 경고가 이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범용 활동가는 "사회보호법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하는 것

은 국민들에게 사회보호법의 실상을 고 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청문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사회보호법의 문제와 대응계획에 대한 수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 역시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 그리고 과거 정치권력의 보호감호처분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보호법 폐지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계획중인 실

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태 범죄의 발생 이유에서부터 감호처분에 처해지기까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관한 조사와 연구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초 참석을 약속했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유현 위원이 워크숍 시작 30분전에 불참을 통보, 유위원을 대신해 참석한 인권위 실무담당자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위상이 인권사안에 대한 '조언·자문기구의 위상'인지, '스스로 활동과 운영을 책임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임무까지 수행하는 위상'인지를 둘러싸고 인권위 실무자와 인권단체 사이에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인권사안에 대한 조언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태스크포스팀의 위상이라면, 인권위가 기존에 취해 왔던 인권현안 대응 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태스크포스팀의 위상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인권위에 보낼 계획이다. (고근에)

주요 사면·복권자 명단

■ 잔형집행면제(석방) 13명 : 강성철(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장), 김강일(전국철거민대책위), 김경환(전 <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김대원(전국대, 한총련 밀입북 사건), 김해신(범정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박용진(민주노동당 강북을 위원장), 손준혁(한총련 6기 의장), 양승종(강원지역 민중대회 폭력사건), 유병권(한총련), 이창호(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임태일(민혁당 사건), 하영옥(민혁당 사건)

■ 가석방·형집행정지 상태에서의 잔형집행면제·복권 39명 : 강용주(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강제우(일명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한상(전국사회보험 노조위원장), 정수일(일명 '간수', 외국인간첩사건),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홍준표(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 황인오(중부지역당 사건) 등

■ 선고유예·집행유예 상태에서의 형선고실효·복권 916명 : 고남권(대우차 정리해고 특위 위원장), 박창균(범민련 남측본부 간사), 윤여창(한총련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이현수(범민련 남측본부 재정위원장), 이흥우(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갑득(현대차 노조위원장), 정주여(롯데호텔 노조위원장), 황민호(전국의료보험노조 위원장) 등

■ 형선고실효 24명 : 장평기(진보정치연합 사건) 등
 ■ 자격정지 상태에서의 복권 432명 : 단병호(민주노동당 위원장), 문규현(신부, 8·15통일대축전 참가), 문성현(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정대연(영남위원회 사건), 황대권(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해설>

- 잔형집행면제: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는 것. 사면된 형에 대해서는 재집행 못함.
-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 즉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

인권하루소식

MAN RIGHTS DAILY NEWS

인권하루소식

2003년 5월

(제 2327호 ~ 제 2347호)

